정책연구 2018_03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노영순 ·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 구 책 임 노 영 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책 임 이 상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자 문 위 원 김 대 호 (제주 소도리네트워크 대표)
김 두 철 (일본 오카야마대 교수)
김 양 식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김 창 주 (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김 형 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
남 승 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
이 지 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장)
박 희 용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혜 경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연구기획팀장)
연구심의위원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연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서 문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와 지역은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인구감소·고령화와 같은 인구·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경기침체와 경제재구조화로 인한 기능쇠퇴로 쇠락과 축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균형발전이 국가적인 목표와 과제가 되고 있으며, 문화도시 선정·지원, 도시재생뉴딜 등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고자 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제는 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산, 경쟁력과 한계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연구가 선행될 때 지역은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학'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학은 '정책'보다는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학문으로서 '지역학' 또한 그 의미가 큽니다만, 지역주민과 밀착하고 공공정책과 결합되어 실천력을 확보한다면 지역학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가 광의적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이며, 지역학이 지역민들의 삶과 생활양식을 기록·연구하는 것이라면, '문화' 혹은 '문화정책'과 지역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쇠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지역학의 역할, 그리고 지역학과 문화정책이 결합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발굴은 물론, 지역학 진흥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 지역의 위기 : 쇠퇴의 현실화와 소멸의 위협

○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인구사회적 변화,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쇠퇴, 경제·산업 기능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은 사회·공간적으로 위기에 직면함.

○ 도시쇠퇴(Urban Decline), 도시축소(Urban Shrinkage)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2014)는 일본을 사례로 지방의 경제와 고용의 기초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이른바 지방이 소멸과정을 들어섰다고 진단함.

□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의미

○ 지역쇠퇴·축소·소멸이라는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음.

- 첫째, 쇠퇴, 축소 혹은 소멸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자산 또한 동시에 소실될 위기에 처하게 됨. 문화정체성과 문화경관이 훼손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은 어렵거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음. 따라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라도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되어온 지역의 생활문화 양식, 문화자산 및 경관을 기록,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산은 지역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재창출해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동력이 될 것임.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 지역재생(regional regeneration) 등 일련의 지역 및 장소 활성화와 발전전략은 대체로 지역의 '문화'를 매개로 추진되어왔음.

□ **'지역학'과 '문화정책'간의 관계 설정 필요**

○ 지역의 '쇠퇴'와 '재생'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보전, 전통 및 역사문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 그리고 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 및 연구를 지칭하는 '지역학'(地域學) 혹은 '지역연구'(地域硏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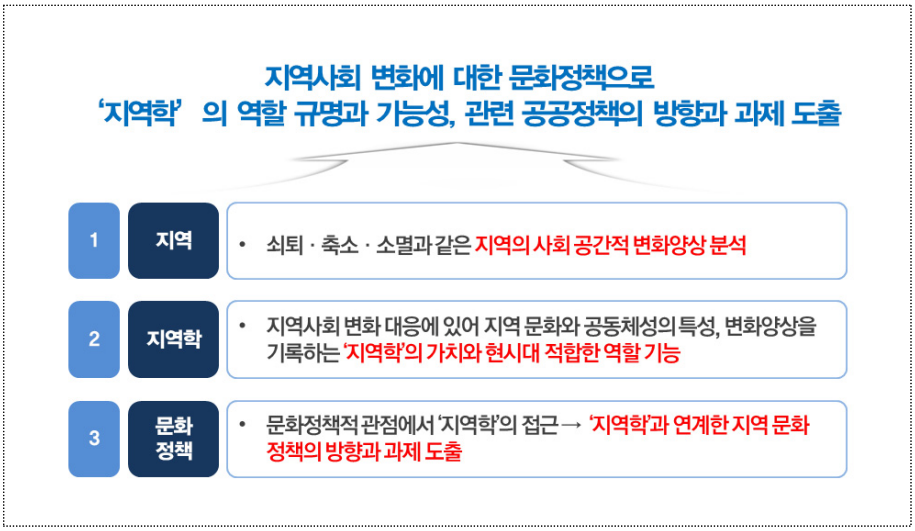
○ 하지만 지역학의 기능과 활용에 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화정책(cultural policies)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지역쇠퇴, 축소 및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며 현재 지역문화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지역문화정책 방향 정립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발굴·보전, 지역문화 정체성 정립을 위한 지역학의 역할과 이의 진흥에 관한 정책연구가 요구됨.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구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의 쇠퇴, 축소 및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활용, 나아가 지역문화 진흥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역학'의 역할 규명과 가능성, 그리고 관련 공공정책의 방향과 과제도출에 그 목적을 둠.

- 첫째, 쇠퇴(recession)·축소(shrinkage)·소멸(extinction)과 같은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함.
- 둘째, 이러한 사회·공간적 변화 양상의 대응에 있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성의 특성과 변화양상을 기록하는 '지역학'의 가치와 현 시대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
- 셋째, (지역)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학'을 접근하여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연구목적 〉

다. 연구 내용

■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방안**

▷ 지역의 인구사회학적/기능적 변화

▷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지역쇠퇴, 지방소멸 등)

▷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극복방안

■ **지역위기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접근방향**

▷ 지역학의 개념 및 접근방법

▷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

■ **우리나라 지역학의 추진현황 및 제약요인**

▷ 지역학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 지역학 활성화의 제약요인

■ **지역위기에 대응한 '지역학' 사례 분석**

▷ 국외 사례 (일본사례)

▷ 국내 사례

■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

가. 지역의 위기와 이의 대응

○ 지역의 변화와 위기 현상은 비단 국지적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임.

○ 과거 지역변화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과소지역의 출현과 지역 간 격차 심화라고 한다면, 현 시점 혹은 미래에 전개될 지역의 변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은 농촌과 도시의 구분 없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위기는 해당 지역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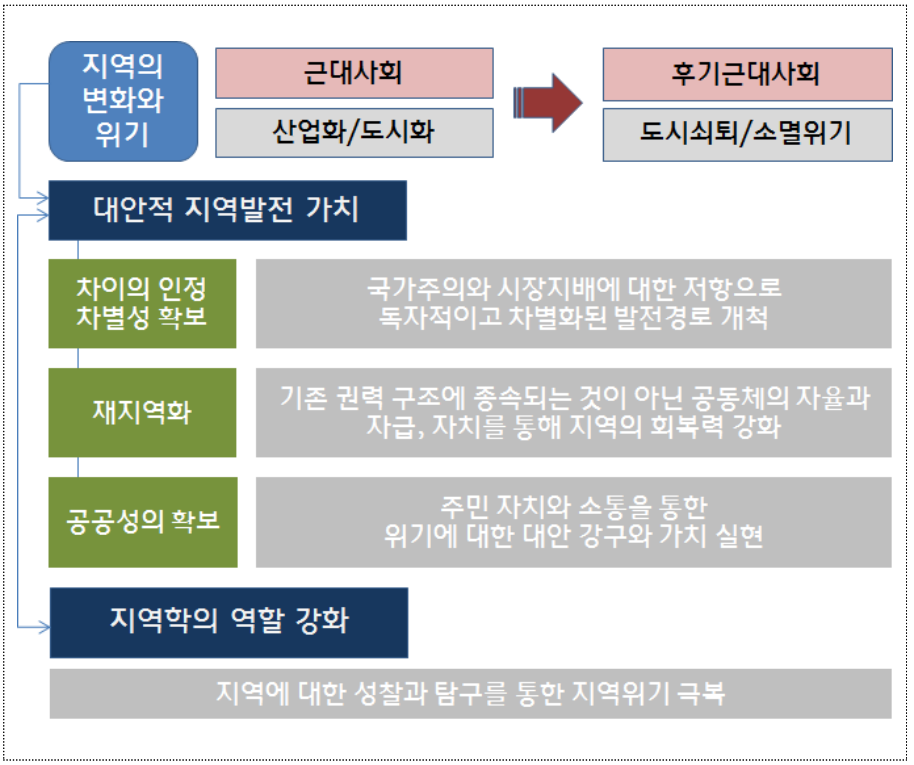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각종 논의를 정리하여 대안적 지역발전의 가치를 ①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 ② 재지역화(relocalization) ③ 공공성의 확보로 개념화함.

나. 지역학 :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

○ 대안적 지역발전에 대한 가치 실현은 지역에 대한 성찰, 지역을 둘러싼 제반 환경 및 주민들의 삶에 대한 탐구로부터 비롯될 것임.

- 지역학이 일상 생활권을 지역 주도의 주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문화는 이러한 지역학의 핵심적 탐구 대상임과 동시에 지역학에 실천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학의 역할 〉

3.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현실

가. 지역학의 새로운 접근 : 미래지향·참여·실천적 지역학

○ 지금까지의 지역학은 활발한 활동과 이에 따른 높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학문적 접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회고적인 접근으로 인해 대중 친화적이지 않고 지역현안 대응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앞으로 지향해야할 지역학의 접근방향은 역사·지리·문화·경제 등 다분야 간의 융합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지역학'을 지향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①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③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이 미래 지역학이 지향해야 할 접근방법이며,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혹은 문화권 중심의 대지역연구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혹은 생활권 단위의 소지역연구 또한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나. 지역학 관련 기관 현황,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

○ 200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0년대 들어서 관련 기관이 급증하는 추세임.

- 주요 활동의 경우, 기존에는 학술 연구 중심으로 지역학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아카이빙'과 지역학 연구서 발간, 학술행사 개최, 지역학 강좌와 총서 발간, 구술사·해설사 등 지역학 인력 양성 관련 사업도 진행되는 등 활동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음.

○ 지역학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불안정한 조직과 예산 제약에 관한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전담 인력의 문제로, 전문적인 연구인력 양성과 함께 구술사, 해설사 등과 같이 주민·공동체 참여를 지원할 인력의 확보도 요구되므로, 지역학과 지역 내 일자리·일거리 창출을 연계한 인력수급 모델 개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역학과 관련 사업을 둘러싼 협력과 연대가 부족하므로, 지역학 관련 기관 및 주체들이 상호 교류·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지역학 교류 및 정보플랫폼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미래지향·참여·실천적인 지역학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특히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학의 향후 방향,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

4.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실천 사례

가. 국외 사례 분석 결과 : 일본 지역학

〈 일본 지역학 연구의 특징과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배경	○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지역쇠퇴와 공동체성의 훼손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전국적 확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구분	내용
	• 이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성의 회복과 내생적 주민조직의 재편이 필요했으며,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
목적	○ 지방 또는 지역이 보유한 지혜를 주민들로부터 발굴하고 지역만들기 등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 지역의 쇠퇴와 연계한 지역 만들기와 재생 • 생애학습의 측면에서 사람 만들기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자원의 활용
주요 내용	(중앙정부) 학술적 지원 혹은 지역 재생과 관련된 연관사업 지원 (지자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지역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역학 결합 • 주민조직 중심의 마을조사 및 관련 사업 추진 • 구술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 • 동네박물관(에코뮤지엄)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마을주민 및 방문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국내 사례 분석 결과 : 아래로부터의 지역연구와 문화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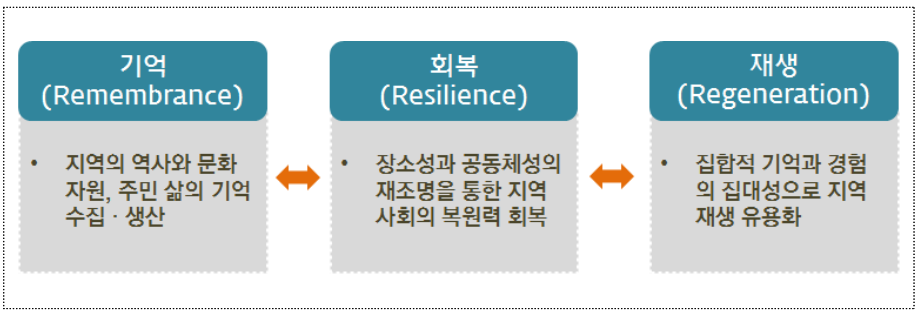
〈 사례별 특징과 주요 내용 〉

구분	배경	목적	주요내용	시사점
제주 특별 자치도	• 원주민들의 노령화와 감소 • 국내외 방문객과 외지인 정착인수의 급증. 이에 따른 '제주다움'의 소실 위기	• '제주다운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한 주민 참여형 지역학 연구 추진	• 주민 중심의 마을 구술사 양성 • 마을기록화 사업 (구술, GIS 등 다양한 분석 기법 활용)	• 주민 간 친밀성 확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미래비전 설계 • 조직 및 예산 확보, 인력 확충,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충청 북도	• 달천 유역의 쇠퇴 (인구감소) •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문화 등 지역의 고유성 훼손	• 달천과 주변 지역에 내재된 가치 발굴 및 창의적 콘텐츠 발굴	• 달천 유역의 역사 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 • 지역학과 문화예술의 결합 • 지역 언론과의 연계로 지역사회 관심 유도	•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인 참여형 지역학 프로젝트 • 달천유역 지자체간 협력 및 발전 모색 • 단발성 프로젝트로서의 사업 한계(제도 구축 및 지원 필요)
전라 북도 전주시	• 도시화로 인한 마을의 역사·문화 소실 위기 •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성 제기	• 주민 참여형 마을기록과 이를 활용한 마을발전 사업 추진	• 구술과 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을술사' 양성 • 마을미니박물관 (에코뮤지엄) 구축 등 마을관광사업 추진	• 민관, 주민 협력형 지역학 모델 구축 • 지역 '미래유산'의 가치 재조명 •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기반 구축 필요

5. 지역 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① 기억(Remembrance) ② 회복(Resilience) ③ 재생(Regeneration) 등 '3R'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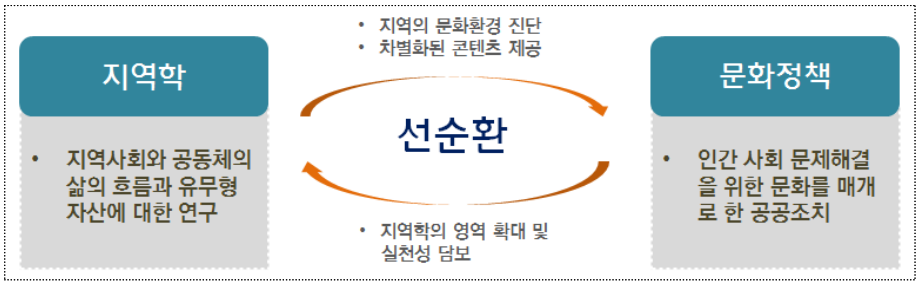
- 기억(Remembrance) : 지역쇠퇴 혹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역사,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발굴·계승하고 미래로 전승함을 의미
- 회복(Resilience) : 지역학은 지역의 장소성과 공동체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축소되고 교란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되찾는데 기여
- 재생(Regeneration) : 지역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기억과 경험을 집대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지역쇠퇴 시대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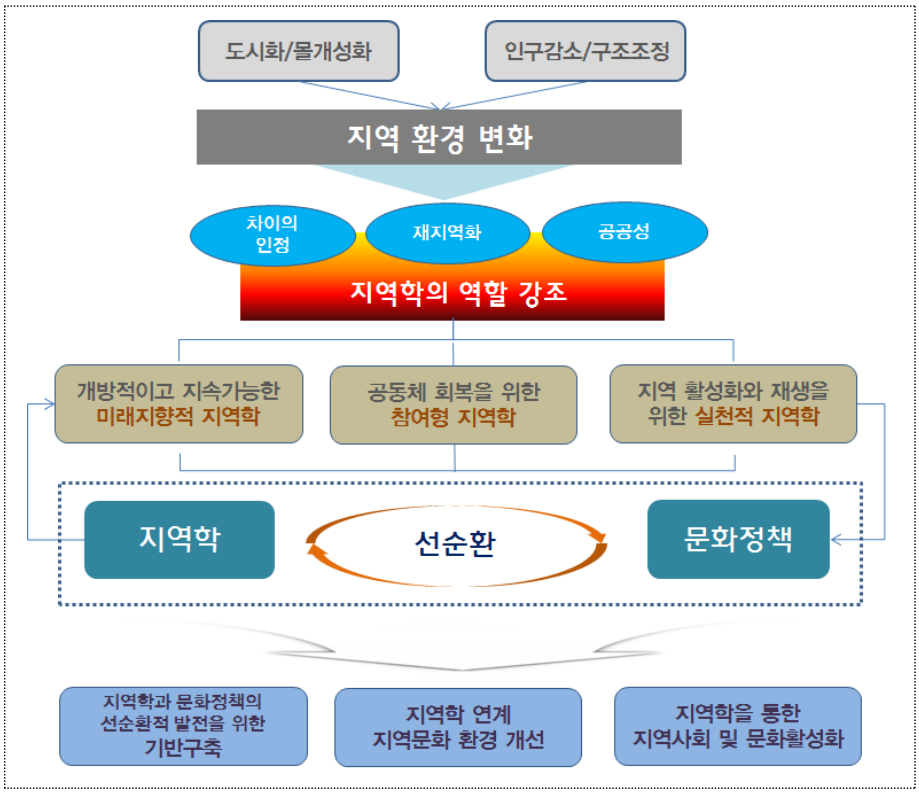
○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지향성으로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을 제시. 이러한 지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과 공공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됨.

- 또한 지역사회 변화의 직접적이고 실제적 대상인 소지역(기초자치단체와 마을) 차원에서 이러한 선순환 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 관계 모형 〉

○지역 쇠퇴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의 접근(종합)



〈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연계 방안 〉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 범위 ····· 7
2. 연구 방법 ····· 8
3. 기존 선행연구 검토 ····· 10

제3절 연구 흐름 ····· 11

제2장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 ····· 13

제1절 지역의 위기와 국가정책의 필요성 ····· 15
1. 지역의 '개념'과 지역의 '문제' ····· 15
2. 지역의 '문제'와 국가정책 ····· 18

제2절 지역의 위기와 위기극복 방안 ····· 21
1. 지역의 위기 : 쇠퇴의 현실화와 소멸의 가능성 ····· 21
2. 지역 위기의 극복 방안 ····· 30

제3절 소결 ····· 37
1. 지역의 위기와 이의 대응 ····· 37
2. 지역학 :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 ····· 38

제3장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현실 ····· 39

제1절 지역학의 개념과 접근방향 ····· 41
1. 지역학의 개념 ····· 41
2. 지역학의 접근방법과 문화의 중요성 ····· 42
3.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 ····· 46

제2절 지역학 관련 법제 및 정책 계획 ····· 52
1. 문화 관계 법률 및 정책 계획 ····· 53
2. 교육 관계 법률 및 정책 계획 ····· 56

제3절 국내 지역학 현황 및 관계자 인식 ····· 58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정책 동향 ····· 58
2. 지역학 기관·단체 현황 ····· 68
3. 지역학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한 인식 ····· 77

제4절 소결 ····· 85
1. 지역학의 새로운 접근 : 미래지향·참여·실천적 지역학 ····· 85
2. 지역학 관련 기관 현황 ····· 85
3. 지역학 활성화의 제약 요인과 개선방향 ····· 86

제4장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실천 사례 ····· 89

제1절 국외 사례 : 일본 ····· 91
1. 일본의 지역학 대두 배경 및 특징 ····· 91
2. 일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역학 진흥 사례 ····· 94
3. 마을 단위 사례 : 일본 히로시마현 카와네(川根) 마을 ····· 100

제2절 국내 사례 ····· 104
1. "주민 참여형 마을기록과 지역학의 미래"– 제주학연구센터 ····· 104
2. "지역학과 예술·언론의 만남"– 충북학연구소 ····· 115
3. "마을의 기록과 발전적 활용"– 전주문화재단 ····· 122

제3절 소결 ····· 133
1.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 그리고 지역의 발전 ····· 133
2. 아래로부터의 지역연구와 문화적 실천 ····· 134

제5장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 ····· 137

제1절 정책 방향 ····· 139
1. 지역쇠퇴 시대, 지역학의 필요성과 문화정책적 함의 ····· 139
2. 지역학과 연계한 문화정책의 과제와 주체별 역할 ····· 142

제2절 정책 과제 ····· 145
1.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145
2. 지역학 연계 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 151
3. 지역학을 통한 지역사회 및 문화 활성화 ····· 164

참고문헌 ····· 173

ABSTRACT ····· 180

부록 ····· 183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 8
[표 Ⅰ-2] 사례분석을 위한 서면 자문의뢰 현황 ····· 9
[표 Ⅱ-1] 지역 개념과 접근 방법의 차이 ····· 17
[표 Ⅱ-2] 도시쇠퇴 진단지표 ····· 25
[표 Ⅱ-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시쇠퇴지역) 진단 결과 ····· 25
[표 Ⅱ-4] 한계마을의 단계별 기준 및 특징 ····· 27
[표 Ⅱ-5] 한계마을의 공동화 현상 ····· 28
[표 Ⅱ-6] 장소마케팅/장소브랜딩/장소만들기 비교 ····· 35
[표 Ⅱ-7]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구성요소 ····· 35
[표 Ⅲ-1] 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 ····· 43
[표 Ⅲ-2] 전통지역지리와 지역지리, 신지역지리 비교 ····· 43
[표 Ⅲ-3] 로컬리티 기록화 패러다임의 전환 ····· 49
[표 Ⅲ-4]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 50
[표 Ⅲ-5] 지역학 관련 법률 ····· 53
[표 Ⅲ-6] 충남학 강좌 커리큘럼 ····· 59
[표 Ⅲ-7] 각 지역의 지역학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 ····· 61
[표 Ⅲ-8] 지역학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 65
[표 Ⅲ-9] 지역학 명칭을 사용한 기관 · 단체 현황 ····· 68
[표 Ⅲ-10] 지역학 관련 기관 · 단체의 유형 ····· 72
[표 Ⅲ-11] 유형별 지역학 기관 · 단체 설립 시기 ····· 73
[표 Ⅲ-12] 지역학 관련 기관 · 단체 운영 및 활동 현황 ····· 75
[표 Ⅳ-1] 일본 하기시의 지역학 진흥 및 동네박물관 조성 과정 ····· 97
[표 Ⅳ-2] 제주학연구센터 발전단계 ····· 105
[표 Ⅳ-3]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기능 및 업무 ····· 105
[표 Ⅳ-4]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기초교육 내용 ····· 108
[표 Ⅳ-5] 제주마을기록화 사업 내용 ····· 109
[표 Ⅳ-6] 충북학연구소의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 ····· 115
[표 Ⅳ-7]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주체별 추진 역할 ····· 118
[표 Ⅳ-8] 중부매일신문 '달래강 리포트'호별 기사 제목 ····· 120
[표 Ⅳ-9] 마을술사의 역할 개념 분류 ····· 126

[표 Ⅳ-10] 연차별 마을술사 운영 계획 ····· 129
[표 Ⅳ-11] 일본 지역학 연구의 특징과 주요 내용 ····· 133
[표 Ⅳ-12] 사례별 특징과 주요 내용 ····· 135
[표 Ⅴ-1] 지역학 연계 문화정책의 과제(안) ····· 142
[표 Ⅴ-2] 지역학 연계 문화정책 관련 주체별 역할 ····· 144
[표 Ⅴ-3] 지역학 육성 지원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예시) ····· 147
[표 Ⅴ-4]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 149
[표 Ⅴ-5] 문화이모작 사업 추진 실적 (2017년) ····· 156
[표 Ⅴ-6] 국외 지역학 관련 네트워크 아카이브 사례 ····· 158
[표 Ⅴ-7] 국내 문화 관련 공공정보화시스템 사례 ····· 160
[표 Ⅴ-8] 마을기록관의 주요 기능 ····· 164
[표 Ⅴ-9]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황 ····· 170
[표 Ⅴ-10] 지역학-문화정책 결합형 마을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예시) ····· 171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목적 ····· 6
[그림 Ⅰ-2] 연구 분석틀 ····· 11
[그림 Ⅱ-1] 신지역지리학에서의 확장된 지역 개념 ····· 16
[그림 Ⅱ-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5-2065) 변화 ····· 21
[그림 Ⅱ-3]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左) 및 생산가능인구(右) 추이 ····· 22
[그림 Ⅱ-4] 2015 대비 2045년 시도별 총인구 증가(上)과 시도별 인구성장률(2015-2045)(下) ····· 23
[그림 Ⅱ-5] 2013년 대비 2040년 인구 증감지역 예측 ····· 24
[그림 Ⅱ-6]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시쇠퇴지역)' 현황 (2016년 12월 현재) ····· 26
[그림 Ⅱ-7] 전국 228개 시군구(上) 및 3,463개 읍면동(下)별 지방소멸위험현황 ···· 29
[그림 Ⅱ-8] 지역발전이론의 체계 ····· 33
[그림 Ⅱ-9] 지역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지역만들기 ····· 34
[그림 Ⅱ-10]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학의 역할 ····· 38
[그림 Ⅲ-1] 지역학 속성들의 관계도 ····· 43
[그림 Ⅲ-2]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의 작성 과정 ····· 51
[그림 Ⅲ-3] 현재 지역학 추진에 대한 평가 ····· 78
[그림 Ⅲ-4]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 79
[그림 Ⅲ-5] 지역학 진흥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82
[그림 Ⅲ-6]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 83
[그림 Ⅲ-7]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 84
[그림 Ⅲ-8] 지역학의 향후 방향,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 87
[그림 Ⅳ-1]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의 위치 ····· 98
[그림 Ⅳ-2] 쓰시마시의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 단계 ····· 99
[그림 Ⅳ-3] 쓰시마시의 지역 연계 지역만들기 기본 개념도 ····· 100
[그림 Ⅳ-4] 카와네 마을의 위치 ····· 101
[그림 Ⅳ-5] 카와네 마을의 에코뮤지엄(左)과 에코뮤지엄에 전시된 '카와네의 꿈, 낭만 선언'(右) ····· 103
[그림 Ⅳ-6] 디지털 기술과 자료를 활용한 지역의 기록 사례 ····· 111
[그림 Ⅳ-7] 달천(달래강) 위치도 ····· 117
[그림 Ⅳ-8] 달래강프로젝트 워크숍 현장(左)와 대상지역(右) ····· 120

[그림 Ⅳ-9] 전주시 마을조사 업무과정 ····· 125
[그림 Ⅳ-10] 마을캐릭터 개발(上), 마을컬러링 도안(中), 마을이야기 지도(下) 예시 ····· 128
[그림 Ⅳ-11] 전주시 마을술사 '마을이야기 환류형 개발 구조' ····· 130
[그림 Ⅳ-12] 전주시 마을술사 사업의 '주민 참여'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 131
[그림 Ⅴ-1] 지역쇠퇴 시대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 ····· 140
[그림 Ⅴ-2]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 관계 모형 ····· 141
[그림 Ⅴ-3]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연계 방안 ····· 14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지역의 위기 : 쇠퇴의 현실화와 소멸의 위협

21세기 도시와 지역은 불평등, 자연 및 문화적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도시화에서 비롯된 이익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공공 공간의 민영화,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불균등한 투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으로 지역 내 많은 사람과 집단이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다(노영순, 2017).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국가 및 지역의 인구·사회적 변화,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쇠퇴, 경제·산업 기능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역'을 위협할 것이다.

이른바 도시 및 지역의 쇠퇴, 도시축소(Urban Shrinkage)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때 도시쇠퇴는 향후 다시 성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도시발전단계의 하나로 보는 반면, 도시축소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정의(Cieśla, 2013;구형수, 2016:15)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2014)는 일본의 수도권 외 지역을 사례로 지방의 경제와 고용의 기초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이른바 지방이 소멸과정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 과정이 일본과 유사하거나 더욱 급진적일 것으로 판단할 때, 마스다 히로야의 경고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5~2045」를 보면 중부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인구감소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이상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9개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진단되기도 했다.

나.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의미

'지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과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지역은 규정되어왔다. 고전적으로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어떤 종류의 통일성 또는 유기적인 원칙을 지닌 어느 정도 경계 지워진 영역"으로 정의(Johnson, Gregory, Pratt & Watts, 2000;조아라, 2011;47 재인용)되어 왔다. 이때 지역과 지역 간의 구별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획득된다.

인간은 스스로 실천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장소(혹은 지역)를 점유하고 그 결과 싫든 좋든 간에 흔적을 남긴다(Anderson, J, 2010;이영민·이종희 譯, 2011:21). 이러한 흔적은 무형의 '문화'와 유형의 '문화경관'이 되며, 인간에 의해 문화와 문화경관이 재생산됨에 따라 장소와 지역은 거듭 새롭게 창조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구감소 및 기능쇠퇴에 따른 지역의 쇠퇴, 축소 및 소멸로 인해 지역의 문화와 문화경관의 유지, 관리 및 전승을 어렵게 되고, 이는 다시 장소와 지역의 사회·공간적 회복을 위협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쇠퇴에 따른 지역문화의 훼손은 지역의 재생과 회복을 가로막는, '지역쇠퇴의 악순환'으로 결과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쇠퇴·축소·소멸이라는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쇠퇴, 축소 혹은 소멸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자산 또한 동시에 소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정체성과 문화경관이 훼손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은 어렵거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라도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되어온 지역의 생활문화 양식, 문화자산 및 경관을 기록,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산은 지역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재창출해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 지역재생(regional regeneration) 등 일련의 지역 및 장소 활성화와 발전전략은 대체로 지역의 '문화'를 매개로 추진되어왔다. 물론 새로운 문화의 이식을 통해 지역의 재활성화, 나아가 장소성의 재창출이 될 수도 있지만(백선혜, 2004), 대체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이 지역재생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 '지역학'과 '문화정책' 간의 관계 설정 필요

지역의 '쇠퇴'와 '재생'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보전, 전통 및 역사문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 그리고 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 및 연구를 지칭하는 '지역학'(地域學) 혹은 '지역연구'(地域硏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록'과 '연구'라는 학문적 접근을 넘어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지역학의 정책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학의 기능과 활용에 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화정책(cultural policies)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지역문화자산의 보전과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나, 이들 법률은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치중되거나 등록문화재 보전에 국한되며 지역학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씩 지역학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학 연구단체들이 설립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반조성 및 여건개선에 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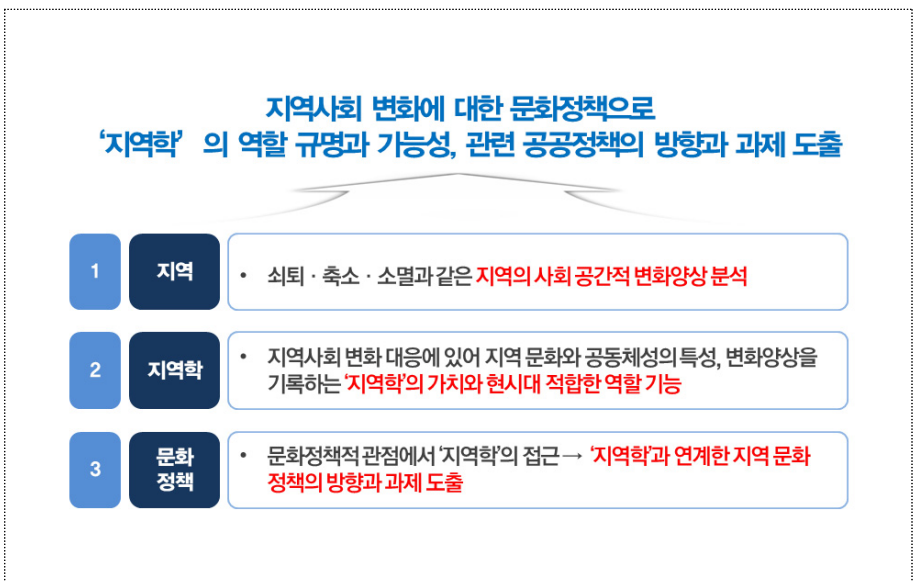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쇠퇴, 축소 및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며 현재 지역문화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지역문화정책 방향 정립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발

굴·보전, 지역문화 정체성 정립을 위한 지역학의 역할과 이의 진흥에 관한 정책연구가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구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의 쇠퇴, 축소 및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활용, 나아가 지역문화 진흥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역학'의 역할 규명과 가능성, 그리고 관련 공공정책의 방향과 과제도출에 그 목적을 둔다.

첫째, 쇠퇴(recession)·축소(shrinkage)·소멸(extinction)과 같은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공간적 변화 양상의 대응에 있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성의 특성과 변화양상을 기록하는 '지역학'의 가치와 현 시대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한다. 셋째, (지역)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학'을 접근하여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Ⅰ-1]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특정 기준년도가 없으며, 제시된 계획의 시행연도는 2019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설정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①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쇠퇴·축소·소멸)와 위기극복방안 ② 지역위기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접근방향 ③ 우리나라 지역학의 추진 현황 및 제약요인 ④ 지역위기에 대응한 '지역학' 사례 분석 ⑤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설정한다.

■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방안**

▷ 지역의 인구사회학적/기능적 변화

▷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지역쇠퇴, 지방소멸 등)

▷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극복방안

■ **지역위기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접근방향**

▷ 지역학의 개념 및 접근방법

▷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

■ **우리나라 지역학의 추진현황 및 제약요인**

▷ 지역학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 지역학 활성화의 제약요인

■ **지역위기에 대응한 '지역학' 사례 분석**

▷ 국외 사례 (일본사례)

▷ 국내 사례

■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지역을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와 관련된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 로컬리티 연구 및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에 관한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지역학과 관련된 현황 자료, 지역학 연구와 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사례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지역학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광역·기초자지단체이 출연하거나 대학에 소속된 지역학연구센터의 관계자, 그 외 지역학, 지역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학 연구 및 정책 활용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정부(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구분	참석자	주요 내용
1차 자문회의 (2018.4.30.)	• 박희용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이지훈 경기학연구센터장 • 남승균 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학 연구 및 활용현황 • 정부 및 지자체 정책건의사항과 기타 의견 수렴
2차 자문회의 (2018.5.16.)	• 김양식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	• 지역 문화정책과 지역학간의 관계 •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과제
3차 자문회의 (2018.6.20.)	•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연구기획팀장 • 김대호 소도리네트워크 대표	• 제주의 지역현안과 지역학의 역할 • 구술사 사업 등 제주학연구센터 및 유관기관 사업 현황 및 과제

다. 지역학연구센터 대상 의견조사

광역·기초자치단체 출연 혹은 대학 소속 지역학연구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① 기관 주요 현황 및 주요 활동분야 ② 지역학의 대상 및 공간적 범주 ③ 지역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각종자료와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여 도출된 전국 50개의 지역학연구센터이며, 이 중 연락처(전화번호, e-mail)가 확인된 32개 중 설문에 응한 기관은 총 17개이다.

라.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 연구 및 관련 실천 사례 분석

전문가 추천과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주민참여에 입각한 실천적 지역학 연구와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은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원고자문과 주요 문헌·자료를 토대로 정리되었다.

국외사례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지역 쇠퇴를 경험한 일본의 지역학 연구와 관련 정책 사례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지역 쇠퇴 과정에서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발굴·수집·기록의 추진,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 '지역학과 지역문화정책의 연계'에 주목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학을 적극 활용하고, 학문적 접근을 넘어 연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충청북도(충북학연구소)', '전라북도 전주시(전주문화재단)'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Ⅰ-2] 사례분석을 위한 서면 자문의뢰 현황

지역	서면 자문	주제	주요 내용
일본	김두철 일본 오카야마대 교수	• 일본 소지역 마을기록 및 활용	• 일찍이 지역쇠퇴를 경험한 일본의 마을단위 기록화 사업과 이의 활용에 대한 사례 검토
제주 특별 자치도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연구기획팀장	• 제주학 연구센터 현황 및 주요사업	• 연구·아카이브와 함께 교육,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 종합적인 지역학 육성프로젝트 추진

지역	서면 자문	주제	주요 내용
충청북도	김양식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달래강인문예술프로젝트 (충청북도·충북연구원)	• 달래강 주변 지역의 인문환경 기록·연구, 이와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해석과 표현 (인문학자와 예술인들의 결합)
전라북도 전주시	김창주 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 마을술사 프로젝트 (전주시·전주문화재단)	• 전주문화재단과 지역 학계와 연계한 마을기록사업과 이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3. 기존 선행연구 검토

지역학, 지역연구 및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학술논문은 다수 존재하나, 공공정책, 특히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학'에 관한 연구는 정정숙(2014)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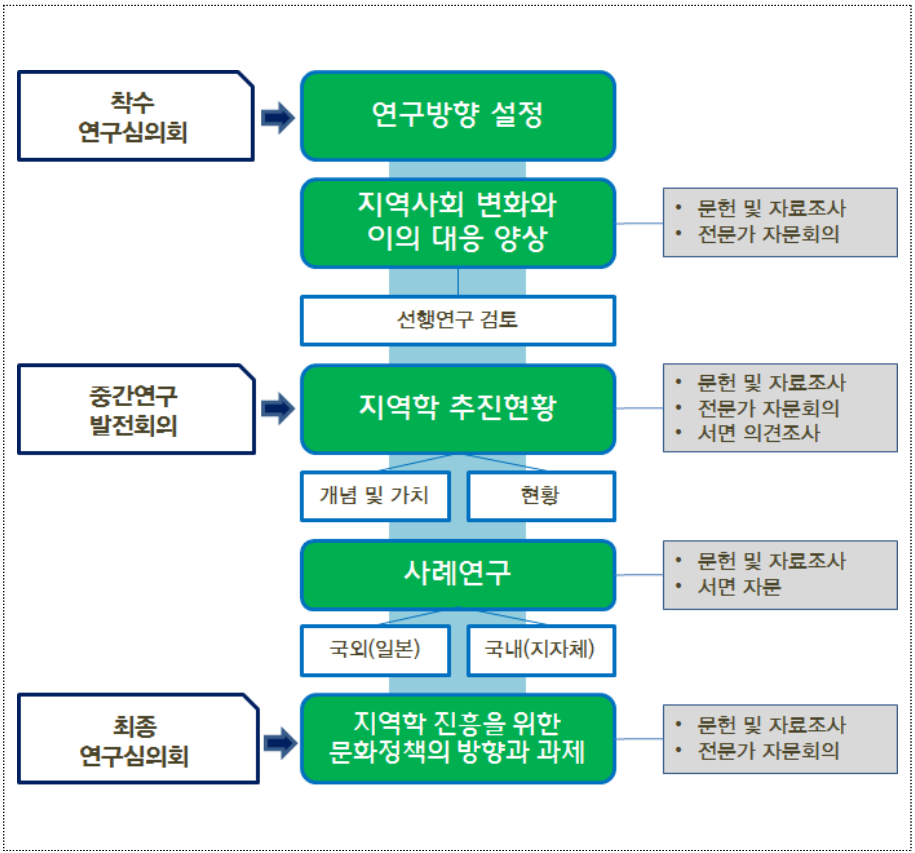
정정숙은「지역문화진흥법」제정 및 문화융성위원회가 수립한「문화융성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2013.10.)의 8대 과제 중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의 세부 과제로 '지역학 활성화'가 포함됨을 연구 배경으로 들며, 지역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대 마련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지역학의 개념설정 및 현황분석, 지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슈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책 목표를 "지역주민이 만드는 문화융성, 문화국가"로 설정하고, "지역학의 제도 정비와 기반 구축", "지역학 연구기관의 자체 개선". "우수한 지역학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지원", "지역주민의 향유·참여 확대 및 수요 창출", "지역학의 다각적인 문화적 활용 방안", "국가와 세계의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학 연구자들의 역할 제고"를 정책 과제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쇠퇴(혹은 소멸)에 따른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산의 소실 위기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 지역학의 의미와 기능을 탐색하고, 이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지역학 자체에 천착하여 지역학의 진흥 및 문화적 활용에 집중한 정정숙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제3절

연구 흐름

앞에서 제시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추진된 연구 수행체계와 흐름은 다음 [그림 Ⅰ-2]와 같다. 2018년 2월에 개최된 착수연구심의회를 통해 연구방향과 과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토대로 동년 6월 중간발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역학연구센터 대상 설문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과 공공 정책적 관점에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한 후, 최종연구심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Ⅰ-2] 연구 분석틀

제2장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

제1절

지역의 위기와 국가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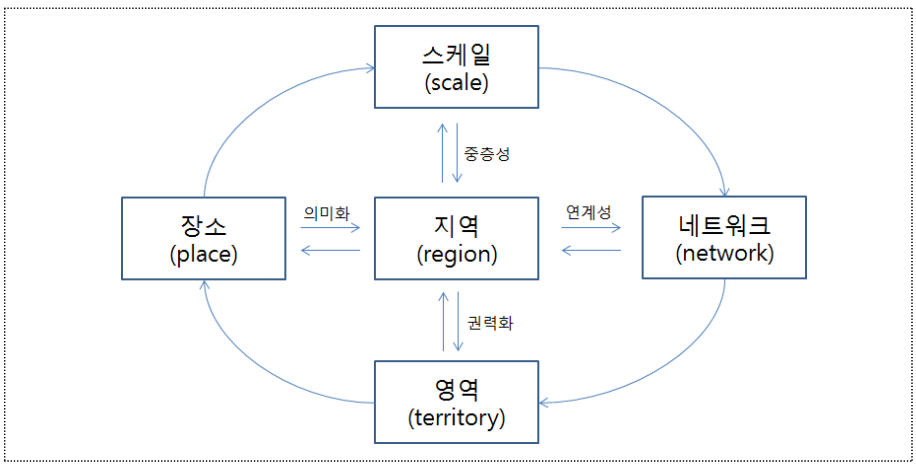
1. 지역의 '개념'과 지역의 '문제'

가. 지역의 개념

'지역(Region)'은 사전적으로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 또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게 나눈 지리적 공간"(이순자 외, 2015) 혹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뚜렷한 특성으로 정의된 지표의 일부"(Rubenstein, 2011;정수열 외, 2012 재인용)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개념은 지역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념의 경우, 기능적 차원에서 문화적·자연적 특성이 서로 독특한 결합을 이루어 타 지역과 구별되는 '등질지역', '기능지역', 결정지역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공간 계층적 차원에서 세계화된 경제체제의 하위단위,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sub-national unit)로 지역이 설정되기도 한다. 한편 전통적인 '지역'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다. 모든 지역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통합된 특성을 이끌어낸다. 문화경관이란 언어와 종교와 같은 문화적 특성과 농업, 공업과 같은 경제적 특성, 그리고 기후와 식생과 같은 자연적 특성의 결합을 뜻한다. 미국의 지리학자 칼 사우어(Carl Sauer)는 프랑스의 폴 비달 드 라 블라쉬(Paul Vidal de la Blache) 등에 의해 주창된 문화경관론 혹은 지역학(regioanl studies)을 수용하여 문화경관론을 펼치게 되는데, 그는 문화경관을 독특한 문화를 가진 인간 집단에 의해 자연이 유행에 맞게 변형된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Rubenstein(2011):19).

지역의 개념과 의미는 지역을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다. 즉 지역 개념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이다(황홍섭, 2017:24). 20세기 중 후반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접근과는 달리 '지역'을 그 자체의 문화적·기능적 가치와 내생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능동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지역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과 공간적 과정간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재헌, 2005). Jessop *et al*(2008; 박배균·김동완, 2013;황홍섭, 2017:26)은 지역을 4가지 유형의 공간요소 즉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영역 등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지역은 다양한 스케일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폐쇄'된 것이 아닌 상호 '연계된 영역성(networked territoriality)'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고유한 특성인 '지역성'은 일정한 경계와 고정된 스케일에 의한 특수성보다는 제반 환경과 여건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지역의 내생적 역동성과 관계성의 강조는 로컬리티(locality) 연구와 지역지리(regional geography)의 새로운 연구접근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1].



[그림 II-1] 신지역지리학에서의 확장된 지역 개념

* 출처 : 황홍섭(2017), p.26

1) 박규택(2009:119)은 로컬리티를 "국가 혹은 세계 체제 내에서 상대적 혹은 관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 즉 로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비)물질적 실체들(realities)과 이와 관련된 성질들을 나타내며, 이들은 로컬 내·외부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손명철(2017)은 "지역지리의 새로운 접근, 즉 신지역지리(new regional geography)는 로컬리티의 우연적이고 역동적인 생성과 변화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의 개념과 그 접근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양식, 2017: 14-15). 첫째, 전통적인 지역 개념은 폐쇄적이고 수동적이며 지역 내부에 국한된 인간-환경 관계에만 주목하였으나, 새로운 '지역' 개념은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정의될 수 있다. 둘째,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성을 형성·유지·변형시키는 살아 있는 실체로서, 장소성·네트워크, 스케일(scale)·세방화(glocalization)·정체성(identity) 등이 주요한 개념 원리로 파악되고 있다. 즉 "지역은 유무형의 경계를 가진 공간과 기억의 장소이자, 법·권력 등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며, 개인과 집단 간의 이념적·물질적 복합체"(최재헌, 2005; 김양식, 2017:15-16)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최재헌(2005)·손명철(2017:654)을 종합하여, 지역의 개념과 지역에 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지역 개념과 접근 방법의 차이

구분	전통적 접근	새로운 접근
개념 본질	• 지역을 발견하는 것 • 지역은 주어진 것으로 지리현상 이해를 위한 개념 • 영토에 관한 지리적 정보 제공	• 지역은 역사적·영역적 실체로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 • 자본주의의 분석 단위
지역연구의 방법	• 기술과 언어 • 영토에 관한 지리적 정보 제공	• 소규모 지역단위 연구 • 로컬리티의 역동적인 생성·변화과정 설명 • 설명·이론화·작은 이야기 추구
지역연구의 함의	• 지역을 알기위한 도구	• 지역을 알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
고유성과 지역 변화의 동인	• 지역 변화는 지역 내부에 국한 • 지역 내 자연·인문적 제요소의 결합	• 일반적 구조와 과정이 구체적 내용에서 변형 • 인간–사회–환경 관계 및 상호작용 중시
주요 개념	• 등질지역 • 기능지역 • 결정지역	• 지역성/장소성(placeness) • 로컬리티 (locality)

* 자료 : 최재헌(2005, 김양식 2018:15); 손명철(2017:654)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지역을 보는 관점과 이의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국가와 세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자 역사적·영역적 실체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실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는 고유한 자연특성과 문화를 가진 '지역'이란 세포가 조화와 통일을 이룬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할 수 있다. 국가가 인간 모듬살이의 기반인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마치 세포의 변형으로 우리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듯이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의 '문제'와 국가정책

오랫동안 일본에서 지역을 연구해 온 마루타 하지메(2011)는 "지역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고, 많은 지역이 자율성과 개성을 잃고 더욱이 병치나 통합 기능까지 쇠퇴한 빈껍데기만 남아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① 지역 간 격차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행정경계로 표현되는 지역 간 격차보다는 국소적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즉 어느 지역이든 부유층과 빈곤층의 삶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대신, 각각의 계층끼리의 차이는 적어지고 있다는 현실), ② 언어, 행동양식, 생활관심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져 사회관계자본으로도 통용된 지역의 문화적 자질의 동질화가 강화되고 있고('패스트 풍토화'), ③ 지역경제권이 소멸하고 ④ 주어진 지역자치와 지방분권 개혁이 있어도 사실은 '주민의 낮은 자치의식'과 '주민과 지방자치체와의 격절'이 커져간다고 현대의 사회를 진단한다.

마루타 하지메가 진단한 '지역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구(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2]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역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① '비도시권(농·산·어촌)'의 과소화, 중심-주변 간 격차발생 등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된 전통적인 '과소·저발전지역' ②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쇠퇴지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고질적인 것인데 반해, 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 경제·산업재구조화로 일컬어지는 후기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이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과소화, 쇠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지역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마을', '촌락'과 같은 인간 정주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소(小)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선희 외(2016)는 "미래 국토발전을 위하여 '마을'(village)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을은 장소에 기반을 둔 모듬살이 공간이며, 직접적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단위이자 구성원들에게 연대감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반이다. 마을은 다른 커뮤니티와는 달리 구성원을 재충원하고, 구성원의 존속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며, 긴장과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항상성을 가진 사회시스템이다. 따라서 마을은 한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단위(김선희 외, 2016:4-5)인 것이다.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쇠퇴와 소멸이 타 지

2)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원종 외(2015)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 도입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지역(problem areas)의 발생이다. 문제지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저발전지역, 쇠퇴지역, 과밀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전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국토공간의 효율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즉 국가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경제사회 발전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정책이 필요한 것이다(이원종 외, 2015, 지역발전정책론 :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역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이러한 위기가 국가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을을 기반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점[3]에서 촌락(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산업재구조화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지역문제는 도시에 반대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에 반대되는 주변지역의 과소화와 쇠퇴뿐만 아니라 중심(수도권)과 도시 내부 지역의 문제이다. 이른바 도시 내 원도심지역의 쇠락과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왜곡과 사회문제 발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양적 도시 성장에 중심을 둔 도시정책은 신시가지 개발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시가지는 생활·문화·교육·복지 등의 기능 부족, 인구 감소, 환경·생활·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기능이 약화되면서 쇠퇴가 진행되어져 왔다(박소연·오덕성, 2015:4984).

종합하자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낙후와 쇠퇴, 지역 간의 격차를 넘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소 혹은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당대의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의 사라짐을 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켜켜이 쌓인 역사와 문화, 경관 그리고 사람과 공간을 둘러싼 관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역 고유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소실되고, 사람과 공간을 둘러싼 관계의 단절은 곧 공동체성과 국가정체성(identity)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의 쇠퇴, 축소 혹은 소멸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마을-개인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를 복원하여 개인과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완하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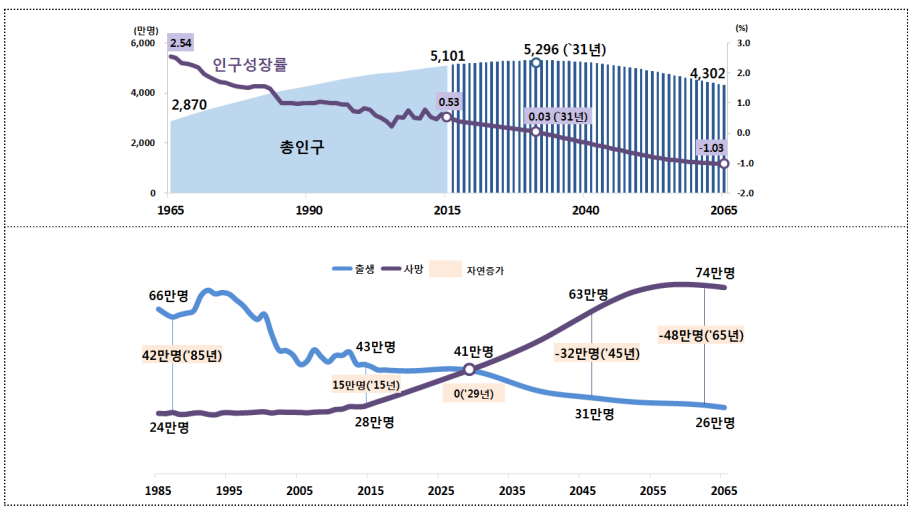
지역의 위기와 위기극복 방안

1. 지역의 위기 : 쇠퇴의 현실화와 소멸의 가능성

가. 우리나라 장래 인구의 변화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2016.12월 발표), 총 인구의 경우, 2015년 현재 5,101만 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5년 4,302만 명(1990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5~2065)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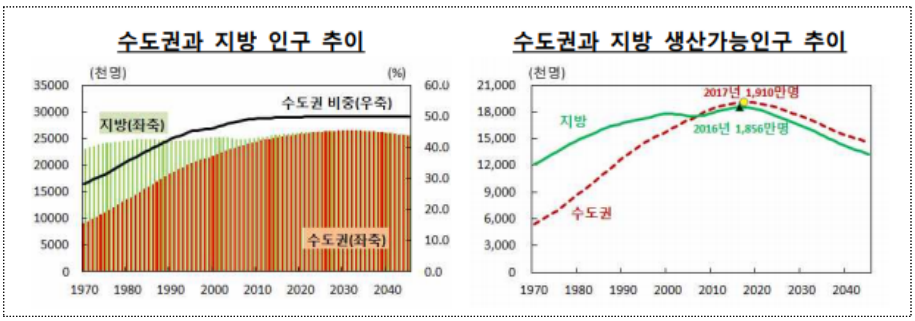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2016.12.8.)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를 가정할 때 인구정점은 2023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를 가정할 때는 2038년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여 2065년에는 -1.0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나. 지역의 인구 감소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5~2045」(통계청, 2017)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45년에는 중부권(12.4%)과 수도권(1.0%) 인구는 늘고, 영남권(-7.7%)과 호남권(-1.3%)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부권과 수도권의 경우에도 2031년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인구감소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기능인구(15~64세) 또한 지방이 2001~2005년 중 감소 후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1,85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도 2017년 1,910만 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이다(그림 Ⅱ-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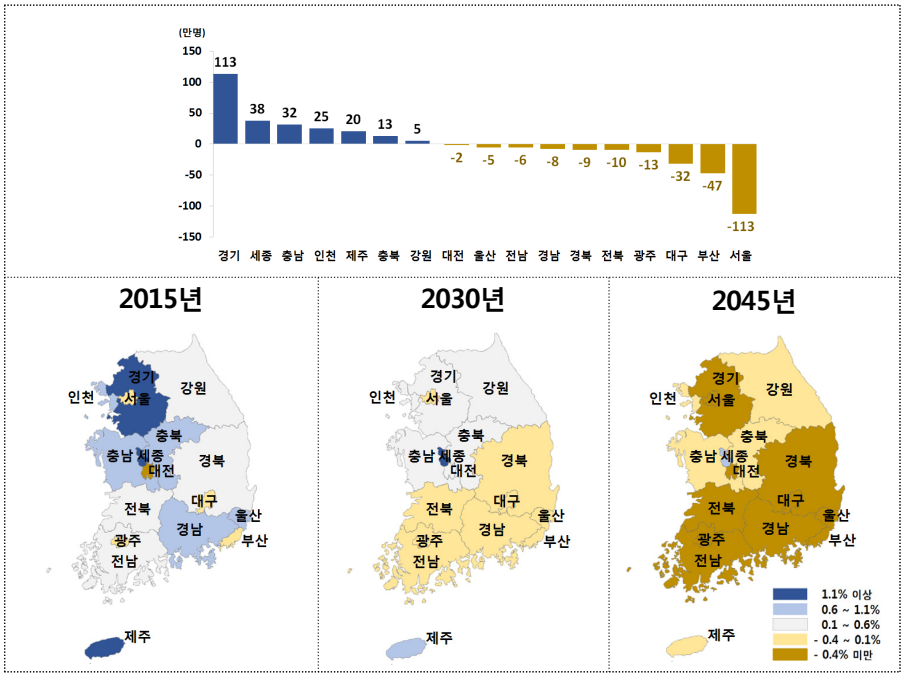


[그림 Ⅱ-3]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左) 및 생산가능인구(右) 추이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2016.12.8.)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충북, 강원 등 중부권·제주권은 2015년에 비해 2045년 인구가 증가하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남권·호남권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전통적인 대도시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래가 아닌 현 시점(2018년 6월 현재)에도 전국의 6대 광역시 가운데 수도권의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

전, 광주, 울산 등 5개 지방대도시는 인구가 이미 감소한 것[4]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2015 대비 2045년 시도별 총인구 증가(上)과 시도별 인구성장률(2015-2045)(下)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2016.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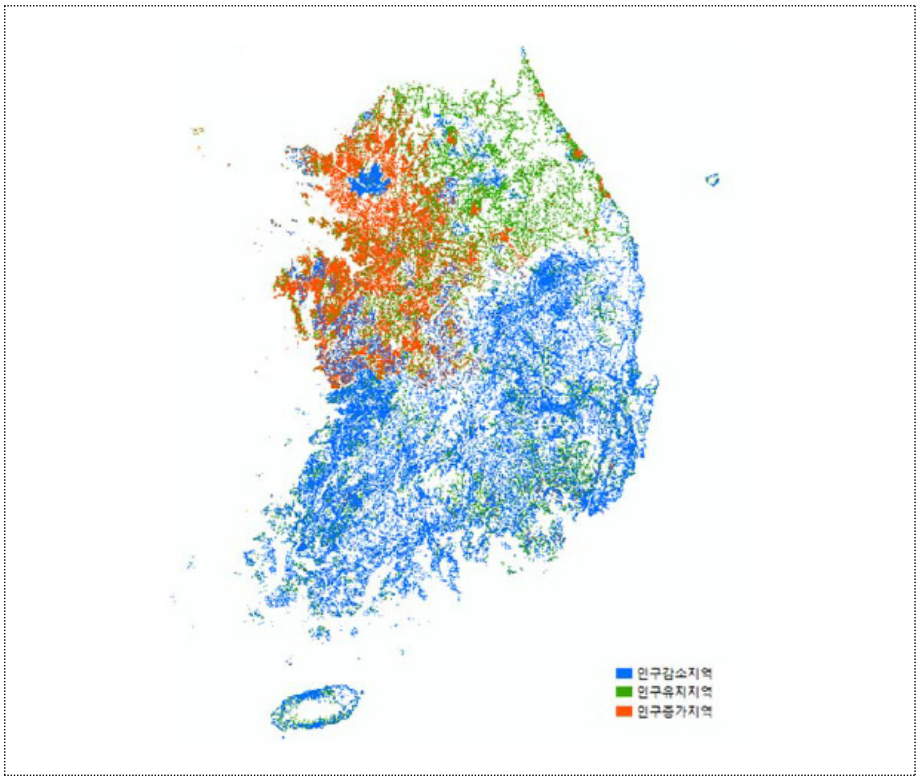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를 비교·분석해보면, 2015년의 경우 강원, 전라남북도, 충남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5~35% 수준에 도달했으며, 2045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35%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소년 인구의 경우 2045년에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전체 인구 중 10%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대비 2045년의 유소년 인구 증감률을 보면, 경기와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은 -25% 이하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은 이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미숙(2015)에 따르면, 2013년 거주 지역 중 2040년에 인구가

4) "지방 대도시도 인구 무너진다"(한겨레 온라인판 2018.8.10.일자, 2018.8.13. 검색)

증가하는 지역은 29.8%, 인구 유지지역은 17.3%인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5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라권과 경상권의 대부분 지역과 서울이 뚜렷한 인구감소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II-5] 2013년 대비 2040년 인구 증감지역 예측

* 출처 : 차미숙(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525(2015.7.27.), p.3
㈜ 분석방법 : 통계청의 2040년 장래인구 추정치를 격자단위(500m)로 세분화하여 주거용 건물 유무를 기준으로 거주/비거주지역으로 구분(인구과소지역 : 격자 당 5인 이하 거주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

다. 지역의 쇠퇴

인구의 감소, 기능의 축소 및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의 원도심(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지역의 쇠퇴 정도를 확인하고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도시쇠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사용된 '도시쇠퇴 측정지표'는 ① 인구사회부문, ② 산업경제, ③ 물리적 환경 등 총 3개 부문의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2 참조).

[표 II-2] 도시쇠퇴 진단지표

부문	지표 명	지표 설명
인구사회 부문	과거대비인구변화(%)	•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
	최근인구변화(년수)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산업경제 부문	과거대비사업체변화(%)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
	최근사업체변화(년수)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물리환경 부문	노후건축물비율(%)	•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도시쇠퇴현황자료(2016.12월 기준) (www.city.go.kr에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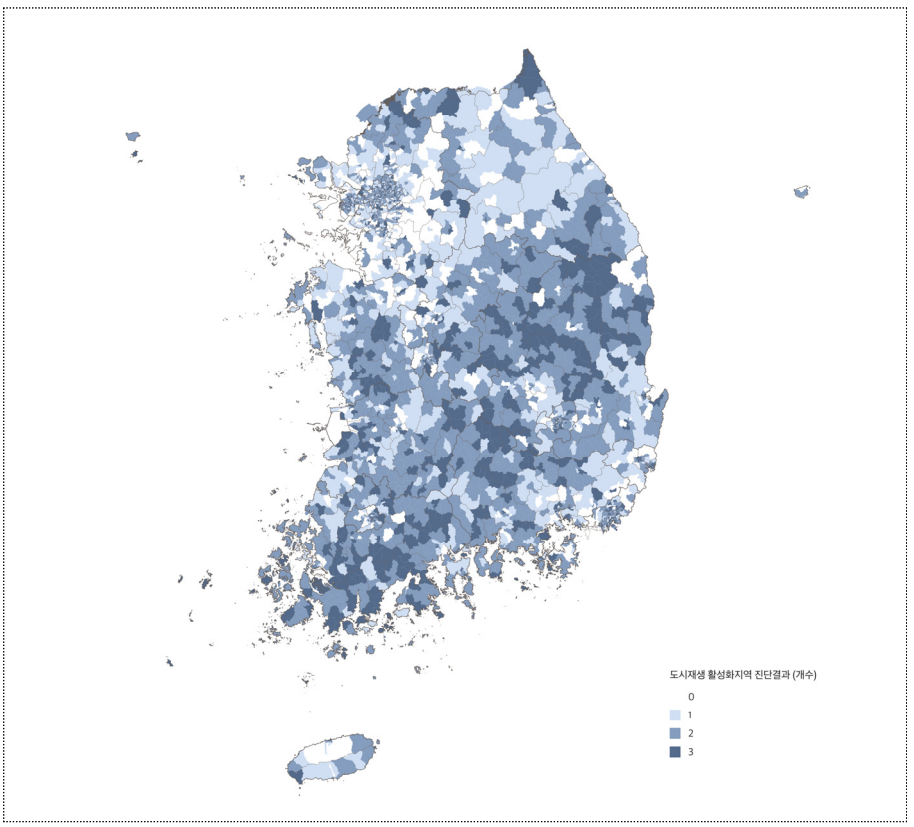
2015년과 2016년 전국 도시쇠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쇠퇴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3가지 부문 중 2개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함). 2015년 12월 기준 전국 3,482개 읍·면·동 가운데 도시쇠퇴진단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쇠퇴지역은 2,241개로 64.4%를 차지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조사 결과도 2015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2,300개(65.9%)가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 지역이었다(표 Ⅱ-3 참조).

[표 II-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시쇠퇴지역) 진단 결과

연도	기준 부합 지역(A)	기준 미부합 지역 (B)	총합계 (A+B)	비율 ((A/A+B)×100)
2016	2,300	1,188	3,488	65.9%
2015	2,241	1,241	3,482	64.4%

* 출처 : 도시쇠퇴현황자료(2015, 2016) (www.city.go.kr에서 다운로드)
㈜ 기준 부합지역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됨.

도시쇠퇴지역의 전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3개 부문 모두를 충족하여 정책적 조치가 시급한 쇠퇴 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내륙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소지역이자 낙후지역에 밀집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6]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시쇠퇴지역)' 현황 (2016년 12월 현재)

* 출처 : 도시쇠퇴현황 원자료(2016)를 토대로 연구자 제작

라. 지역의 소멸

인구와 기능의 감소로 인해 급기야 지역(도시) 쇠퇴를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였다.

지방소멸, 마을소멸의 개념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에서 본격 제기되었다. 일본의 이와테 현 지사와 중앙정부 총무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는 2014년 발간한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김정환 譯,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이라는 책에서, 일본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2010년부터 2040년까지 20~39세 여성인구가 50퍼센트 이하로 감소하는 일본의 시구정촌 수는 현재의 추세보다 대폭 증가하여 896개 자치단체, 즉 일본 전체 자치단체 중 49.8%에 이르며,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자치단체의 약 50%는 장래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는 '소멸 가능성 도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일본의 농촌마을 연구자인 오노아끼라(大野晃)는 마을인구가 점점 노령화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 이르러 마을공동체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마을을 '한계마을'이라 지칭했다(유학열, 2017:1). 그는 한계마을을 마을기능의 한계화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로 구분했다(표 Ⅱ-4 참조).

[표 II-4] 한계마을의 단계별 기준 및 특징

명칭	정의	내용	세대 구성
존속마을	5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인구 50% 이상	•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고,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시키는 마을	젊은 부부세대 취학아동세대 후계자 확보세대
준한계마을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렵고, 한계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부부만의 세대 준노인부부세대
한계마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소멸마을	인구, 세대 수 없음	• 완전히 무거주지가 되어, 마을이 소멸된 상태	

* 출처 : 大野晃, 2008, 『限界集落と地域再生』, 京都隣聞出版センター; 유학열(2017), p.2 재인용

한계마을은 세 가지 공동화 현상, 즉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유학열, 2017:3).

[표 II-5] 한계마을의 공동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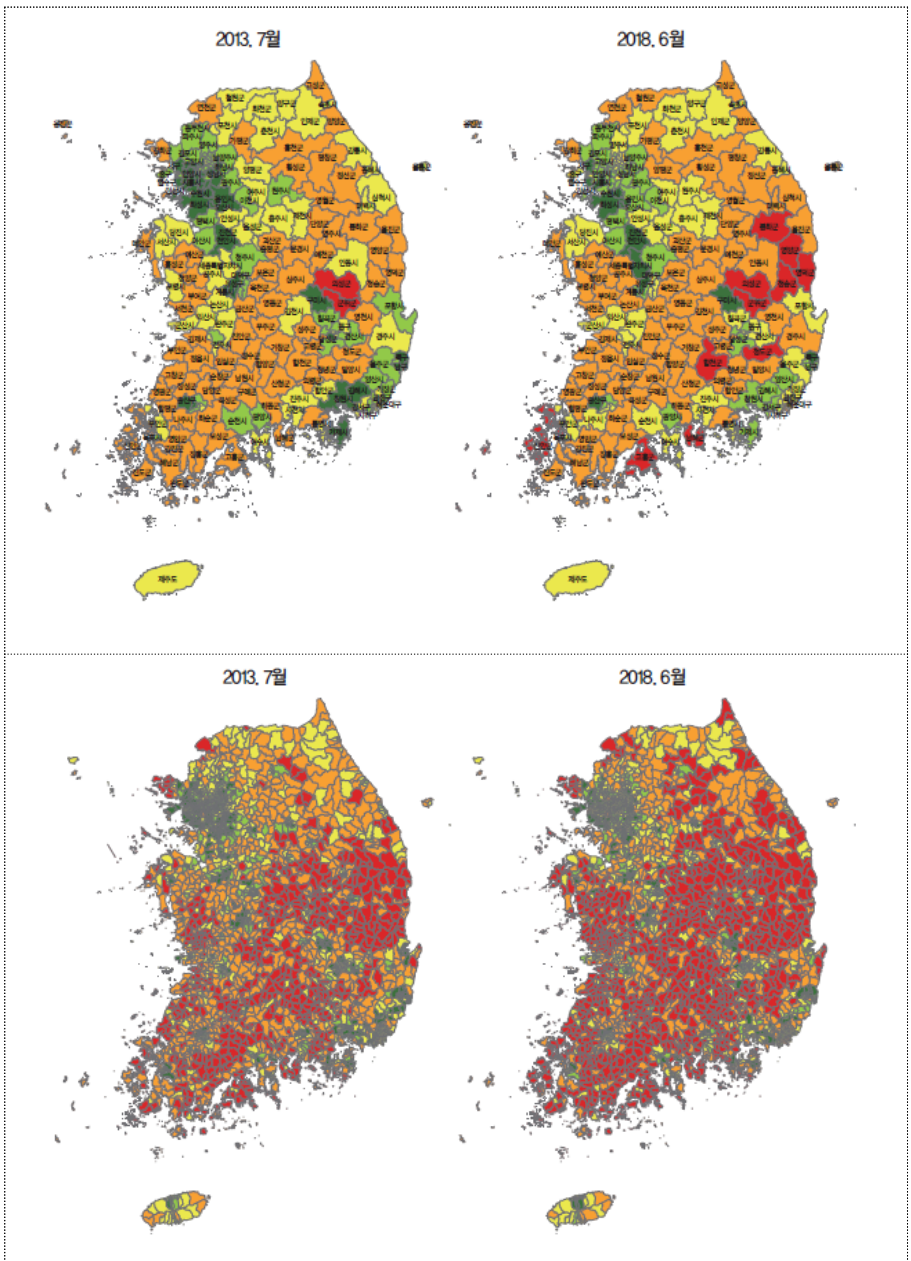
유형	내용
사람의 공동화	• 마을인구 감소의 원인이 사회적 감소보다는 자연적 감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출생도 줄어들면서 지역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
토지의 공동화	• 농림지의 휴경화 현상 •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경작포기, 농지 황폐 현상이 현저히 나타남 • 지금까지 부모세대가 농업활동을 하면서 토지를 이용·관리해 왔으나, 고령 은퇴농가가 급증하면서 토지(농경지)의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음을 의미
마을(공동체)의 공동화	•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처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을기능의 저하에 의해 정체된(침체된) 상태를 의미 • 농촌마을 자원의 관리능력 저하, 공동생산 및 판매 등 공동 농작업의 불가능, 마을의 전통 문화, 예능전승 능력 저하 등이 현재의 주민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

* 출처 : 유학열(2017), p.3의 내용을 연구자 정리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기 시작하여 지역정책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이상호(2018)는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28개 시군구 및 3,463개의 읍면동을 패널화 한 것으로, 2013년에서 2017년은 각 연도 7월, 2018년 6월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6월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89개(39.0%)로, 이는 2013년 7월 현재 75개(32.9%)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3,463개 중 1,503개로 43.3%에 이르렀으며, 특히 비수도권-도 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이 70.1%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수도권-광역시의 경우에도 2013년 7월 7.3%에서 2018년 6월 20.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지방대도시 또

한 소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Ⅱ-7 참조).



[그림 Ⅱ-7] 전국 228개 시군구(上) 및 3,463개 읍면동(下)별 지방소멸위험현황

* 출처 : 이상호(2018), p.7~9

마강래(2017)는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 30% 정도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소멸 위험 지역의 비중은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소멸위험지역이 증가(33곳→80곳)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리질 위기에 처한 곳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김경근 외(2017) 역시 마스다히로야(增田寬也)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도출한 결과, 2017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97로 기준치(0.1)를 하회하여 지방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광역시 및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서울 등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상회(서울 1.16, 경기 1.26, 인천 1.25)했으나, 광역시(인천 제외)는 부산(0.82) 및 대구(0.93)지역이 기준치를 하회하였고 도지역(경기 제외)은 모든 지역이 지방소멸 주의단계(전남 0.49, 경북 0.59, 전북 0.61, 강원 0.62, 충남 0.70, 충북 0.78, 경남 0.82, 제주 0.88)에 이르렀다. 특히 전남은 0.49로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단위가 시군구이든 읍면동이든 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인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조차도 소멸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확인된다.

2. 지역 위기의 극복 방안

가. 대안적 지역발전 이론

그렇다면 지역, 그리고 국가는 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린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안적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지역발전

이론에 내포된 가치로, ①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 ② 재지역화(relocalization) ③ 공공성의 확립과 실현에 주목한다.

첫째,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이다. 이는 지역이 처한 제반 여건과 물적·인적·문화적 자산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차별화된 경쟁력과 경로의 확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김영철(2012b)은 "왜 우리나라의 지역(지방)은 서울이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해 놓은 물적 자본의 수준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열심히 달성하는 것에 계속 매달려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질문을 던진다.

> *"기러기 편대의 꼬리를 이루고 날아가는 지역이 서울을 모방하여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갈 것인가, 서울에 대한 모반을 감행하고 그 편대를 이탈할 것인가? 서울의 모방전략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반면, 서울에 대한 모반 전략은 서울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에 기반하여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독자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김영철, 2012b:49-50).*

김영철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 '공유적인 것(the common)'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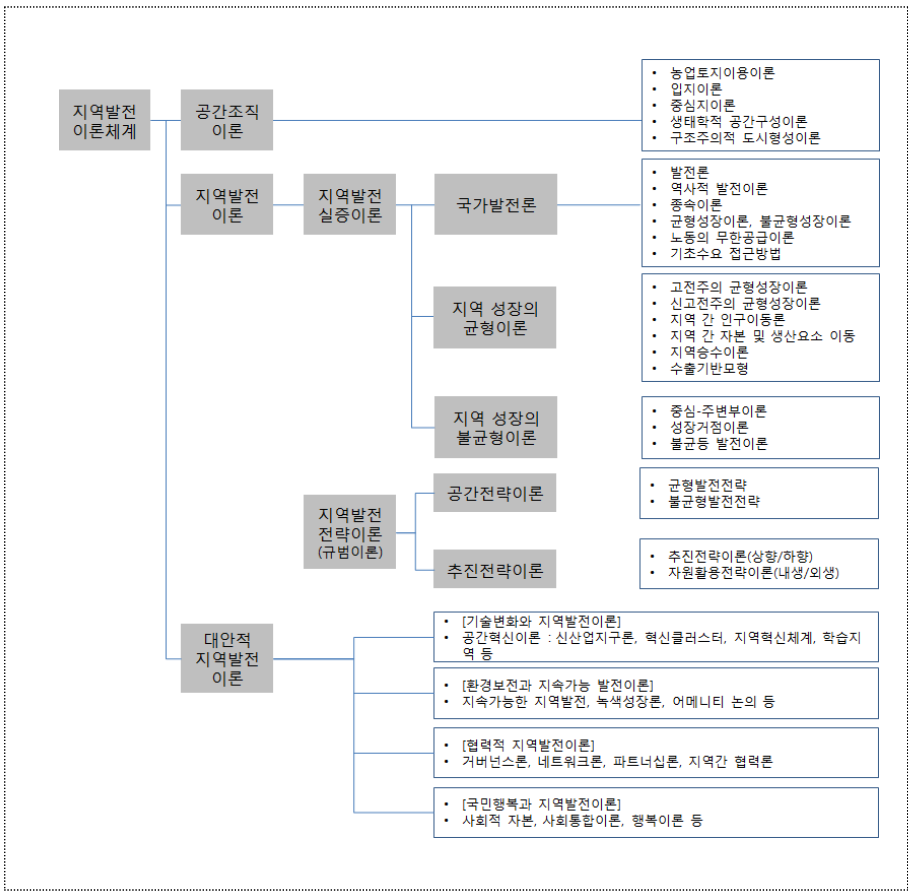
사회적인 것은 시장과 국가를 뛰어 넘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과 국가는 20세기 근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21세기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하여야 할 '포스트' 프로젝트는 시장과 국가의 바깥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중심주의 사고방식을 초월하고, 시장의 지배에 대한 저항담론을 만듦"으로써(김영철, 2012b:53) 지역 그들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의 개척이 필요하다. 한편 근대를 지배해온 '국가'와 '자본'의 한계로 인해 지역이 위기에 봉착한 바, 이의 대안으로 공유적인 것, 즉 '커먼즈(commons)'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커먼즈 패러다임은 국가와 자본의 대안으로 자급과 자치의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커먼즈의 세계는 여러 삶의 방식들이 모여 이룬 다중우주인데, 이 세계에서 지역은 개인의 개성이, 국가는 개별 지역의 개성이 말소되지 않고, 이들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결합된다.

두 번째 대안적 지역발전의 가치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로, 이는 차이와 차별성의 인정과 연결된다. 정남영(2015)는 지역 위기의 원인으로 근대적 권력 구조와 위계성에서 찾고 있다. 예전에 평등했을 지역들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권력 중심에 종속되고 권력 중심에 부과되는 척도에 의해 위계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권력에서 멀어진 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근대(alter-modernity)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또 하나의 중심(권력중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들 가운데 비교적 위치가 높은 주변이 되는데 있지 않으며, 주변으로서의 지역, 종속된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재특이화되는 것이다. 지역의 '재특이화'란 곧 '재지역화(relocalization)'라 할 수 있다. 지역이 중심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달리 말하자면 국가와 시장이 가져갔던 힘이 다시 지역 공동체들로 귀속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지역이 자율, 즉 자급(생계의 자율적 해결)과 자치를 회복하는데 있다.

끝으로 '공공성'의 확보이다. 근대 국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확립과 실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공공성이 공공성의 상품화와 정치화 경향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the local)의 공공성 실현이 국가나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다(박승희, 2016). 로컬의 공공성은 로컬을 삶의 터전으로 하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행위와 가치가 공존하고 내외부가 상호 소통하는 현장으로서의 로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로컬의 공공성은 주민자치, 소통을 통한 가치 실현, 미시적으로 일상적인 것들의 재발견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상의 지역과 지역발전을 둘러싼 가치변화와 함께, 산업사회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안적인 지역발전이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이원종 외, 2015:12). 예를 들어 기술 및 생산체계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산업지구론',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학습지역' 등이 제기되었고, 수직적 위계체계에 대항하여 '거버넌스론', '네트워크론', '파트너십론'이 각광을 받았다. 그 외

'공유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이론' 등이 주목을 받은 대안적 지역발전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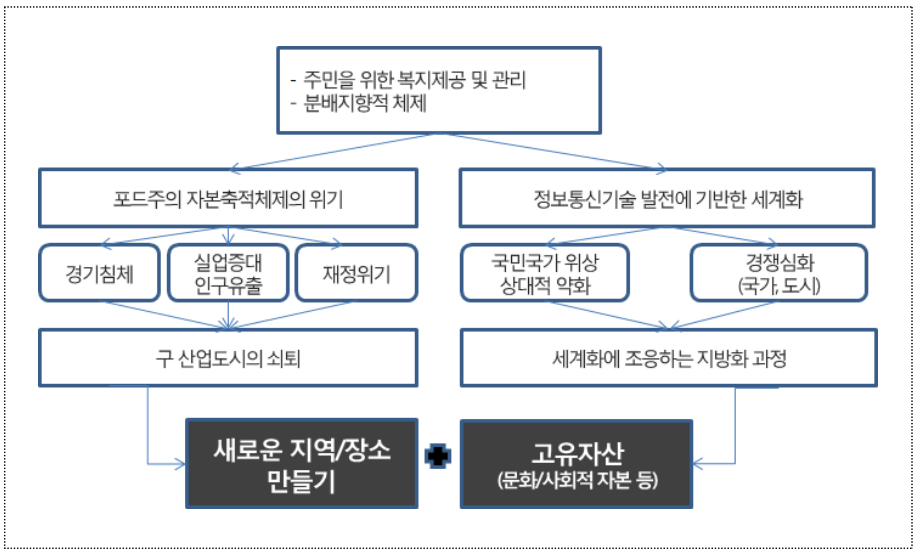
[그림 II-8] 지역발전이론의 체계

* 출처 : 이원종 외(2015), p.12

나.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포디즘(Fordism)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경제재구조화, 세계화(globalization)가 확산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심적 지위를 가졌던 도시(특히 원도심)와 중소규모의 舊산업도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쇠퇴의 대응에 있어 '문화'는 지

역의 정체성 확립, 새로운 '장소 만들기(place making)'의 주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II-9] 지역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지역만들기

* 출처 : 노영순(2017),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45

장소 만들기(Place Making)란 사람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질적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Wyckoff, 2014)으로, 장소 만들기, 특히 문화를 통한 창조적 장소 만들기의 비전은 살기 좋은 환경, 다양성, 경제발전 등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한다(Markusen, A.& Gadwa, A., 2010).

이병민·남기범(2016)은 장소 만들기(place making)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이나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간의 차이점으로, ① 장소자산에 사회적 자본이 결합된 관계자산을 토대로 진행된다는 것, ② 지역(정체성, 물리적 자산,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성찰과 연구, 참여·상호작용과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표 Ⅱ-5 참조). 조명래(2013) 또한 장소 만들기를 "획일적인 문리적 환경 개선에서 탈피하여 시민 스스로가 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재창조하고 그 가치를 사회 모두가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의 전통과 역사, 장소의 삶과 다양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 II-6] 장소마케팅/장소브랜딩/장소만들기 비교

구분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
핵심자본	• 경제적 장소자산	• 헤리티지/문화자산	• 장소자산(문화)+사회적 자본/관계자산
주요목적	• 경제구조화, 장소의 상품화, 경제기능의 장소적 고착화	• 장소정체성 확립, 이미지 제고, 사회적 목표 달성	• 장소와 내생적 발전 • 매력적 장소자산 만들기
평가/가치	• 자산적 가치, 산출물	• 상징이미지, 가치 창출, 명성, 경쟁력	• 과정, 참여, 상호작용
관계의 방향성	• 내부↔외부 • 마케팅의 관계성, 요구분석 우선	• 외부 → 내부 • 주민의 평가 우선	• 내부→외부 • 주민의 합의가 중요
장소의 의미	• 장소의 영역화	• 장소의 인식, 홍보	• 공공공간의 활성화

* 출처 : 이병민·남기범(2016), p.427

Markusen, A .& Gadwa, A(2010)는 창조적 장소 만들기(Creative Place Making)를 위해서 ① 장소성과 문화 ② 리더십 ③ 협력적 도시공동체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소성과 문화는 지역의 차별성과 특수성, 여기서 비롯되는 경쟁력으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과 장소성에 대한 합의와 활용을 의미한다. 리더십과 협력적 도시공동체는 장소성과 문화를 정의하고 동원하며 활용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것으로, 장소 만들기에는 리더와 활동가들의 기획·추진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합의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표 II-7]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구성요소

분야	세부요소	내용
장소성과 문화	지역의 특수성에 맞춘 계획 수립	• 지역의 규모, 역량, 자원동원력 등 여건에 대한 고려 • 고유의 문화자산/장소성에 대한 합의
리더십	창조적 기획자의 참여와 활동	• 창조적 장소만들기를 주도하는 개인/그룹의 존재 • 주로 예술 관련된 개인 혹은 기관/공공부문 리더 등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	• 지역의 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 등)과 예술단체들의 협조와 참여

분야	세부요소	내용
협력적 도시공동체	공공부문의 인식 제고와 지원	• 강력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수 (제도, 예산) • 자치단체장 및 의원, 공무원들의 이해와 지원 필요
	시민과 지업 등 민간 부문의 지지와 참여 확보	• 민간부문 기업 및 기업협회, 개발업자, 후원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 장소만들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 협력, 갈등 조정

* 출처 : Markusen, A .& Gadwa, A(2010)를 재구성

종합하면 '장소만들기'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정체성과 자산(특히 문화자산)을 기반으로(차이의 인정), 기존의 지역을 새롭게 재지역화(relocalization)하는 것으로, 자치와 협력, 공유라는 '공공성'의 전제 하에 추진되는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 대안적 지역발전의 기반 : 지역학

이렇듯 차이의 인정, 재지역화, 로컬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지역발전의 가치,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전략인 창조적 장소만들기(creative place making)는 지역의 시공간적 변천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 그리고 밀도 있는 연구에서 출발한다.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 로컬리티연구)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또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이다. 지역학은 지역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중앙/주변의 획일적 논리로부터 문화정치학적 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학은 최근 새로운 문화연구의 주제이자 로컬문화를 재발견하는 실천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박승희, 2016).

궁극적으로 지역학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을 뛰어넘는 담대한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동체 내부의 공유의 역할을 새로운 문법에 의거하여 다시 써야할 필요가 있다(김영철, 2012).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재산공화국의 흐름에 대항하여 세계적 연대에 기반한 유목적 저항성을 지역 사회에 내면화하는 작업, 또한 한국 사회의 지역학이 떠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1. 지역의 위기와 이의 대응

지역의 변화와 위기 현상은 비단 국지적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다.

과거 지역변화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과소지역의 출현과 지역 간 격차 심화라고 한다면, 현 시점 혹은 미래에 전개될 지역의 변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은 농촌과 도시의 구분 없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해당 지역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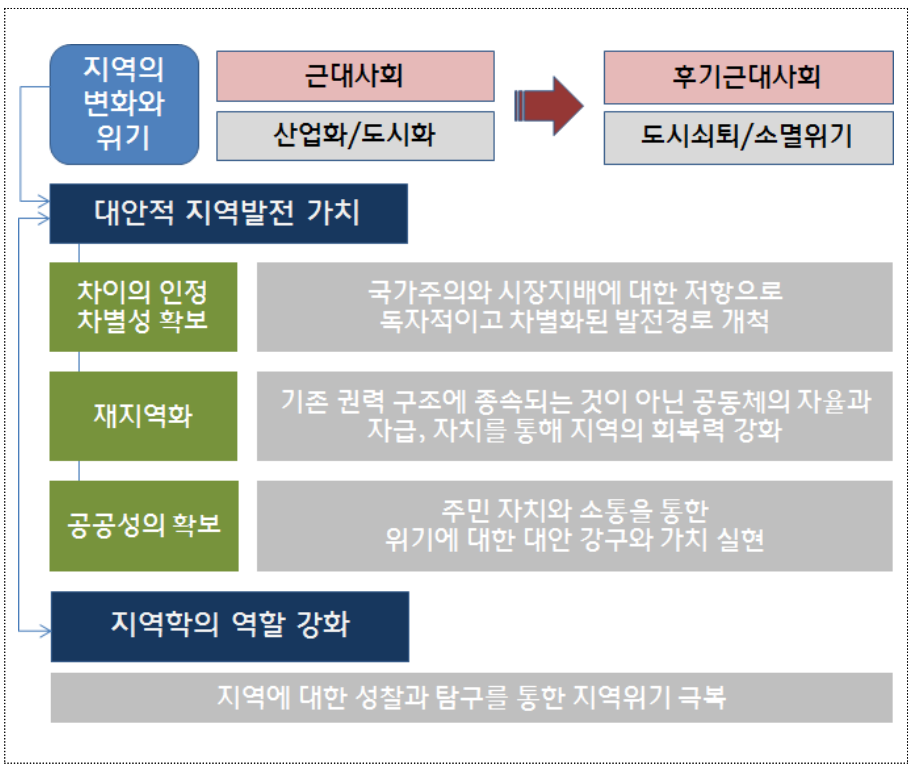
하지만 과거와 같이 국가 중심의, 다소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기능재편으로 이러한 지역의 위기가 쉽사리 극복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역위기는 그간 국가와 시장이 성장과 효율성의 명분으로 전개한 다양한 시도들로 인해 유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지역발전은 공동체의 원리를 국가영역과 시장영역에 관철시키는 것으로, "공동체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철학에 의거하여"(김영철, 2012a:12) 지역사회를 재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논의를 정리하여 대안적 지역발전의 가치를 ①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 ② 재지역화(relocalization) ③ 공공성의 확보로 개념화하였다.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는 기존의 국가주의와 시장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발전경로의 개척을 의미한다. '재지역화'는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 권력구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자율과 자급, 자치를 통해 쇠퇴하는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성의 확보는 주민 자치와 소통을 통한 위기에 대한 대안 강구와 가치실현을 뜻한다.

2. 지역학 :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

이상과 같은 대안적 지역발전에 대한 가치 실현은 지역에 대한 성찰, 지역을 둘러싼 제반 환경 및 주민들의 삶에 대한 탐구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지역학이 일상 생활권을 지역 주도의 주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는 이러한 지역학의 핵심적 탐구 대상임과 동시에 지역학에 실천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 Ⅱ-10]과 같다.



[그림 Ⅱ-10]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학의 역할

제3장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현실

제1절

지역학의 개념과 접근방향

1. 지역학의 개념

현재 직면한 지역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지역의 진단을 토대로 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들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유우익(2004)은 지역에 관한 연구의 강화가 국토 및 지역계획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특히 국토(지역) 계획이 경제성장의 수단에서 벗어나 환경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적 욕구를 담을 수 있는 패러다임 재정립에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지역문화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려는 움직임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보였으나, 하나의 학문적 틀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김석준, 2003; 김영일, 2012:186 재인용)라고 할 수 있다.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며, 기존에는 지역연구(regional studies)나 지역과학(regional science)과 구분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사전적인 의미로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즉, 지역학은 장소의 이력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작업으로, 역사·문학·철학·지리·사회·건축·도시·조경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조명하는 「융합학」이다(송인호, 2012). 또한 지역학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학문'(박찬식, 2017)이라 할 수 있다. 지역학은 학문 자체가 가지는 고유 특성과 함께, 일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주체적인 접근 및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박찬식(2017)은 '① 지역학은 주로 각 지역 명에 접미사 '학(學)'을 첨언, ② 공간적으로는 해당지역에 초

점을 둔 연구 대상으로 제한, ③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 바탕, ④ 학문적 영역으로는 융복합 학문적 접근을 통한 학제적 학문을 지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학을 'regionology'로 규정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걸친 학제적 관점을 통해 현장으로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학은 그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국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제지역학과 한 국가 내부에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지역이나 생활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내지역학으로 구분된다. 국외에서는 국제관계학과 연관된 것을 '지역학(regional studies)'으로, 국내 지역(지방)에 대한 연구를 '지방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모두 '지역학'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역연구나 로컬리티 연구, 향토학 등으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어 용어사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잉개발(난개발), 지역정체성 변동, 지역쇠퇴를 넘어 지역소멸 등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에 관한 통찰력과 통합학문(inter-discipline)적 접근이 통계적·계량적 분석결과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역학은 지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연계될 수 있는 매개이자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현재 및 미래의 가치화하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2. 지역학의 접근방법과 문화의 중요성

가. 지역학의 접근방법

지역학은 학제 간 총체적 접근을 통한 여러 학문 간의 융합을 꾀하되, 지역과 지역주민 중심의 지속적이며 주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종합학문(김양식, 2017:51)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학은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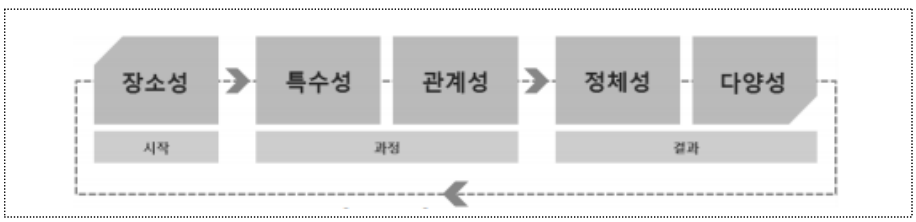
5) 자문회의 내용을 연구자 정리(2018.4.30.)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으로 통칭하여 표기한다.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지역의 미래방향을 제시(정정숙, 2014:19)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정정숙(2014)은 지역학의 속성을 ① 장소성 ② 특수성 ③ 관계성 ④ 정체성 ⑤ 다양성 등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학이 발달한다고 강조한다.

[표 Ⅲ-1] 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

속 성	내 용
장소성	• 특정 장소로서의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특수성	• 특정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일상적 삶의 과거·현재적 해석과 미래의 방향 도출
관계성	• 해당 지역의 과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할 때,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지역주민 간 혹은 주변지역 혹은 중앙의 삼권(입법·행정·사법)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됨.
정체성	•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 하는데 기여함.
다양성	•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그것들의 총체인 국가·지구촌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 출처 : 정정숙(2014), p.14 내용을 연구자 재정리



[그림 Ⅲ-1] 지역학 속성들의 관계도

* 출처 : 정정숙(2014), p.14

손명철(2017)은 지리학 분야의 지역학인 '지역지리학'의 미래지향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그는 과거 지역지리학의 접근방법이 경험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을 알고, 이해하고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신(新)지역지리는 지역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접근방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표 Ⅲ-2] 전통지역지리와 지역지리, 신지역지리 비교

구분	전통지역지리	지역지리	신지역지리
목적	영토에 관한 지리적 정보 제공	장소·공간에 대한 이해·공감·애정 고취	로컬리티의 역동적인 생선·변화 과정 설명

구분	전통지역지리		지역지리	신지역지리
철학적 배경	(소박한) 경험주의		경험주의·인간주의·구조주의	구조주의·실재론·포스트모더니즘
연구방법	사실 기술(記述)		기술·설명·이해·해석	설명·이론화·작은 이야기 추구
고유성의 동인	지역 내 자연·인문적 제요소의 결합		지역 내 제 요소의 결합 및 지역간 상호작용	지역간 상호작용
연구이면의 함의	지역을 알기 위한 도구		지역을 알고 이해하고 돌보기 위한 도구	지역을 알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
논의/연구시기	서구	기원전 4세기~	19세기 후반~	1980년대 중·후반~
	한국	12세기 중반~	1970년대~	1980년대 후반~

* 출처 : 손명철(2017), p.654

결국 지역학은 정체성이라는 미명 하에 '회고적 접근' 으로 역사주의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의 과거 사실을 탐구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며, 미래지향적이며 가치추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필요한 지역학은 소위 학문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정책지역학'이어야 한다(자문회의 내용, 2018.5.16.)는 의견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지역학이 지나친 아카데미즘을 탈피하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공공정책 추진의 논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은 지역학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가치 발굴 및 창조를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가 지역학에 있어 숙고해야할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언급한 지역학의 5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첫째,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간 지역연구가 중앙의 시선으로 접근하거나 몇몇 객관적 지표로 지역 간을 단순 비교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 자기발전성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적 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가치를 발굴한다. 시간 속에 묻혀 있는 지역의 가치, 즉 숨겨진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지역학의 핵심 목적이다. 셋째,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즉 연구자 중심의 지역학이 가지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 혹은 공동체 참여형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6) 전문가 자문회의 인터뷰 내용을 연구자 정리(2018.5.16.)

것이다. 넷째, 지역의 가치를 창조한다. 이는 발굴·보전된 것을 새로운 지역의 가치로 새롭게 조명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지역에 집중하되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지역학을 지향한다. 즉, 폐쇄적 지역주의로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지적 지역에 머무르는 지역학이 아니라 지역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생을 지향하는 '일본상생학(日本相生學)'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지역학 연구가 주로 행정구역 단위(광역·기초)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역학연구센터 또한 이들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마을(village), 지구(district) 등과 같은 소지역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을은 정주체계(settlement system)상 국토공간의 생활권으로 볼 때, 최하위의 최소정주단위이며, 상위지역 단위를 구성하는 기초 셀(김선희 외, 2016)이다. 하지만 소위 로컬이라 지칭되는 이들 소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부분으로 자산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산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었다(하용삼·문재원, 2011). 또한 이들 소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마을은 쇠퇴와 소멸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므로, 이들에 대한 기록과 연구, 그리고 재생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나. 지역학에 있어 '문화'의 의미

특정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다. 가장 소박하게 문화가 '삶의 방식' 혹은 '생활양식'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지역의 모든 활동들이 그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학에 있어 '문화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박재환, 2013:3).

박재환(2013:4-6)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연구'는 그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정신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이 그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그 지역 주민의 정신과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연구는 지역민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천착에서 출발할 때 종전의 객관화된 문화연구를 넘어 생생한 실천적 지식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및 지역공동체의 형성과정, 정체성 및 독특한 생활양식, 쇠퇴 및 소멸의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 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성 기술적 혹은 지지(地誌)적 성격의 지역학 연구를 넘어 '지역문화'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 등 문화와 관련된 공공기관 내에 지역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조사·연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실제 지역별 지역학연구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지역문화에 대한 재평가, 고유의 정신문화 및 문화자원의 발굴·보급·공유를 지역학의 주요 과제로 설정(정정숙, 2014:4)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

본 연구에서 지역학의 개념 및 접근방법에 관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동양상을 반영하여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 연구의 방향을 크게 ①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③ 지역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으로 설정하였다.

가.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근대 산업화시대의 도시팽창과 재개발, 그리고 후기산업화시대의 도시쇠퇴와 축소로 인해 파괴되고 소실되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및 미래자산으로의 활용인 미래유산 정책은 공공문화자산의 회복과 공유, 그리고 미래가치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와 도시민 사이의 장소기억에 내재된 자생적 콘텐츠의 활용과 장소적 경험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권영재, 2017). 지역학 연구는 이러한 사업의 근간

이 되는 기반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학은 개발 혹은 쇠퇴에 의해 소실될 위기에 놓인 지역 내 공공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공동체성 및 시민의식 강화,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학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의례나 스토리를 끊임없이 재발굴·재발견·재창조함으로써 각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게 하고 경제적 부유함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정정숙, 2014). 또한 지역학 연구를 통해 발굴된 일상생활의 경험과 기억, 지역의 설화 등은 이야기 산업[7]에 중요한 자원이자, 수요자와 밀착된 특성으로 인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이상열·노영순, 2017). 예를 들어, 최근의 TV 드라마나 영화들은 국고문헌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나 설화 등에 주목하여 최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참고] 설화를 소재로 활용한 드라마

- 드라마 「도깨비」는 우리의 설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도깨비 관련 설화와 역사 속 이야기에 판타지와 멜로 형식을 결합하여 판타지 드라마 열풍을 이끌었음.
-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은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 속 인어설화를,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은 허균의 「홍길동전」과 이기장수 설화를 소재로 활용하였음.

* 출처 : 이상열·노영순(2017), p.24 내용을 연구자 정리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역적')

*사진출처 : 조선일보(2017.01.26.), 대중문화… 說話를 소환하다), MBC 홈페이지(http://cue.imbc.com/)

7) 이야기산업이란 "이야기 원천소재의 조사·발굴, 이야기의 창작·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의 원천인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야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16~'20)」을 발표하였다(이상열·노영순(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한국문화원연합회(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0)

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지역쇠퇴 및 소멸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지역의 공동체성은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된다. 지역학은 시간을 거슬러 축적된 공동체의 기억, 의식 그리고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로컬리티 기록화'를 들 수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생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설문원, 2012b).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주목해야 할 양상은 기록생산주체들의 참여이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기억을 기록으로 포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기억의 담지자이자 기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30~40년간 로컬리티 기록화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류 유산기관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했던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아카이브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설문원, 2012a). 설문원(2012a)에 따르면, 최근 들어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내용과 구현방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집 중심의 기록화 전략에서 현재적 해석과 활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활용성). 둘째, 증거로서 기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의 재현을 고려한 전략을 수용하고 있다(재현성). 셋째,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가 기록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기록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억과 경험도 기록으로 포착하고 있다(개방성). 네 번째는 포용성으로, 미리 계획되지 않은 영역이라도 기록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기록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포용성). 마지막은 특정인과 공동체에 의한 일방적 기억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기억을 수용한다(다양성). 로컬리티 기록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로컬리티 기록화 패러다임의 전환

범주	구성요소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	기록화의 목표	•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측면이 선별된 기록을 통해 적절하게 재현되고, 그러한 기록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 (Cox, 1996:112)	•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설문원, 2011)
	기록화의 우선순위	• 지역사의 전반에 대한 분석(전문가 및 지역주민)에 기초하여 우선 기록화 대상 선정	• 기록을 남기지 못했거나 유실 우려가 높은 집단, 장소, 주제에 관한 기록화 우선
구조	기록화의 개념	• 대상에 관한 기록의 협력적 수집, 생산	• 대상의 재현을 위한 기록정보 자원의 네트워크화(기록을 활용한 대상의 재현 : 수집, 생산, 네트워크, 콘텐츠 설계 포함)
	맥락화	• 출처주의에 따른 정리와 기술	• 정리, 기술 및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
	확보대상 기록	• 지역사 및 지역민 활동의 증거로서의 기록	• 재현할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자원 전체(– 다양한 형식과 매체의 기록, – 통계데이터, 공간데이터, 지도,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 – 단행본, 논문, 영상물 등의 2차 자료, – 웹 정보원
유지/활용	기록화의 진행방식	• 맥락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구조에 따라 기록화 실시(격자형)	• 다양한 출처(주체), 토픽, 장소 등에 관한 기록(컬렉션 혹은 콘텐츠)을 추가하는 방식(벌집형)
	협력과 참여	• 소장기관	• 소장기관, 다수의 이용자 및 기록생산자
	기록화 결과의 활용	• 소장기관에 접근	•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접근

* 출처 : 설문원(2012a), p.443

여진원·장우권(2016:391-392)에 의하면,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된 접근방법은 ① 지역사의 포괄적 기록화 ② 도시·공간계획 관점에서의 기록화 ③ 공동체 기록화 ④ 생활사의 기록화 등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기록화의 목적에 따라 하나 내지 복수의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접근방법

에 걸쳐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특히 '공동체 기록화'는 참여에 기반한 기록화가 필수적 기본 전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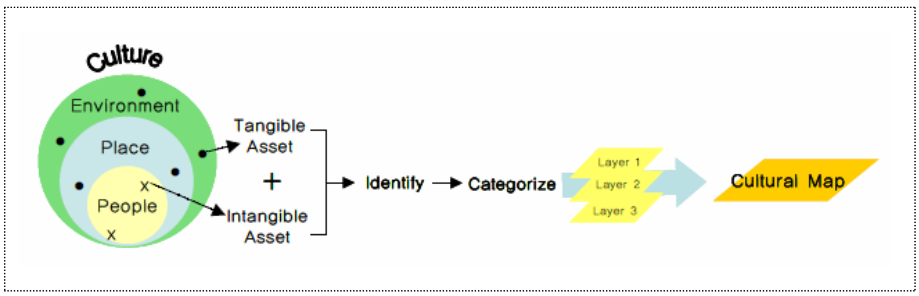
[표 Ⅲ-4]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접근법	기록화 방식의 특징	수집기록의 특징	운영체계 및 아카이브 유형	학문적 배경
지역사의 포괄적 기록화	• 지역 내 기록소장 기관 참여 • 협력 수집 및 통합 검색을 위한 종합적 검색도구 필요	• 전 주제 분야 포괄	• 지속적인 협력 수집체계의 유지	기록학
도시·공간계획 관점의 기록화	• 사라져가는 공간의 이력 중시 • 역사성 있는 도시계획을 위한 활용성 고려	• 공간 기록과 장소 경험에 관한 기록 •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이미지 및 영상기록 중시	•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 사진 아카이브	건축/도시 계획학
공동체 기록화	• 공동체의 정체성 함양 및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접근 • 참여형 기록화 방식 중시 • 교육콘텐츠와 연계성 강조	• 이민자, 다문화 공동체가 생산에 참여 • 이주 후 지역 경험, 이주와 정착의 역사, 자산들의 뿌리에 관한 기록 • 전통적 마을공동체의 민속자료	• 커뮤니티 아카이브 • 마을 아카이브	사회학, 인류학
생활사의 기록화	• 미시사 관점에서 주변부 집단의 일상 생활사를 기록 • 전통생활사의 기록	• 구술사 비중이 큼	• 생활사 아카이브 • 민속 아카이브 • 구술 아카이브	사학, 인류학, 사회학

* 출처 : 여진원·장우권(2016), p.392

공동체 참여형 지역학의 또 다른 유형으로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혹은 '주민 참여형 문화지도(cultural map)'의 작성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매핑

의 '광의'의 목적은 지역문화 이해를 통해 역사/문화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협의'의 목적은 지역 내 문화자원, 활동, 관련 경험들을 기록 정리하여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이미지를 발굴하는데 있다(박정은, 2008). 이를 통해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도제작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지역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등의 파생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Ⅲ-2]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의 작성 과정

* 출처 : 박정은(2008),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문화지도 작성과 활용방안, 국토정책 Brief, 제195호

다.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

지역쇠퇴 및 소멸 현상은 비단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 도시의 원도심은 기능쇠퇴와 더불어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노후쇠락과 도심공동화(都心空洞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원도심 및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활성화 혹은 재생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들이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재활성화사업(도시재생, 장소마케팅, 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할 경우, 장소 본연의 정체성을 왜곡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시재생 등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전과 후의 로컬리티(지역성)를 계승·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여진원·장우권, 2016). 따라서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때, 반드시 기록화에 기반한 지역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역학 관련 법제 및 정책 계획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 국정 목표에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농산어촌 관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국정 목표에 따른 국정 과제에 지역학 관련 세부 과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국정 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포함된 국정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가 목표로 설정되고,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정 정도 지역학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2018)에서도 '지역문화분권 실현'과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를 의제로 설정하였지만, 그 토대가 되는 지역학과 관련한 과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지역학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없다. 다만, 몇몇 법률에서 지역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조문이 포함된 법률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교육부의 「평생교육법」 및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의 지역학 관련 조문들은 지역사(地域史) 및 지역문화 관련한 기초문헌이나 자원조사 및 이에 대한 정보화에 집중된 경향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해당 법률들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종합학문으로서 지역학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 절에서는 이들 법률을 문화 관계 법률 및 교육 관계 법률로 나누어 지역학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표 Ⅲ-5] 지역학 관련 법률

구분	법률명
문화 관계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교육 관계 법률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1. 문화 관계 법률 및 정책 계획

문화 관계 법률 중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법 제1조)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법 제2조제1호)으로 정의하고, 지역문화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추진(법 제3조제4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측면에서 지역학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이 중심이 된다. 이에 비해서 지역문화 진흥에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역문화의 보존·발굴이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조문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지역문화 관계 정책계획에서는 지역학 관련 사항을 일정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문화체육관광부, 2015)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2015년 2월에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 기본계획도 법에서 강조된 조문과 관련한 정책사업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지역문화 발굴 창조'의 과제로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가치 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을 설정하였는데, 이들 과제가 지역학과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추진과제로 설정된 '지역문화 가치 발굴'에서 '향토문화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지역학의 성과를 전제로 하는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이 계획에서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 외국인주민의 증가 등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지역문화의 획일화,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역량 부족 등을 중요 문제로 제시하였지만,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나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문화자치 역량의 강화 등에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정책 사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인문학의 정의에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까지 포함하고, 인문정신문화를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역학을 언급한 조문은 없고, 연구나 교육 등을 명시한 조문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편적 성격의 인문학이나 인문정신문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역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자산과 자료의 체계적 발굴부터 연구·활용까지 지역학 활동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과 지원 근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라는 분야를 특정하고 있어서 종합학문으로서 지역학 진흥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소관 법률이라는 성격상,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로 나뉘어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있다. 그중 교육부가 수립한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17~2021)」(교육부, 2017)에서는 지역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를 연구하는 '글로벌지역학'에 한정된다. 계획의 특성상, 국내 각 지역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관련한 정책 사업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3대 추진전략 중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의 과제로 제시된 '인문소양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에서 "지역 인문학센터와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고유의 인문 문화 확산과 인문 환경 조성"은 지역에서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문화체육관광부, 2017)에서는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 중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에 포함된 "(민간저술 촉진) 자서전, 향토문화연구, 지역인물조사 등 저술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개인경험·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산" 사업은 지역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사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계획의 주요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계처럼, 지역학의 성과를 토대로 하는 활용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제정되었다. 지방

문화원은 이 법에 의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역학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이 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문화사업으로 8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은 지역학에서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다. 또한 이 법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도 지역문화라는 특정 영역으로 제한되는 본질적인 한계는 가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역학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이 처한 재정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상열·노영순, 2017).

2. 교육 관계 법률 및 정책 계획

지역학과 관련되는 교육 관계 법률로는 「평생교육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문화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다만, 이 법이나 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지역학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 지역에서 지역학 강좌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학이 평생학습과 연계되는 데에는 지역 단위에서 인문학 관련 평생학습이 강조된 것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2)의 계획기간(2002~2006) 종료 및 「평생교육법」 개정(2008.2.15.)에 따

라서 2008년에 제2차 계획으로 수립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2013~2017)」(교육부, 2013)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의 하위 과제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들이 지역 단위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흐름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2018~2022)」(교육부, 2018)에서도 나타난다. 제4차 계획에서는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의 하위 과제로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거나 인문학 기반의 평생학습도시 육성과 인문강좌 운영, 한국학 대중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도 위의 문화 관계 법률의 사례처럼 지역학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다. 다만, 이 법 제5조에 의한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나 법 제12조에 의한 사료 조사 등이 지역사 분야의 지역학 진흥과 관련될 수 있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법 제2조제1호)을 말하는데, 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료의 조사를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국외의 한국사 사료조사를 실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한 활동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학 연구를 위한 사료의 수집이나 연구, 활용 등과는 거리가 있고, 내용적으로 사료라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한계를 가진다.

제3절

국내 지역학 현황 및 관계자 인식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정책 동향

가. 지역학 진흥사업 및 활동

국내에서 지역학은 1990년대부터 조금씩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2000년대 이후로 관련 기관·단체 설립이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연연구원이나 관내 대학의 연구소 등을 통해서 지역학 진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포지엄이나 포럼 등의 학술적인 행사나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이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와 같은 그러한 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지역의 역사문화자료 등의 수집이나 기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경향이다.

이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같은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방문화원이나 관내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명칭을 붙인 '○○학' 강좌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 혹은 강좌와 연계한 관내 답사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평생학습관을 통한 지역학 강좌 운영이다. 한 예로 충청남도의 충남학 진흥사업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는 평생교육의 비전을 "배움의 숲, 인재의 땅 : 충남행복발전소"로 설정하고, '시민 역량 확산' 및 '지역 역량 개발'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충남학(지역학) 활성화"를 설정하고 있다. 충남학 진흥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충청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남학 육성을 위하여 2013년에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을 골자로 하는 「충남학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교재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 1월에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4년 2월에 도내 권역별로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양대학교를 충남학 거점대학으로 지정

하고 충남학 강사를 양성하여 시·군 단위의 충남학 강좌와 교육 과정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충남학 강사 양성을 위하여 2014년에 심화연수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4개 거점대학의 충남학 강사 양성과정을 대상으로 한 충남학 강사 자격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과한 예비 강사 대상의 심화연수 후에 2014년 9월부터 지역에서 충남학 강사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배출된 충남학 강사들은 도내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 등에서 충남학 교재를 활용한 15주 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교재의 내용은 충남의 지리, 역사, 학문, 유교 실천, 사회공동체, 문화 예술, 건축, 문학, 충남을 노래한 옛 시(詩), 여성문학, 계룡산민속, 전통축제, 금강이다. 또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체계적인 충남학 육성을 위하여 2015년 7월에 지역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로 충남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 수 13인, 임기 2년)를 구성하였다. 또한 충남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충남학 만화 제작, 포럼 운영, 청소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에는 충남학 답사 모바일 앱인 '충남학 가봐U'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8)]

[표 Ⅲ-6] 충남학 강좌 커리큘럼

주	분 류	주 제	내 용
1	총론(지역학)	충남학이란 무엇인가	• 충남학 개요, 충남의 정체성, 총론
2	지리와 역사 (Part 1)	충남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가	• 지리적 특성, 자연지리와 문화지리
3		한눈으로 보는 충남역사	• 지역사로서의 충남역사
4	선비의 학문과 실천 (Part 2)	충남유학의 학맥과 학풍	• 유학적 학맥과 학풍의 특색
5		충남지역 항일 독립운동	• 일제와 싸운 구국적 독립운동사(1896-1945)
6		양반의 고장, 충남	• 충절의 고장, 예의의 고장, 양반 생활문화
7	공동체 사회와 민속 (Part 3)	향촌사회와 공동체 문화	• 혈연공동체와 촌락공동체 족계 동계 향약 등 분석
8		충남 최고의 영산 : 계룡산	• 산악신앙과 영산 계룡산, 계룡산 국행제 등
9		충남의 전통축제 -신명나는 충남안-	• 기지시 줄다리기, 저산팔읍 역말 장터제사, • 은산별신제, 백제문화제, 기타 축제
10	돋보이는 문화유산	백제의 미소에서 추사고택 까지	• 백제의 미소, 남북조 문화의 조화 백제후의 벡제

8)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http://www.cile.or.kr) 참조(2018.9.1. 최종 접속)

주	분 류	주 제	내 용
11	(Part 4)	지역문화로 본 충남의 고건축	• 충남의 건축 문화유산(충남건축의 특색 찾기)
12	금강(錦江) 누정문화와 여성문학 (Part 5)	금강의 누정 문화	• 백제왕의 누정(임류각), 나루터, 창고, 정자, • 강학처 누정, 휴식처 누정
13		충남의 여성문인과 문학	• 충남 여성문인의 삶과 문학, 그 의미와 특성
14	문화권과 비전 (Part 6)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성격	• 지명유래, 지형 교통로, 개척적 문화수용, 역사적 성격, 개척정신
15		금강유역 충남유교문화권의 가치와 전망	• 금강과 금강의 활용가치, 금강유역에 꽃피운 유교문화, 충청교문화권의 설정과 전망

한편, 지역학이 지역의 정체성, 문화자원 발굴 및 홍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역사 및 지역문화교육 등과 연계되면서 강좌나 답사프로그램 운영에서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관련 사업이 확장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관내 대학에 학점 이수가 가능한 지역학 강좌를 개설하거나 지역학연구소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학연구소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끊길 경우에 그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밖에 하나의 경향으로 지역학과 연계한 이야기꾼이나 마을해설사 양성사업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부평학 스토리텔러' 양성,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구술사' 양성, 전라북도 전주시의 '마을술사' 사업 등이 있다[9]. 부평학 스토리텔러 양성은 2013년부터 부평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강사활동 경험이 있는 구민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8주(주 1회)에 걸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평의 역사·민속·경제·문화·환경 및 정책 등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자에게는 부평학 스토리텔러 자격증이 수여되고 관내에서 부평학 관련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혜택이 부여되었다. 스토리텔러 양성교육은 2013~2014년에 진행되었고, 약 25명이 교육 이수 및 최종 평가를 거쳐서 스토리텔러로 양성되었다. 부평구는 부평구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양성된 스토리텔러들에 대한 심화교육

9)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구술사' 양성사업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마을술사'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Ⅳ장에서 다룬다.

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부평학 스토리텔러 레벨 업(Level up!)"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 9월 6일~10월 18일 기간에 주 1회 2시간씩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양성된 스토리텔러들은 부평구 관내 학교와 도서관, 평생학습기관에서 스토리텔러로 활동 중이다. 2018년 활동의 한 사례를 보면, 양성된 스토리텔러들은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부평학 스토리텔러-부평이야기'의 강사로서 부평구 관내 학교와 도서관, 평생학습기관에서 스토리텔러로 활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2개월 동안 유치원이나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회당 30~120분 내에서 진행된다. 그 내용은 우리 부평구의 역사, 인물, 생태, 문화, 지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10] 이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의 평생학습으로 지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로 양성된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학 맘(Mam)강사' 양성도 동일한 사례다. 또한 이와 같이 지역학 측면에서 교육과 인력 양성, 일자리 개발이 연계되는 사례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마을스토리텔러 양성에서도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지역학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동향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각 지역의 지역학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

지역			내용
서울·인천·경기	서울		• 1993년에 서울시립대학교 부설로 독자적인 지역학연구소인 서울학연구소를 최초 설립. 1949년에 시사편찬위원회(현 서울역사편찬원)를 설치하여 상설화
		성북구	• 성북문화원이 전문가를 활용한 성북학강좌(성북학개론) 및 강좌와 연계한 관내 답사프로그램 운영
	인천		• 2002년에 인천대학교 부설로 인천학연구원이 설치되어 지역학연구 등

10) 부평구청(https://www.icbp.go.kr) 및 부평구평생학습관(https://www.icbp.go.kr) 참조(2018.9.1. 최종 접속).

지역			내용
			진행. 인천문화재단이 2016년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합하여 역사문화센터를 설치
		부평구	• 부평구(평생학습과)가 2013년부터 부평학 스토리텔러 양성사업 시행하였고, 부평구평생학습관이 주관
	경기		•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경기학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에 경기학연구실(현 경기학연구센터)을 설치
		부천	• 부천문화재단이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지니스연구소과 정책 발굴과 인재육성을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그 일환으로 부천학 사업 추진
		수원	• 수원시는 인문도시 사업에서 수원학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4년에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의 기능 및 시사 편찬 사업 등을 이관하여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안성	•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안성학강좌 운영
		오산	• 오산시와 오산문화원 오산향토문화연구소가 오산학연구(총서) 발간
		용인	• 용인시와 용인문화원의 용인학연구소가 교재를 개발하여 관내 6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 개설 및 운영
		의정부	• 의정부시가 의정부학 정립을 위한 방안연구를 추진하여 의정부학 사업을 시행 중이며,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의정부학아카데미, 의정부학큐레이터 양성과정 운영
		이천	• 이천시평생학습센터가 이천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천문화원은 이천인문학총서를 발간
		평택	• 평택문화원이 평택학 강좌를 운영하고, 평택대학교 평택학연구소와 함께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포천	• 포천시가 포천학총서 발간 및 대진대학교에 포천학강좌 개설
강원	강원		• 강원개발연구원(현 강원연구원)에 2002년에 설치되었다가 2010년에 폐쇄되었던 강원학연구센터를 2018년에 재설치 후 강원학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속초	• 속초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가 속초학 정립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부에서는 속초와 양양이 함께 통합적인 지역학을 모색할 필요성도 대두
		원주	•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가 원주학연구 수행
		홍천	• 홍천군과 강원신문이 홍천학심포지엄 개최
대전·세종·충청	대전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대전학강좌 운영 등의 사업 추진
		대덕	• 대덕구평생학습센터에서 대덕학프로그램 운영
		유선	• 유성구평생학습센터에서 유성학프로그램 운영
	세종		•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연계하여 세종학 강좌(세종연합교양대학) 개설
	충북		• 1999년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최초로 충북개발연구원(현 충북연구원)에 지역학충북학연구소 설치

지역			내용
		단양	• 단양군은 단양군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단양학아카데미 강좌 운영(2017)
		옥천	• 옥천군평생학습원에서 옥천학강좌 개설 운영(2012)
		제천	• 세명대학교에서 제천학 강좌 운영
		진천	• 진천군평생학습센터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협력하여 '진천학 맘(Mam)강사' 양성과정 운영
		청주	• 청주시가 관내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원 설립 및 사업 지원(3년간)
	충남		•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충남학 거점대학 및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충남학 사업을 병행
		공주	• 공주시가 공주대학교에 공주학연구원 설립 지원
		논산	• 논산문화원이 논산학 총서 발간, 논산시와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이 중고생 등 대상의 논산학 특강 개설 운영
		당진	• 당진시가 문화예술학교에 당진학 강좌를 개설(2012)하고 학점인증 편입 추진 및 당진학 배달강사 양성 추진(2013), 현재 당진문화원이 당진학 강좌를 진행
		보령	• 보령시가 충청남도의 충남학 진흥사업과 연계한 보령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여	• 부여학 총서 발간 및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보조를 받아서 부여학 강좌 운영
		서천	• 서천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 신규 교원을 대상으로 체험으로 배우는 서천학 연수 시행
		예산	• 예산군이 2019년 예산 지명 사용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문화원과 함께 예산학 진흥 추진(예산학 총서 발간, 예산학 강사 양성 및 예산학 활성화 계획 수립)
		아산	•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가 아산시(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아산문화대전 주관, 아산학총서 발간
		천안	• 천안시가 나사렛대학교에 천안학 강좌 개설(2009), 현재 관내 소재 전 대학에 강좌 개설. 천안연구원은 천안학UCC경연대회 개최
		청양	• 청양도서관이 '길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청양학 학습과정을 운영
		태안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태안학강좌 운영
		홍성	• 홍성군과 청운대학교와 함께 홍성학강좌 개설 운영. 2018년에 청운대학교에 홍성학연구소 설치
광주·전라	광주		• 2017년에 광주전남연구원에 남도학연구센터를 설치. 광주문화재단이 광주학 정책포럼, 콜로키움 등 운영. 전라남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광산	• 광산문화원이 광산학 수학여행프로그램 운영
	전북		• 2018년 전라개도 천년 기념사업에 지역학으로서 전북학 사업을 포함

지역			내용
		군산	•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가 인문도시사업으로 군산학 강좌 추진
		완주	• 2015년 수립된 완주군 문화예술진흥계획에서 핵심키워드로 완주학을 제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 추진
		익산	• 원광대학교가 인문도시사업으로 익산학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원광대학교 부설 익산학연구소는 프라임사업으로 일환으로 인문강좌 추진
		장수	• 시와(사)아리울 역사문화가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로 찾아가는 장수학' 프로그램 운영
		전주	• 전주시가 민간사료 수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전주역사박물관이 전주학연구 학술지 발간 및 총서 발간, 전주학 시민강좌 운영
	전남		• 2017년에 광주전남연구원에 남도학연구센터를 설치. 광주광역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강진	• 강진군이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강진학 정립 모색
		곡성	• 곡성문화원이 심청과 곡성을 연계하여 심청곡성학을 추진
		광양	• 광양문화원이 광양학포럼 운영
		나주	• 나주문화원이 나주학강좌 운영. 2018년에 나주시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라도정명천년기념으로 '나주학융합아카데미' 운영. 나주시의 나주시 전라도정명천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가 나주학연구소 설립 논의 중(기본계획 수립 등)
		여수	•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수학 강좌 운영
부산·대구·울산·경상	부산		• 2003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학사업 추진
	대구		• 2005년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현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대구경북학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
	울산		• 2006년에 울산발전연구원 내에 울산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 중
	경북		• 2005년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현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대구경북학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
		경산	• 경산시는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경산학 교양과목, 강좌 등을 개설
		김천	• 경북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김천학 강좌 운영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이 「안동학연구」를 간행하고 있으며, 이는 안동과 국외 유사 문화권 간 비교연구를 통한 안동문화의 특수성 규명을 목적으로 발간 시작 • 2001년에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가 일본학 연구 모델 적용을 제안하면서 2002년부터 발간(정정숙, 2014: 80)
		포항	• 포항시와 포항공대가 포항학 인문아카데미 추진(포항학연구센터 설립 논의)
	경남		• 경남발전연구원에 역사문화센터 설치 및 경남도의회의 경남학연구회 운영
		김해	• 김해문화의전당과 김해여성복지회관이 김해학강좌 개설. 인제대학교의 김해학 교양강좌 개설 및 김해고등학교의 김해학강좌 운영 등 학교 차원의 김해학사업도 시행

지역			내용
		사천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가 사천학 교양강좌 개설
		진주	•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주학 논의
		창원	• 문화예술특별시 창원비전(2016)을 수립하며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창원학 정립'을 전략에 포함. 마산YMCA에서 창원지역학아카데미 개설
		통영	• 통영학연구센터 설립 논의
제주	제주		• 2011년에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어 발굴 · 보존 등 제주학사업을 추진
		서귀포	• 서귀포시가 2012년부터 서귀포학 정립 추진 및 포럼 운영

* 출처 : 연구자 직접 조사

나. 지역학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지역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례들이 나타난다. 지역학과 관련된 조례는 크게 지역학 진흥을 규정한 조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학연구센터 등의 기관 또는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그리고 민간기록물의 수집 등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Ⅲ-8] 지역학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 시기
지역학 진흥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	2012 제정 (2017 폐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제정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제정
기관 · 조직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 제정
	강원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 제정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 제정
민간기록물 수집 ·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1 제정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제정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검색을 통해 연구자 작성

지역학 진흥을 규정한 조례에는 2015년에 제정된 「경기도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2년에 제정되었다가 2017년에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

례」, 2017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례가 있다. 이 중 용인학 조례를 보면,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용인학을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용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용인시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으로 정의한다. 즉, 그 주요 영역을 역사와 문화로 설정하고, 그 목적을 지역적 정체성 및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각 분야의 발전 기틀 마련에 두고 있다. 용인학 조례에 명시된 관련 진흥사업으로 관내 대학 등에 용인학 강좌 개설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관내 소재 대학에 교양강의로서 용인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부산학 조례는 정의나 목적은 유사하지만, 부산학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진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지금은 폐지된 호남학 조례에서는 호남학을 "한국학을 전제로 그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으로 정의하여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학의 하위 범주로 호남학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의 조항에 '콘텐츠화'와 '지역 문화자원화'를 포함하여 지역학의 활용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지역학연구센터 등의 기관이나 조직 설치와 관련된 조례로는 201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년에 제정된 「강원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및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설치된 지역학연구소 또는 지역학센터가 별도 조례가 없는 데 비해서 두 사례는 별도 조례로 제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는 제주학을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위의 지역학 진흥 유형의 조례에 비해서 학문적 범주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였지만, 그 목적은 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지역학을 좀 더 종합학문으로 이해한 것은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정의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은 크게 9가지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제주학연구센터 조례의 틀을 가져온 강원학연구센터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7.9.27.〉
1. 탐라문화, 역사 · 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편,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에는 2011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2016년에 제정된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기록물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록사랑마을 지정·해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조문 구성이나 내용은 유사한데, 민간기록물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로 정의하여 구술채록과 박물이라는 자료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두 조례에 나타난 기록사랑마을이란 "마을단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록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마을"이며,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민간기록물 발굴 및 전시관 등의 시설 조성, 기록물 보존 관리 및 컨설팅 지원, 기념행사 개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총 9개소(2008~2016년 지정)가 지정되어 있다.

2. 지역학 기관 · 단체 현황

가. 일반 현황

지역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듯이,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학 관련 기관·단체에는 '○○학'을 직접적으로 표방한 명칭을 사용한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명'에 '문화'나 '역사' 혹은 여타의 분야를 지칭하는 명칭을 결합한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 명칭에 지역학을 표방하여 '○○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단체만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현황 파악을 위해 구글(google) 검색 및 한국언론재단 Big Kind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학술지 및 기관 정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각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명'과 '학'을 결합한 명칭으로 지역학 활동(2018.8.7. 최종 검색)을 전개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한 결과, 총 50개 기관·단체가 검색되었다. 이 밖에도 전라도 정명 1,0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나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처럼, 지역학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표 Ⅲ-9 참조).

[표 Ⅲ-9] 지역학 명칭을 사용한 기관 · 단체 현황

연번	지역		명칭(최초 설치 기준)	설치 주체	명칭 최초 사용 시기	비고
1	서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대학	1993	

연번	지역		명칭(최초 설치 기준)	설치 주체	명칭 최초 사용 시기	비고
2	·인천·경기	인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대학	2002	
3			인천학회	학회	2017	
4		경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현 경기학연구센터)	지역 문화 재단	2009	경기문화재연구원 전통문화 연구실이 경기학연구실로 개편(2009)되었다가 경기학연구팀(2013), 경기학연구센터(2015)로 개칭
5			경기학회	학회	2015	
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14	
7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지방 문화원	2017	기존 향토문화학술연구소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여 설치
8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지방 문화원	2014	기존 향토문화연구소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여 설치
9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	지방 문화원	2005	기존 수원문화연구소의 명칭 및 기능 개편하여 설치되었다가 2014년에 수원학연구센터 설치에 따라서 기능을 이관하고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로 개칭
10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지방 문화원	2010	기존 용인문화연구소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여 설치
11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대학	2000	
12			평택대학교 평택학연구소	대학	2014	
13			안산학연구원	민간 단체	2007	안산학연구소로 개소하였다가 2009년에 안산학연구원 설립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
14	강원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02	2002년 설치 및 2010년 폐쇄 과정을 거쳐 2018년 재설치
15	대전·세종·충청	대전	대전학연구회 (부설 대전학연구소)	민간 단체	2016	
16		충북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지자체 출연 연구원	1999	
17			청양대학 충청학연구소	대학	2000	

연번	지역		명칭(최초 설치 기준)	설치 주체	명칭 최초 사용 시기	비고
18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대학	2001	
19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원	대학	2016	
20		충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학연구부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04	2004년에 충청학연구부로 설치되었다가 충남학연구팀(2004), 백제충청학연구팀(2007), 백제충남학연구팀(2013), 충남학연구팀(2016)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조직 개편으로 해체
21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대학	2014	공주시 지원으로 설립
22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대학	2010	
23			청운대학교 홍성학사업연구단 (현 홍성학연구소)	대학	2012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홍성학사업연구단으로 시작 후 2018년에 홍성학연구소 설치
24			천안발전연구원 천안학연구소	민간 단체	2008	
25	광주·전라	광주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17	2015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에 따라서 기존 전남발전연구원 남도가람연구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
26		전북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대학	2017	
27			21세기 전북학연구회	민간 단체	1999	
28			정읍학연구회	민간 단체	2011	
29		전남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대학	2005	2005년에 호남학연구단으로 설치되었고, 2008년에 호남문화연구소와 통합하여 호남학연구원으로 개칭
30			곡성문화원 심청·곡성학연구소	지방 문화원		
31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	지방 문화원	2015	
32	부산·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03	

연번	지역		명칭(최초 설치 기준)	설치 주체	명칭 최초 사용 시기	비고
33	대구·경상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05	
34			대구경북학회	학회	2012	
35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06	
36		경북	경일대학교 경산학연구소	대학	2014	
37			경주대학교 독도·울릉학연구소	대학	2001	2001년에 울릉학연구소로 개소 후 2006년에 독도·울릉학연구소로 개칭
38			경산학회	학회	2014	
39			경주학연구원	민간 단체	2006	
40		경남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대학	2002	
41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대학	2005	
42			인산학연구원 함양학연구소	민간 단체	2009	
43	제주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11	
44			제주학회	학회	1996	1978년 제주도연구회로 설립
45			제주학연구소	민간 단체	1997	

* 출처 : 연구자 직접 조사

** 주 : 구글(google) 검색 및 한국언론재단 Big Kind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학술지 및 기관 정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된 '지역명'과 '학'을 결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단체 중 설립 시기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함.

나. 유형별 설립 시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검색을 통해서 파악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원권의 홍천학연구소, 호남권의 고창학연구회·남원학연구회·남도학연구소, 경상권의 경남학연구원처럼 해당

단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들 사례를 제외한 총 45개 기관·단체에서 설립연도가 확인된다. 그 중에는 지역학 명칭 사용 이전에 설립된 전신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원문화원의 수원학연구소처럼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학센터로 그 기능이 이관되면서 명칭 변경되거나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해체된 사례도 있다.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45개 기관·단체를 성격별로 유형화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대학, 학회 및 기타 민간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 성격이 16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내 부서 9개, 기타 민간단체 8개, 지방문화원 부설 연구소 6개, 학회 5개 지역문화재단 내 부서 1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여전히 학술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0] 지역학 관련 기관 · 단체의 유형

(단위: 개, %)

구분	지자체 출연연구원	지역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대학	학회	기타 민간단체
기관 · 단체 수	9	1	6	16	5	8
비율	20.0	2.2	13.3	35.6	11.1	17.8

* 출처 : 연구자 직접 조사

4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학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시기를 파악해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전에 설립 또는 설치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고, 1990년대 5개, 2000년대 18개, 2010년대 20개 기관·단체가 설립 또는 설치되었거나 지역학을 표명한 명칭으로 개칭하고 기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기타 민간단체 및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학회 등에서 지역학 기관·단체가 등장하고, 2000년대에는 각 지역 소재 대학에서 부설 연구소 등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0년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등을 지역학연구소로 전환한 지방문화원의 사례도 증가하였다.

[표 III-11] 유형별 지역학 기관 · 단체 설립 시기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계	5	18	20	43
대학 연구소	1	8	7	16
기타 민간단체	2	4	2	8
지방문화원 부설 연구소	–	1	5	6
지역문화재단 조직	–	1	–	1
지자체 출연연구원 조직	1	4	3	8
학회	1	–	4	5

* 출처 : 연구자 직접 조사

다. 운영 및 활동 현황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기관·단체 중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활동 현황이 파악된 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 및 활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이 파악된 기관·단체는 12개였고, 그중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조직 7개, 대학 연구소 5개였다.

1) 인력 및 예산

인력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설치된 7개 조직의 담당 인력 평균은 6.3명이었으나, 조직별로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8명까지 편차가 컸다. 담당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연구원의 제주학연구센터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경우, 대체로 정규인력은 연구직이 겸직하는 형태였으나,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에는 겸직이 아닌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력 확보 측면에서 타 출연연구원의 지역학센터에 비해 우수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설치된 지역학연구소들은 담당 인력 평균이 3.0명으로써 출연연구원들에 비해서 인력이 적었다. 이는 대학 연구소들의 특성상, 각 대학이 해당 연구소들의 예산 확보가 기본적인 경상경비에 한정되거나 사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출연연구원의 지역학센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예산 지원 및 사업 발굴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대학 연구소들의 상당수가 그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예산 지원이 끊겨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한 사례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사업

현황이 조사된 사례에서 보이는 지역학 활동은 주로 지역학 논총 등 정기간행물 발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총서 발간,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운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 운영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학 자료나 자원에 대한 조사와 자료집 제작,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축적하는 아카이빙(archiving)이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대학의 지역학 연구소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교양강좌의 운영도 두드러지는데, 대학에서의 지역학 강좌 운영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Ⅲ-12 참조).

한편, 지역학과 지역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한 활동들도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는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11]. 이 프로젝트는 충북학연구소가 추진하는 충북 재발견 사업(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청주 신항서원 가치 발굴 및 활성화, 청주 옥화구곡 재발견 등)의 일환이며, 충청북도의 대표 하천인 달래강(달천)유역의 자연 명소와 문화자원이 지닌 인문·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4월~11월 중에 추진된다. 프로젝트명에 포함된 '123'은 달래강의 연장이 123㎞인 점을 상징화한 것이다. 세부 사업은 학술포럼(2회), 지역 신문사와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하는 달래강리포트(20회), 전문예술인과 시민작가 등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예술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2018).

11) 충북학연구소의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Ⅳ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표 III-12] 지역학 관련 기관 · 단체 운영 및 활동 현황

구분	인력	운영재원	주요 활동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	지자체	○ 지역학 서적 발간, 지역학 연구네트워크 구축, 마을학포럼 개최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부산학총서 발간(자체예산 8,000만 원) • 지역학네트워크(자체예산 2,000만 원) • 한국지역학포럼(자체예산 2,000만 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 연구소	6	지자체	○ 지역의 인문 및 정신문화 정책연구, 지역학연구기관 교류, 세미나 · 학술대회 등 개최, 학술지 발간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대구시민주간 기념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총 1,000만 원 중 자체예산 500백만 원) • 지역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총 1,000만 원 중 자체예산 500백만 원) • 제5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세션 운영(자체예산 1,000백만 원) • 한국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자체예산 3,500백만 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3	지자체	○ 논총 및 교양서 발간, 구술자료 수집 · 발간, 과제 연구, 울산학포럼 운영 등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연구논총 및 교양서 발간(자체예산 2,100만 원) • 구술자료 수집 및 발간, 자체 과제 발굴 및 자료집 발간 (자체예산 1,600만 원) • 울산학포럼 운영(자체예산 1,400만 원)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5	지자체	○ 강원학 기획 및 기초연구, 지역학 네트워크 형성, 열린 강원학 채널 구축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강원학대회 등 학술행사(자체예산 5억 2,000만 원) • 강원아카데미 운영 및 소식지 발간(자체예산 2억 3,000만 원) •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자체예산 3억 5,000만 원) • 강원학 지식총서 발간(자체예산 4억 7,000만 원) • 강원학연구(연구 지원, 총서 발간, 과제 수행 등, 자체예산 6억 2,000만 원) • 고성군지 발간(고성군 지원, 외부예산 5억 원) • 양구 근현대사 역사문화자료 조사 및 자료집 발간(양구군, 양구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지원, 외부예산 1억 1,970만 원)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3	지자체	○ 저널 발간, 충북 재발견 사업, 충북학포럼 운영, 충북학아카데미 개최 등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충북학 발간(충청북도 지원, 외부예산 1,200만 원) • 달래강123인문예술프로젝트(충청북도 지원, 자체예산 1,000만 원, 외부예산 1,200만 원)

구분	인력	운영재원	주요 활동
			• 충북학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및 아카이빙(충청북도 지원, 외부예산 1,4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18	지자체	○ 제주학 연구 및 연구 지원, 제주학 총서 등 간행물 편찬, 기초자료 조사 · 수집 및 아카이빙, 제주학포럼 등 학술행사 운영, 정책사업 및 기관 대행사업, 제주어 보존 · 교육 및 전승자 양성 지원 등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자체예산 2억 원) • 제주학 연구 지원사업(자체예산 1억 2,000만 원) • 제주학 출판 지원사업(자체예산 4,500만 원) • 제주학 관련 연계사업(자체예산 2,000만 원) • 제주학 교육 · 교류사업(자체예산 1억 원) • 제주어 특화사업(자체예산 3,500만 원) • 제주역사 편찬사업(자체예산 2억 2,600만 원) • 공기관 대행사업(외부예산 7억 1,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7	지자체	○ 지역학 학술 · 정책 연구, 학술연구 지원, 학술지 발간, 수원학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수원학 대중화 공모전, 수원학 강의 운영 등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학술연구 지원(자체예산 4,000만 원) • 수원학 강의 지원(자체예산 9,000만 원) • 수원시사 아카이브 구축(수원박물관 지원, 외부예산 2억 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3	지자체	○ 연구저널 발행, 심포지엄 개최, 연구자 지원, 교내 교양수업 운영, 대중강연, 지자체 학술연구 참여, 지역학 연구기관 교류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서울학심포지엄(자체예산 1,096만 원) • 서울학 연구자 지원(자체예산 1,842만 원) • 서울학 연구저널 발행(자체예산 1,840만 원 • 수도로 보는 동아시아 문명 교양과목(학내) 운영 • 서울학 통섭전공(학내) 기획 운영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	대학	○ 논문집 발간, 연구총서 발간, 세미나 · 콜로키움 운영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부산연구(논문집) 발간(예산 400만 원) • 부산학총서 발간(자체예산 200만 원) • 부산학심포지엄(자체예산 100만 원) • 부산학아카데미 운영(시립중앙도서관/중구청 지원, 외부예산 300만 원)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4	대학	○ 저널 및 총서 발간, 학술대회 · 세미나 개최, 시민강좌 운영 등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인천학 도서 발간(예산 1억 2,000만 원) • 연수고 ON-동네사업(자체 75만 원, 외부 660만 원)
청운대학교	5	지자체,	○ 지역학 연구 및 교육, 지역학 강좌 운영

구분	인력	운영재원	주요 활동
홍성학연구소		대학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홍성학 대학강좌(홍성군청 지원, 외부예산 4,700만 원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1	대학	○ 학술총서 발간, 지역민을 위한 경남학 강의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 2018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디지털함양문화대전 편찬 기초조사연구 및 집필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외부예산 1억 5,000만 원)

*출처 : 기관 대상 서면 인식조사

3. 지역학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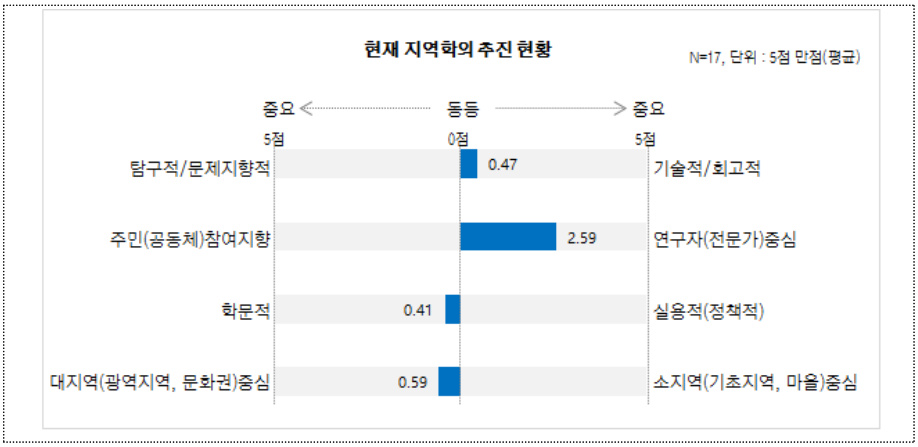
지역학 연구의 현재적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지역학 진흥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학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 간 진행된 의견조사의 대상은 검색으로 확인된 50개의 지역학연구기관 중 상근인력이 있거나 책임자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32개 기관이며, 최종 회수된 의견서는 총 17개이다.

세부적인 의견 청취 내용은 ① 현재 지역학 추진 방향 평가 ②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③ 향후 지역학의 핵심적 활동분야 ④ 정부의 정책과 지원 사업 에 대한평가 ⑤ 정부기관별 중요도 ⑥ 지역쇠퇴 현상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 ⑦ 지역학 활동을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이다.

가. 현재 지역학 추진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지향성

1) 현재 지역학 추진에 대한 평가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금까지의 지역학은 지역주민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기술(記述)적이고 회고적인 접근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실용적(혹은 정책적)이기보다는 학문적 경향성이 높고, 광역 혹은 문화권 중심의 대지역연구가 강세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현재 지역학 추진에 대한 평가

* 출처 :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현재까지의 지역학 연구는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학문적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소지역보다 대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기초지역의 마을 중심의 연구보다는 광역지역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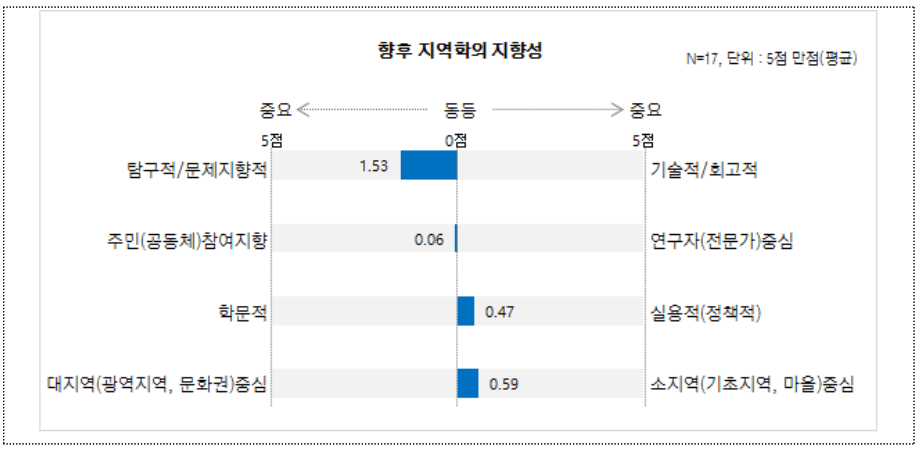
"주민 공동체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학이라는 학문적 체계가 공식적인 위상과 역사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련 전문가나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학의 대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주로 호남학, 영남학과 같이 문화권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자체의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재정적, 인력적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는 광역행정단위의 서울학, 경기학, 부산학 등이 활성화****되고 최근 들어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시작되며 수원학, 용인학, 아산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응답 내용 중 발췌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결과)

2) 향후 지역학 연구의 지향성 및 과제

향후 지역학 연구의 지향성에 대해서는 지방축소 혹은 소멸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 진단과 미래 설계 등에 기여하는 탐구적·문제 지향적·실용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과거 자료에 대한 해석 혹은 보존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보다 진일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성과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예. 지역학 디지털 아카이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림 Ⅲ-4 참조).



[그림 Ⅲ-4]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 출처 :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현재 지역학 연구방법론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연구자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과거 중심에서 미래 중심으로, 가치 발굴 중심에서 가치 창조 중심으로, 형이상학에서 형이하학으로, 사실 중심에서 실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학은 지역의 인문사회와 역사문화 전반에 대한 기초탐구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 진단과 미래 설계 등 문제 지향적이며 실용적 측면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연구 성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이 지니는 의미는 과거 자료에 대한 ***해석, 보존 가치에 머물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산업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가치는 연구자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므로 지역학 또한 연구자 중심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배경위에 궁극적으로 지역학은 실용학문으로 나아가야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대지역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추진되는 전체입장에서 소지역은 기록의 가치와 보존을 추구해야한다는 면에서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술형 응답 내용 중 발췌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결과)

향후 지역학의 핵심적인 활동 분야로, '지역정체성 정립·지역자원 발굴과 함께 주민참여를 위한 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지역 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축적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학을 문화 정책 영역으로 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학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협력형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 성과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학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인접 지역 또는 인접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학에 대한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

*"****지역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기에 지역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 또한 이는 인접 지역과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공동연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학은 문화 정책 영역의 일환으로 보고 그 지역이 가지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계고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 문화, 행정, 경제 등의 영역과 어우러져 그 폭을 더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축적. 현재 시민의 삶과 생활, 사라지는 것 또는 없어질 것들에 대한 기록과 보존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으로 찾기 위한 역사, 문화, 인물, 자연환경, 특산품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할 것이나, **핵심적인 연구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서술형 응답 내용 중 발췌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결과)

나. 지역쇠퇴와 지역학의 역할

응답자들은 '지역쇠퇴'라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지역학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주민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새로운 지역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역경쟁력강화와 지역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역쇠퇴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응답자들은 '지역재생'에 있어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재생과 더불어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성의 회복, 지역주민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학과 관련 정책 사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이 나름대로의 특색과 자부심 그리고 일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학은 지역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자부심을 갖고 지역민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주거재생,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등의 사업들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개량이나 도로확장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 요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 ***정체성을 찾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품을 살리는 형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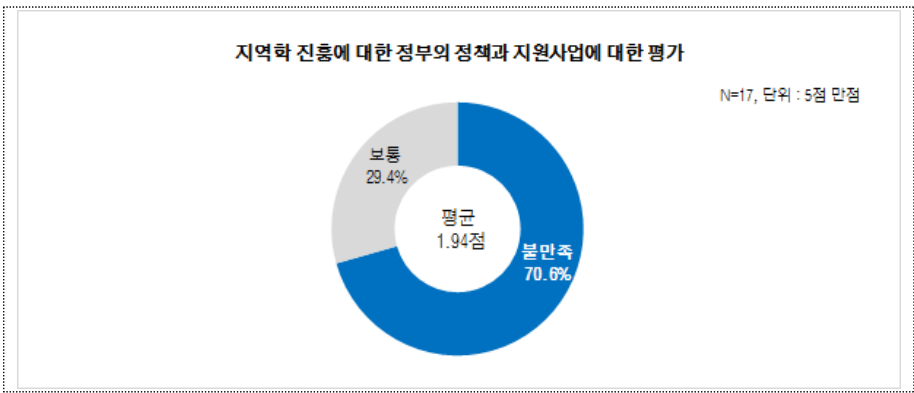
*"****지역 쇠퇴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물질적인 정주여건 개선보다 오히려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쇠퇴가 기정 사실이라면 누군가 그 흔적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미래세대에게 전달해주어야 하는 만큼, 그 역할을 지역학이 수행****해야 한다."*

- 서술형 응답 내용 중 발췌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결과)

다.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 정책 평가와 향후 역할

1)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 정책 평가

응답자들은 지금까지 지역학 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70.6%가 정부 정책에 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94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학 활성화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고, 지금까지 지역학 연구는 일부 지자체의 지원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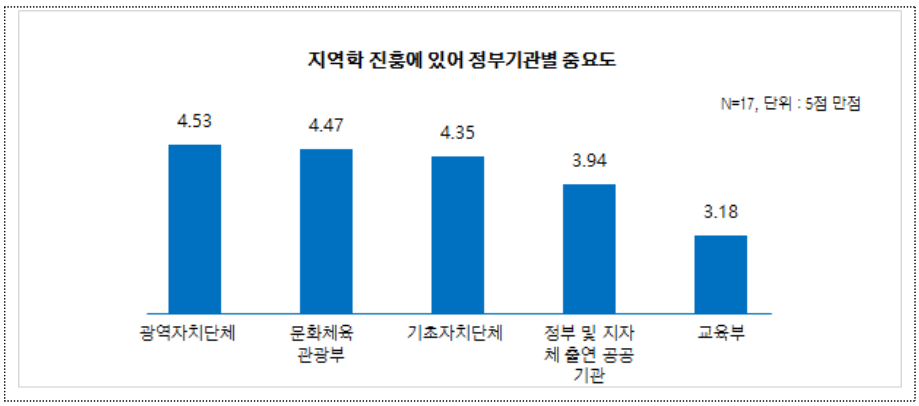


[그림 Ⅲ-5] 지역학 진흥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출처 :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2) 향후 지역학 진흥에 필요한 정부 정책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기관별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정부부처의 경우 '교육부'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고적·학술적 지역학에서 실천적·현장 중심적 지역학으로 기능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즉 지역학과 문화정책(문화예술·관광·문화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경제적 이익 획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학 진흥의 정책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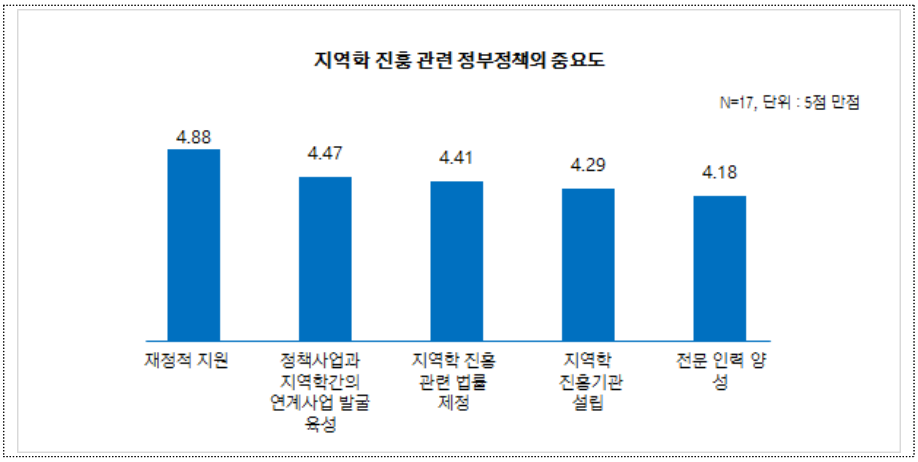


[그림 Ⅲ-6]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 출처 :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한편 지역학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현재 지역학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처한 열악한 인적·재정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책사업과 지역학간의 연계사업 발굴', '지역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의견으로는 '지역별 독립적인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 지원', '지자체 주도로 지역학을 진흥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Ⅲ-7]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 출처 :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지역의 연구자들이 지역을 연구주제로 하여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연구비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 한국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가 아니면 심사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만일 지역연구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다면 ***지역학분야를 별도로 두어 각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지역학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각 지자체의 출연기관 내에 설치되었기에 독자적인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거나 이끌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주도의 정책이나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이나 고유성이 무시되고 획일화할 수 있다. 지역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야지 그 의미가 있다"*

"기초 자치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해당지역의 연구 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초차지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들간의 연계구축 즉 네트워크 구축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

- 서술형 응답 내용 중 발췌 (기관대상 서면 인식조사 결과)

제4절

소결

1. 지역학의 새로운 접근 : 미래지향·참여·실천적 지역학

지금까지의 지역학은 활발한 활동과 이에 따른 높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학문적 접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회고적인 접근으로 인해 대중 친화적이지 않고 지역현안 대응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해야할 지역학의 접근방향은 역사·지리·문화·경제 등 다분야간의 융합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지역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③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이 미래 지역학이 지향해야 할 접근방법이며,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혹은 문화권 중심의 대지역연구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혹은 생활권 단위의 소지역연구 또한 균형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지역학 관련 기관 현황

200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0년대 들어서 관련 기관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대학 등 학술·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및 문화예술진흥기관 내 지역학연구센터 설치, 지방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지역학연구소 전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연문화 관련 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학과 문화정책 간의 연계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활동의 경우, 기존에는 학술 연구 중심으로 지역학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아카이빙'과 지역학 연구서 발간, 학술행사 개최, 지역학 강좌와 총서

발간, 구술사·해설사 등 지역학 인력 양성 관련 사업도 진행되는 등 활동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3. 지역학 활성화의 제약 요인과 개선방향

첫째, 조직 및 예산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지역학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장의 정치적 혹은 현실적 판단에 따라 지역학 기관의 유지와 소멸이 결정되는 것과, 외부 공모과제 의존에 따른 안정적 운영 부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대학 내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축소되거나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연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단기 연구는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기간에 종결되는 사업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전담 인력의 수급에 관한 점이다. 지역학 기관 운영 인력은 5명 이내가 대부분이며, 이 또한 정규인력보다는 객원 혹은 계약직 직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진 연구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학 학문 후속세대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안정적 공급은 지역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연구인력 외 구술사, 해설사 등과 같이 주민·공동체 참여를 지원할 인력의 확보도 요구되는 바, 지역학과 지역 내 일자리·일거리 창출을 연계한 인력수급 모델 개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학과 관련 사업을 둘러싼 협력과 연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지역학 관련 연구자 및 기관 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그리 활발히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학 연구기관은 대학부설 연구소,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부설 센터 등 그 조직의 형태가 다양하고 지향하는 바가 각기 달라 일관된 목표설정과 공동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 그리고 지역학은 그 특성상 자칫 과도한 지역주의와 폐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학과 연관된 제 단체 간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역학포럼'의 경우, 공식적으로 단체가 설립·등록되지 않은 회의체 수준

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역학 관련 기관 및 주체들이 상호 교류·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지역학 교류 및 정보플랫폼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학 육성과 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제도가 미비하고, 소관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미래지향·참여·실천적인 지역학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특히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Ⅲ-8] 지역학의 향후 방향,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제4장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실천 사례

제1절

국외 사례 : 일본

1. 일본의 지역학 대두 배경 및 특징

가. 지역학의 대두 배경

일본에서 지역학은 다양하게 이해되지만, “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지역 사회, 경제, 역사, 환경, 사람들의 생활과 생활 경험을 함께 연구하고 자연과 산업과 생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명되고 당면 문제를 종합적으로 규명해 가려고하는 것”(西村千尋·山田千香子·吉居秀樹, 2014: 24)이라는 언술처럼 생활문화에 기반하여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지역학은 지원학(地元学)으로도 불리며, 지역학과 지원학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12] 이들을 구분하여 이해할 경우에, 지원학은 지역주민에 의한 학문 또는 지방학을 의미하며, 지역마다 각각의 입장과 사고방식이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어떠한 경우든,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 및 주민이 지닌 역량을 견인하여 새롭게 조합하고 만들어 지역 만들기, 생활 만들기에 투입하고, 각 지역의 풍토와 생활사가 지닌 개성 등 풍토와 주민에게 맞는 방법을 지향한다.

일본의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역사, 지리,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과 연관되는데, 패전 이후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기록보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학 진흥을 토대를 마련한 것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일본에서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과속화(過疎化)’로 정의하는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점은 약 50년 전인

12) http://green.mond.jp/index.html(2018.9.8 검색)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60년 전후로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1965년의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3,375개 시정촌(市町村) 중 2,574 시정촌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특히 5년간 1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정촌도 897에 이르러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総務省過疎対策室, 2018).

그러나 과소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문제의 본질인가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최근에 '지방소멸론', '농촌접기론'이라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나돌 정도로 점점 더 비관적으로 되는 근본 원인은 첫째, 정책 개념으로서의 '과소'라는 용어를 학계가 그대로 차용해 왔다는 점, 둘째, 소위 '과소지역'이 향후 어떠한 지역이 되어야하는가 하는 이념의 부재, 셋째, 지역에 대한 이념의 부재로 인해 대증적 정책수단(예를 들면 인구유입책 등)에 머물게 하여 문제해결에 실패하였다는 데 있다. 즉, 과속의 본질은 인구감소나 인구밀도의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맥락이며, 이에 따라 같은 인구감소라 하더라도 심각한 지역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오카야마대(岡山大学) 김두철 교수는 일본의 과소지역,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높여 있는 상황은 과거와 같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아노미 현상이 아니라, 근래 들어 추진된 일본의 시정촌 합병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아노미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즉, 일본의 지방 위기는 단순 인구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조직의 자치에 기초한 자립적 마을을 유지하고 있던 지역이 인구과소로 인해 보조금에 의한 외부 의존적 사회로 점차 바뀌고 여기에 인위적인 행정구역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된 전통적인 주민조직의 기능상실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역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인구증가가 아니라 주민조직, 특히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역사가 결집된 내생적 주민조직의 재편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학연구의 활성화가 공동체성 강화와 주민조직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 지역학의 특징과 경향

초기의 지역연구라는 학술적 관점에서 점차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문화자

원의 활용으로 확장되어 온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지역의 쇠퇴와 맞물려 1990년대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하며, 지역의 주민과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자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이 등장하였다. 지역의 명칭에 '학(學)'을 붙인 활동은 2000년대 중반에만 3,0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季刊東北学編輯部, 2006: 38).

일본에서 지역학은 지방 또는 지역이 보유한 지혜를 주민들로부터 발굴하고 지역만들기 등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핵심은 지역 생활과 지역 생활에 대한 학문적 이해이며, 문화적 자원(지역의 특성과 전통 등)을 포함하고, 주민의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정책, 지역만들기, 지역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증가해왔다(西村千尋·山田千香子·吉居秀樹, 2014: 23-24). 그 성격에서는 학술 연구를 넘어서 지역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의 정체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실용적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는 실용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지역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쇠퇴와 연계한 재생, 즉 '지역만들기'의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1990년대 들어 지역의 자립화 요청, 지방분권 진전, 시정촌 합병, 주민자치 영역의 확대와 함께 개성화를 목표로 한 스스로의 지역만들기 중에 지역학을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특히 지역 쇠퇴 가속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가 증가하면서 인적 자원 및 그들의 향토애, 정체성을 지역 재생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지역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재생은 ①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② 지역의 자원을 계승하고 ③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 ④ 교류하며 ⑤ 지역 재생을 담당하는 인재 양성'(森川 稔, 2011)의 선순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급증하는 상황이며, 지역의 역량을 지역학으로, 지역학의 성과를 다시 지역의 역량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생애학습(한국의 '평생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만들기'와 연계된다 지역학을 평생학습으로서 지역학, 지역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이러닝(e-Learning)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

히 사회교육 시설, 정부 공공 단체, 대학·학교, 지역 단체·NPO 등을 통해서 지역학이 다양한 사회 교육·학교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 양상은 많은 시민대학 등 평생 학습 사업으로서 또한 대학의 지역 공헌 사업, 지역 관광이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 육성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각 지역에서 '당지(当地) 검정'과 같은 지역학 검정제도 시행도 활발하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정체성 및 자원 활용이라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지역학의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생업 등을 재발견하고, 그 매력과 강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학 진흥에서는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료 등 지역문화자원과 기초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마을만들기의 핵심인 사람만들기에서 지역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와 사람만들기를 위해 지역 소재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보존, 지역 단위 에코뮤지엄 조성, 마을해설사 양성(시민 인터프리터) 및 마을자료의 체계적 보존, 지역축제 등에서 지역학을 방법론으로 하는 활동도 활발해지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2. 일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역학 진흥 사례

가. 중앙정부의 정책 사례

일본의 경우,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학술적인 지원이나 지역 재생과 관련한 연관사업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에 교토(京都)로 문화청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서 2017년 4월에 교토에 지역문화창생본부(文化庁地域文化創生本部)를 설치하였고 지역문화창생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문부과학성의 경우, '지역 거점정비사업(地(知)の拠点整備事業(大学CCC事業))'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은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의 사업으로 지역만들기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2014년에 시행된 '지역학 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 실증사업(「域学連携」地域活力創出モデル実証事業)'(総務省, 2014)은 일본에서 중앙정부 단위의 지역학 관련 사업의 대표적인 예다. 이 사업은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학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력 창조인재 육성 및 자립적인 지역만들기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각 지역이 특색을 가지고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일본 전체의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지역 자원의 발굴, 지역 산업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스스로의 발상으로 하는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나. 광역자치단체 사례 : 교토부(京都府)

교토 지역이 지닌 '일본 문화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교토 및 교토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발전해온 문화를 국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신하는 데 있어 그 핵심으로 '교토문화연구'와 '교토학(京都学)'을 설정하고 있다.

교토 지역에서는 교토학의 성과를 국내외에 발신함으로써 교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교토에 대한 흥미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7월에 「교토부립지역학·역채관조례(京都府立京都学·歴彩館条例)를 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부립종합자료관을 '부립교토학·역채관'[13]으로 개편하였다. 조례에서는 교토부립교토학·역채관이 국제교토학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역채(歴彩)란 "단계별로 간다", "대대에 걸친"이라는 의미의 '역'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채'라는 단어를 합쳐서 시대를 넘어서 문화와 역사가 빛을 내며 계속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가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교토부립교토학·역채관은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교류 거점',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발신 거점',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 거점'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교류 거점' 사업은 세계의 일본문화 연구기관과

13) http://www.pref.kyoto.jp/rekisaikan/about.html

연계한 젊은 연구자 초빙 등의 연구 교류 및 부내·국내 주요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위원회 설치, 교토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발신 거점' 사업은 1류 연구자 및 문화인에 의한 교토학 강좌와 해외 연구자를 섞은 국제심포지엄 및 특색 풍부한 교토의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보고회 개최, 교토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문화의 힘에 의한 지역 창생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부립지역학·역채관 1층에 교토의 역사·문화 등을 배우고 연구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교류 공간인 '교토학 라운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 거점' 사업에서는 기존 부립 종합자료관이 수집·소장해 온 교토에 관한 도서 자료, 고문서, 행정 문서, 사진 자료 등 약 73 만 권과 교토부립대학 등이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해당 자료 등 교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교토자료종합열람실을 운영한다. 이 밖에 교토부 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3년을 한 주기의 공동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연구회는 1년째에는 연구, 2년째에는 연구 성과 보고 및 발간 등을 추진하고, 3년째에는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발표한다.

다. 기초자치단체 사례 : 하기시(萩市)와 쓰시마시(津島市)

1) 하기시

일본 야마구치현 북부에 위치한 하기시는 698.9㎢ 면적에 인구 약 5만 명의 소도시다. 에도시대에 축성된 성읍도시로서, 201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시대(1868~1912) 일본 산업혁명유산들이 있는 도시다. 산업혁명유산으로는 하기 반사로(萩反射爐), 에스비가하나 조선소 유적(恵美須ヶ鼻造船所85跡), 오이타야마 타타라 제철 유적(大板山たたら製鐵遺跡)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4개의 국가선정 중요전통건조물보존지구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연간 23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학으로서 '하기학(萩學)'이다.

하기시의 지역학은 '동네박물관' 조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기시는 지역

쇠퇴에 대응하여 1998년에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동네박물관[14] 조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동네박물관' 프로젝트(萩市, 2003)를 추진하였다. 사업의 기본구상인 「하기시 동네박물관 구상」을 수립하고 걷는 길 구축 및 시민해설가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 도성, 메이지유신 등 크게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핵심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을 조성하였다. 특히 동네박물관 조성을 마을 만들기의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2004년에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동네박물관 조성을 위한 조례(「萩まちじゅう博物館条例」)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동네박물관 조성의 토대로서 역할을 한 것이 하기학(萩学)이다. 하기학 역시 일본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순수 학술 연구가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실용학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표 Ⅳ-1] 일본 하기시의 지역학 진흥 및 동네박물관 조성 과정

시기	주요 내용
1998	• 문화자원 전수조사와 함께 관광자원 발굴, 문화자원 및 마을박물관에 대한 인식 공유
2003	• 기본구상 성격의 「하기시 동네박물관 구상」(2003)을 수립하여 방향성 설정
2004	• 하기시 동네박물관 기본계획 · 행동계획 책정(2005)
	• 제도적 기반으로서 「하기시 동네박물관 조례」 제정(2004) • 조직적 기반으로서 NPO법인 하기시동네박물관 설립
	• 하기시동네박물관을 공식 개관
	• 지역 매력 발신 및 문화자원 발신 등 공식 HP 작성
	• 워크숍을 통한 유산 발굴 및 관내에 19개 트레일 구축 추진 • 마을해설가인 시민인터프리터(823명)을 양성하여 마을 조사 연구 추진
2009	• 하마사키(浜崎)지구를 위성박물관화하고 타지구로 전개
2011	• 발굴, 조사, 수집된 문화자원 DB화 • 이야기꾼으로서 시민인터프리터 육성 및 문화자원 기록
2012	• 위성박물관과 핵심 박물관의 네트워크 구축
2013	• 하기시동네박물관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행위원회 설치 • 문화청 지원으로 하기시동네박물관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 개시
2014	• 이야기꾼 역사강좌 개설
2015	• 메이지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 동네박물관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2016	• 하기시 명륜학사(明倫学舎)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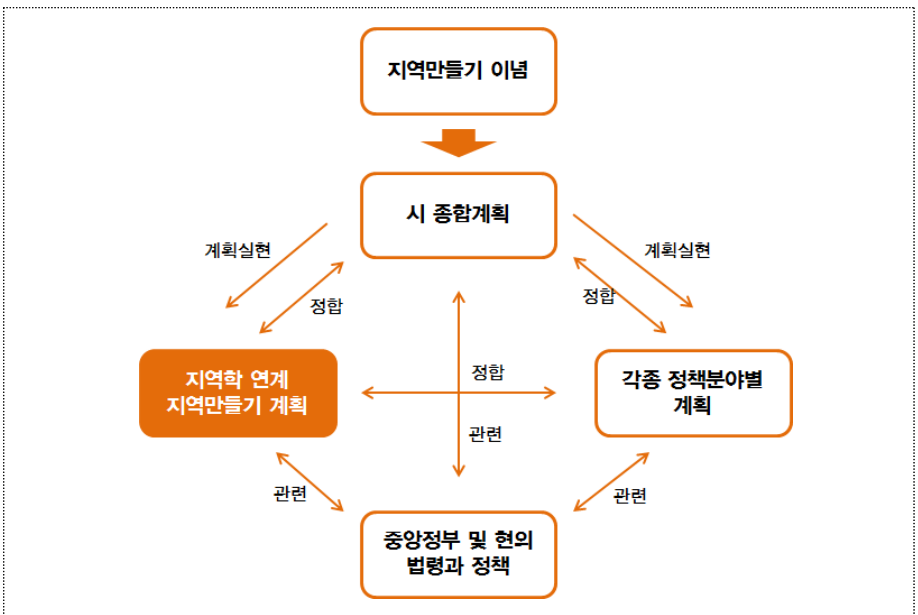
14) 萩まちじゅう博物館(machihaku.city.hagi.lg.jp).

시기	주요 내용
향후 계획	• 지역 활동과 연계 활성화 및 문화유산 DB 구축 · 공개 • 문화재적 시설 활용, 유휴 사적지 및 시설 활용 • 차세대로 계승을 위한 인재 육성 • 명륜학사 및 핵심박물관과 연계한 위성박물관, 트레일을 연계 관광산업 진흥

*출처 : 하기시동네박물관(萩まちじゅう博物館) 누리집(machihaku.city.hagi.lg.jp) 및 萩まちじゅう博物館(2017), 「これまでの取り組みと今後の事業展開」 참조 정리.

2) 쓰시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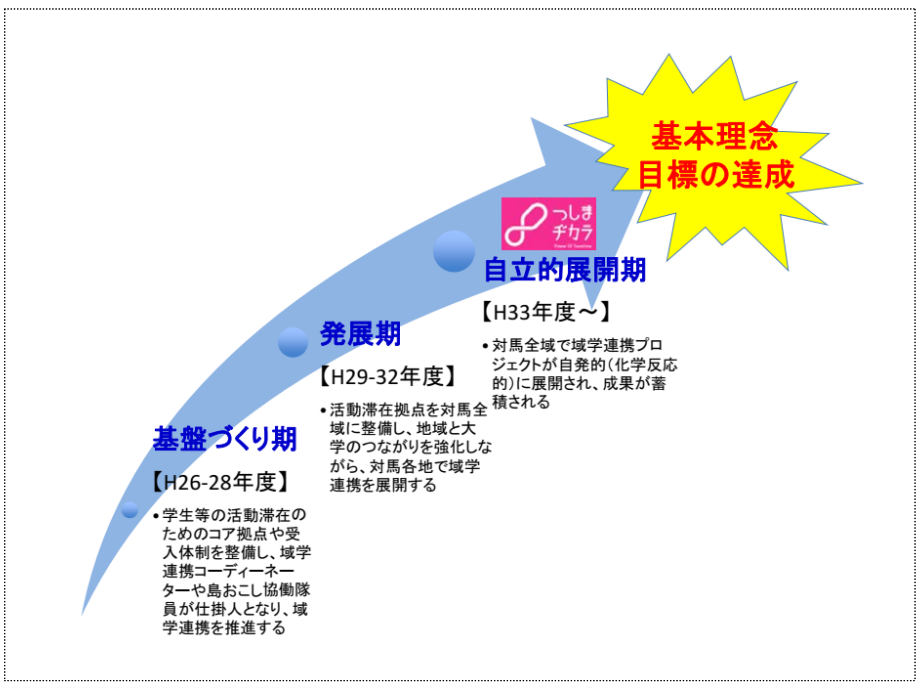
쓰시마시는 "학문의 힘을 지역에, 지역의 힘을 학문에"를 구호로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여 지역학으로서 쓰시마시역학(對馬市域学)을 육성하고 있다. 쓰시마시의 지역만들기는 쓰시마시가 2013년 총무성의 「지역학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실증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쓰시마시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畫)」(2014), 「제2차 쓰시마시종합계획(第2次對馬市總合計畫)」(2016) 및 「쓰시마시 마을·사람·직업창생종합전략(對馬市まち·ひと·しごと倉生總合計畫)」(2016)에서 제시된 과제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림 Ⅳ-1]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의 위치

* 출처 : 對馬市(2014), 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畫

2014~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쓰시마시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에서는 '학'의 범위를 대마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대학·대학원·대학원 대학·단기 대학·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와 거기에 소속된 교원·학생을 포함하고, 전문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학제적 영역의 학문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때 '지역'의 범위는 이미 선진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과 지도자의 수용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가미아가타초의 시타루(上県町志多留)를 시범지역으로 지역만들기 활동과 연구 거점화하고, 주변 해역을 포함한 대마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도록 설정되었다. 계획 단계는 1단계 기반구축기(2014~2016), 2단계 발전기(2017~2020), 3단계 자립적 전개기(2021~)로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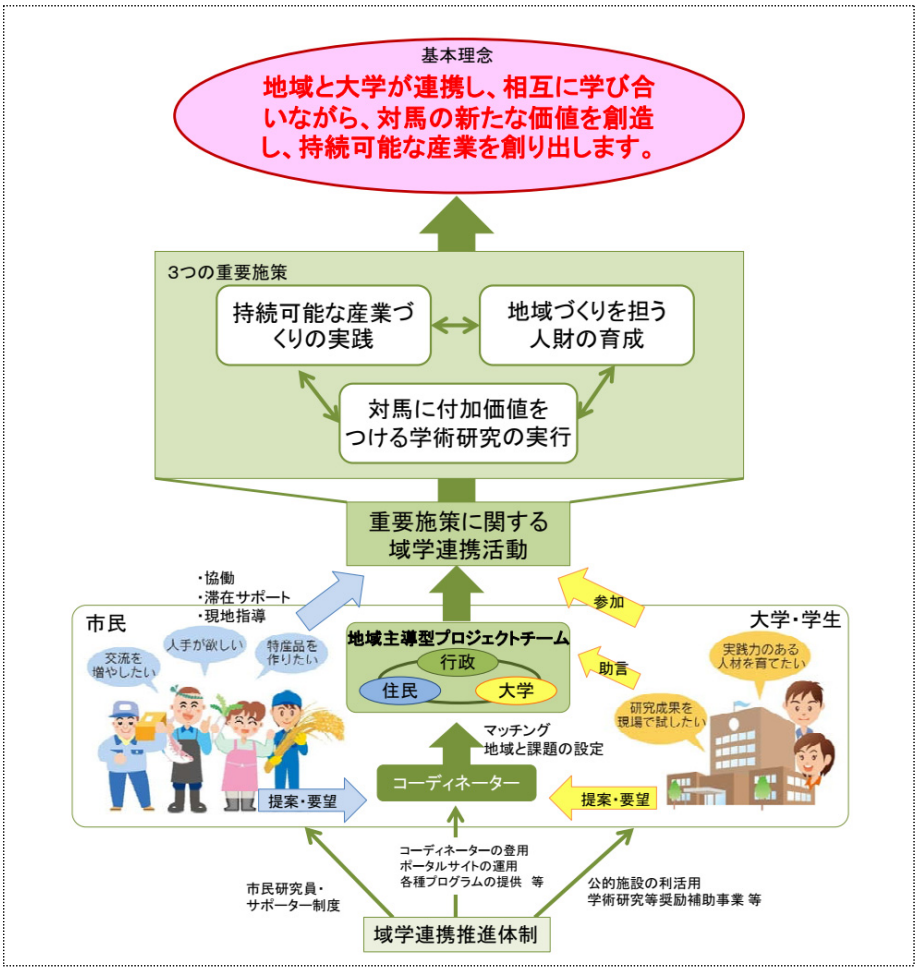


[그림 Ⅳ-2] 쓰시마시의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 단계

* 출처 : 對馬市(2014), 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畫

이 계획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연대하여, 상호 배워가면서 쓰시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그 내용에서는 '쓰시마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학술연구 실행', '지역만들기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산업만들기 신철'을 3대 주요 시책으로 설정하여 관련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Ⅳ-3] 쓰시마시의 지역 연계 지역만들기 기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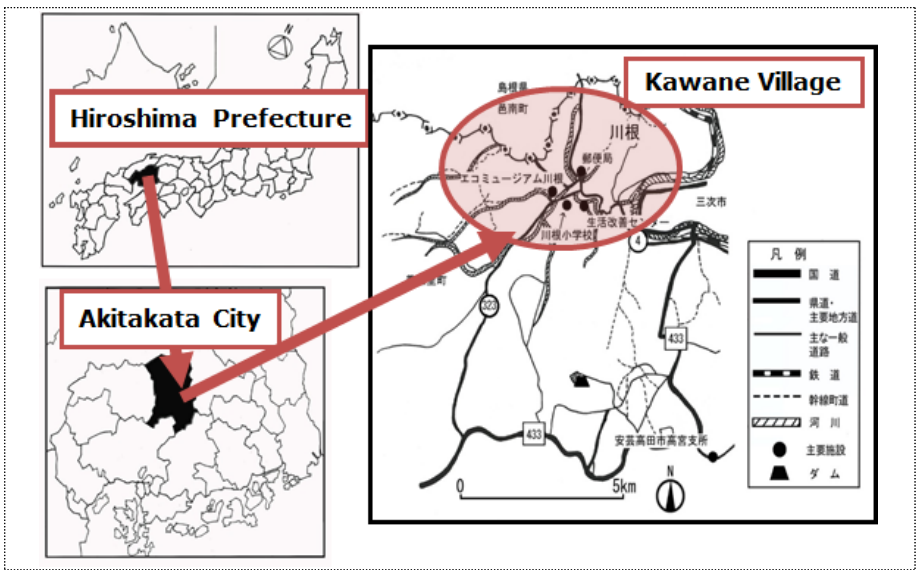
* 출처 : 對馬市(2014), 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畫

3. 마을 단위 사례 : 일본 히로시마현 카와네(川根) 마을

여기서는 지역자치조직 재편을 통해 과소문제에 대응하면서 문화자원을 유지

계승하여 온 히로시마현(広島県) 아키타카타시(安芸高田市) 북쪽 끝에 위치한 카와네(川根) 마을 사례(Kim and Bu, 2009)를 살펴보고자 한다.[15] 이 마을은 60년 이상에 걸친 일본의 과소고령화 속에서 주민조직에 의한 지역자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자치조직의 재편으로 지역문화자원을 계승하고 있는 사례다.

카와네 마을은 전형적인 산촌이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총 면적의 84%가 삼림이며, 마을을 이루는 19개 취락은 산지의 각 계곡에 분포한다. 지금은 아키타카타시의 한 마을에 불구하지만 1956년 이전까지 기초자치단체로서 카와네촌(川根村)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전후의 시정촌 합병에 따라 인근 2개 촌락과 함께 타카미야정(高宮町)으로 재편되어 행정자치권을 잃게 되었다. 그 후 2004년에 최근의 시정촌 합병(平成の大合併)으로 인근의 5개 정(町)과 합병되어 현재의 아키타카타시로 재편입되었다. 그 결과 카와네 마을은 농촌 자치단체인 아키타카타시 중심지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오지가 되었다.



[그림 Ⅳ-4] 카와네 마을의 위치

* 출처 : 김두철(日 오카야마대 교수) 제공

15) 본 사례는 「KIM Doo-Chul and BU Hye-Jin(2009): "Coping with Depopulation and Demographic Ageing in Rural Japan: From Government to Local Governance", *Journal for Geography*, University of Maribor, 4-1, 77-88」와 김두철 일본 오카야마대 교수의 서면자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카와네 마을은 1970년대에 큰 수해를 당해 주민 스스로가 구조 활동을 전개하면서 행정조직에만 의존하지 않는 마을만들기를 시작하였다. 1971년에 일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폐쇄적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이듬해인 1972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카와네 마을은 행정중심지인 타카미야정으로부터 한 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재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마을 주민들이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77년에는 카와네 마을의 전 세대가 가입하는 명실상부한 카와네 마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기존의 19개 취락 단위의 주민조직을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로 재편하여, 그 이후 지역문화 계승, 에코뮤지엄 건립 및 운영, 마을 복지 사업 등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의 주된 초기 활동은 과소화로 인해 활동이 정지되거나 위축된 전통문화의 재생이었다. 즉, 기존의 각 취락 단위로 행해지던 전통문화행사(모내기 전통무용(はやし田植), 망자위로무용(盆踊り) 등)가 과소화로 인해 자연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들 전통문화를 카와네 마을 전체로 복원 계승하는 시도를 하였다. 인구 수백 명의 마을에 불과하지만 각 취락 단위의 전통문화행사는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주민조직인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로의 재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는 각 취락의 전통문화 계승자들을 협의회의 문화부로 결집시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가 각 취락 단위의 전통문화 유지기능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는 초기부터 지역농협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주유소를 운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저하를 주민조직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행하여 왔다. 1980년대는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왔는데, 카와네

마을의 중심 시설 중 하나이며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카와네중학교가 폐교가 된 것이다. 이 때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는 폐교가 된 중학교 건물을 지방정부로 부터 위탁받아 마을만들기의 거점인 동시에 지역문화 아카이빙 거점인 에코뮤지엄으로 개조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 계승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는 지역커뮤니티의 대표로서 지방정부와 교섭하여, 당초 마을회관으로 재활용할 계획이었던 지방정부의 계획을 지역문화의 유지 계승을 위한 거점으로 변경시켰던 것이다. 즉, 1970년대의 전통문화 계승의 주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끌 실질적인 기초조직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림 Ⅳ-5] 카와네 마을의 에코뮤지엄(左)과 에코뮤지엄에 전시된 '카와네의 꿈, 낭만 선언'( )

* 출처 : 김두철 (日 오카야마대 교수) 제공
**주: 주민이 모두 참여해서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의 장래를 그린 그림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와 농지관리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카와네 마을에서는 기존의 취락 단위의 농지관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에서 유휴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사유지인 농지를 지역자원으로 재규정하여 주민조직이 지역자원의 관리 주체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마을 내 독거 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고령자를 위한 복지 역시 이 시기부터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실질적 주민자치조직으로 성장한 카와네지역진흥협의회가 주민들의 회비와 에코뮤지엄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적 재정을 확보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절

국내 사례

1. “주민 참여형 마을기록과 지역학의 미래”– 제주학연구센터[16)]

가. 현황

제주학연구센터는 내·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제주학 진흥의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대두하면서 출발한다. 특히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재편되면서 제주문화를 이용한 미래사회 발전의 엔진 기능을 수행할 제주학 진흥 및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주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말부터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연구자 및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주학을 견인하기 시작하는데, 1967년 제주대학교 내 ‘제주도 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융복합 분야에서 제주학과 관련된 100여개 이상의 민·관 단체가 생겨났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공약실천계획(2010.10)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現 제주연구원)에 위탁 설치되었고, 201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조례 제 1020)가 제정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조례에는 ‘제주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16) 현해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의 ‘서면자문’ 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정리

제주학연구센터의 단계별 발전과정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제주학연구센터 발전단계

구분	기간	내용
준비기	2010	–
출범기	2011~2013	•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범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사업비, 운영비로 사업 추진 • 기초 토대 연구,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연구인력 확보, 중장기 인력 확충과 편제 계획 수립
발전기	2014~2016	• 체계적인 제주학 연구사업 추진 • 지역학 연구기관, 세계 섬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연구 홍보, 교육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 전문연구인력 확충, 분야별 전문가 확보
안정기	2017~2020	•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 연구기관 전환 • 제주학 관련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 완성된 조직 및 역할에 따른 고유사업 추진 및 지원 • 제주학 연구의 정체성 확립

*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2016a),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 계획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① 연구 및 연구지원, ② 아카이브, ③ 교육 및 인력양성, ④ 교류 및 네트워크 등 크게 4분야로 구분되며, 직접 연구사업 혹은 외부기관 지원 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지역학(제주학)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표 Ⅳ-3 참조). 한편,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에서 언급한 관련 조례(제 12조 재정지원)에 의거하여 재원 중 거의 대부분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표 Ⅳ-3]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기능 및 업무

기능 및 업무	내용
연구 및 연구지원	• 제주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 지원, 협동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연구 수행 • 제주어 보전 정책 및 대중화 관련 연구
아카이브	• 제주학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초자료, 연구성과, 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영상 사진류, 해외자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 정립 작업 수행
교육 및 인력양성	• 제주학 관련 시민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중 교양서적 및 교재 발간 • 역량있는 제주학 관련 전문 연구자 지원, 레지던스 사업

기능 및 업무	내용
	• 제주학 연구 후속세대인 신진 연구인력 지원 양성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제주도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제주학연구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진흥기금 조성 • 해외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2016a),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 계획

나. 주요 사업 : '구술사 교육사업'과 '제주 마을기록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보다 입체적이고 참여지향적인 '기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제주다운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주민 참여형 지역학 연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업이 구술사 교육사업과 제주마을기록화 사업이다.

1) 구술사 교육사업

제주학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중요 기대 중의 하나는 제주 로컬리티와 관련된 기초 자료의 수집과 기록이며,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은 향후 제주학 연구 및 제주사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구술사'는 중요 방법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 및 정치 중심의 기록 유산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의 생활사와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학은 사라져 가는 제주학 기초 자료 수집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모아 2차적으로 융·복합 연구 및 활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아카이브 자료 구축에 필요한 구술사의 전문 역량을 가진 학자나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기록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방식과 통로 개척이 필요한데, 이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모집, 교육 및 활용이 모색되었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 심화 교육과정 등 구술사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구술사 교육은 제주학과 구술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제주학 자료 수집에 시민 참여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는 전문가 양성 단계인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학 연구센터는 이를 통해 제주학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의 토대를 세우는 역할 및 시민 연구자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구술사 기초 교육은 제주도내·외 전문 강사진에 의한 사례 및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대상으로 한 구술사 기초 교육은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라는 명칭으로 2016년 7~8월과 2017년 7~8월 총 2회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 매해 130여 명 이상 수강을 신청하였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8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했으며, 80%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30~40여 명에게 강좌 수료증을 발급하였다.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심화강좌'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구술사 심화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강의와 교육 참가자들의 실습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2018년 7~8월 개최). 심화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건과 활용을 고려한 전문교재를 개발하였는데, 「구술사의 이론과 실제, 구술사로 이해하는 제주사회(성민출판사, 2018)」라는 책자로 출간되었다. 또한 수강한 시민들의 실습의 결과로 '제주사람들의 생활이야기'가 2018년 11월에 출판될 예정으로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구술사 교육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첫째, 타 제주학 연구 및 교육기관과 중복되는 교육 강좌를 피하면서, 제주학 전반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제공한다. 둘째, 교육을 통하여 구술사 방법론을 습득한 전문연구자 혹은 시민연구자들을 육성한다. 셋째, 전문연구자 혹은 시민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아카이브 수집을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학의 지평 및 대중화의 확장을 모색한다. 다섯째, 구술사 교육은 미래 문화자산의 확보와 활용도를 높이는 기획이 내재되어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구술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외 구술사 관련

사례와 제주도 관내에서 운영된 모든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기존의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수혜적 차원의 교양강좌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는 시민구술사 교육사업을 시민연구자를 키워내는 역량구축 교육 사업으로 차별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최초 구술사 강좌임과 동시에, 이 강의를 통하여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에서 시민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제주학'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 및 제주학 연구방법론과 제주학 관련 자료 수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구술사의 기초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1차 년도는 ① 구술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② 구술 자료 생산 기획, ③ 구술 자료 생산을 위한 면접 진행 요령, ④ 구술 자료의 관리와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구술사라는 교육에 대해 처음 접함으로서 다소 어려움을 호소하여 2차 년도에는 사례중심의 구술사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다(표 Ⅳ-4 참조).

[표 Ⅳ-4]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기초교육 내용

회차	2016년 교육내용	2017년 교육내용
1	• 개강식	• 개강식
	• 한국에서 구술사의 의미와 성과	• 한국에서 구술사의 의미와 성과
2	• 구술사 자료 수집은 어떻게 기획되고 진행되는가?	• 4.3영상과 구술사 : 몸의 증언, 무명천 할머니
3	• 구술사 자료 수집에서 영상의 생산과 가치	• 재일제주인과 구술사 : 경계인의 삶과 구술사
4	• 구술사 아카이브 : 정리에서 활용까지	• 제주여성과 구술사 : 살암시난 살앗주
5	• 구술사 연구에서 군위안부 구술채록의 의미	• 제주옹기와 구술사 : 돌가마 옹기에 제주 사람 이야기 그득
6	• 구술사를 통한 제주해녀의 삶	• 이야기 속의 역사, 제주도 본풀이의 구술사
7	• 증언과 증언으로 복원하는 제주4.3	• 다른 지역 구술 자료 수집의 사례들
8	• 구술사 문화콘텐츠: 제주신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쟁점	• 현대 한국 구술 자료관 구축과 의미
	• 종강식	• 종강식

*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2016b), 2016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학연구센터(2017), 2017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참조

수강생 모집은 제주연구원 및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홍보 및 메일링, 언론 매체와 연계한 홍보활동, 제주학연구 및 교육사업 관련 단체 협조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구술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으로 예상을 뛰어 넘어 첫 해 40명 모집에 130여명이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여 당초 40명의 교육생 규모를 80명으로 늘였고, 2회 때에서 비슷한 숫자가 지원하였다. 사전에 등록이 되지 않은 시민들도 청강하기 위해 매회 10여 명씩 교육장을 방문하는 등 구술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높았다고 평가된다.

2) 제주 마을기록화 사업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지역쇠퇴 혹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원주민들의 노령화와 감소는 유사하나 국내외 방문객과 외지인 정착인수의 급증,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로 인해 '제주다움'이 사라져 간다는 또 다른 위기의식과 사회적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양상이 구조화되기 전에 새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 경로, 생활·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아카이빙을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상생적인 지역공동체 문화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제주학 연구센터는 1910년 이래 제주마을 경관의 원풍경 및 생활문화 원풍경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마을의 로컬리티 및 제주문화원형을 구축하고자 마을기록화사업에 착수한다.

[표 Ⅳ-5] 제주마을기록화 사업 내용

분야	디지털수집방식	시간적 수집	수집내용	이후 사업
마을 경관 원풍경자료수집	GIS/CAD 항공사진/지적도	1900~현재	마을공간사	디지털 마을지 구축
마을공동체 생활사 자료 수집	음성/영상/사진/ 구술	1900~현재	마을생활사	디지털 마을지 구축

*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자료

17)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로 이주한 새 주민들은 약 12만 명 정도이다. 제주에 존재하는 마을이 211곳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6년 동안 1개 마을에 이주한 새 주민들은 연 90~100명 정도가 되며 매달 평균 8~9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주택난과 부동산 투기, 환경파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과 원주민간 문화의 차이와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마을기록화 사업은 기록은 물론 활용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컬 마을대사전(디지털 마을지 편찬), 마을 기록관 및 공동체 정보 센터 공간 설치, 해당 마을 학교 교육 자료 이용, 마을 기록자 역량강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제주문화산업(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산업), 제주구술자료관(센터) 구축, 제주학 빅데이터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한계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아 일부 마을기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마을기록화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아키비스트(archivist)로 교육·활용하여 아카이빙 과정에서부터 선주민들과 새 주민들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나가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수집된 제주 마을의 생활문화아카이빙 자료를 원주민과 새 주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용까지 '주민 참여'가 기본 전체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제주학 연구센터 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내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 초빙하여 사업진행에 따른 정기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을 마을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센터와 마을관의 관계설정에 도움을 받는 한편 기록화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주민인터뷰, 간담회 및 FGI 등을 통해 아카이빙 이슈를 설정하고 아카이빙 방법론 및 매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컨설턴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코디네이터를 선정·활용하여 주관기관인 제주학 연구센터와 주민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한편 제주 마을기록화 사업은 자료수집과 구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기술과 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주다운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기록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의 활용을 들 수 있는데, 1940년대의 항공사진과 현재의 수치지형도를 비교하여 마을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기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제주 대정마을의 1948년 항공사진과 2015년 수치지형도의 결합 〉

〈제주 대정마을의 1967년 항공사진과 2015년 수치지형도의 결합〉

[그림 Ⅳ-6] 디지털 기술과 자료를 활용한 지역의 기록 사례

* 출처 : 제주학 연구센터 내부자료

3) 구술사 교육과 마을기록화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

① 아카이빙 자원을 통한 마을의 미래비전 설계

제주도에서는 북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무근성 일대를 기록하는 모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제주의 마을을 기록하는 마을 기록 모임. 대정지역에서는 대정의 기억이라 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구술사프로젝트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구술사 프로젝트들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생애사 아카이브 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적 공동체 아카이빙 사업은 아카이빙의 전문성과 예산 등의 확보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제주학 연구센터의 구술사 육성과 마을기록화 사업은 이러한 자생적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역사를 기록하고 전승하며, 지역의 미래비전 설계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② 마을기록화 및 구술 사업을 통한 주민 간 친밀성 확보

마을기록화 사업의 내용은 크게 마을의 공간사와 생활사, 지역 인물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간사(空間史)는 마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GIS와 항공사진, CAD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전화번호부의 활용 및 구술사 채록 등을 이용하여 50년 이상의 마을 변동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생활사(生活史)는 마을의 생활풍속과 변화에 대한 구술사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데, 구술사들은 대개 해당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방 이후 마을 생활의 변화와 궤적을 파악할 수 있다.

기록이 많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마을 기록화의 중요한 토대는 구술사이다. 구술사를 활용한 마을기록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면담자와 구술자간의 라포(*rapport, 친밀한 관계*), 즉 소통의 문제이며, 이를 통해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깊게 이해하여 마을의 역사를 생산한다. 이는 기존 지식인 혹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왔던 향토지, 읍지(邑誌), 마을지와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일례로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마을기록사업으로 추진한 '서

귀포시 세화1리 새주민 이주와 경로에 대한 아카이빙'의 경우, 원주민들이 면담자가 되고, 이주민(새주민)들이 구술자가 되어 구술사 자료를 수집함으로서 원주민과 새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더 넓혀졌을 뿐만 아니라, 새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기존 공동체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③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구술사에 기반한 마을기록화 사업은 생산-유통-활용이 같이 기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활용에 따라 애초 수집 방식 및 기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지역 마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급속한 공간변화 및 사회구성원 변화와 생활문화의 급속한 문화접변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옛 마을공동체 및 생활문화의 전통에 대한 향수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들의 소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을 아젠다의 부재와 세대별, 구성원별 생활문화의 차이는 향후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민 이주와 정착에 관한 아카이빙'은 단순히 마을역사의 기록을 넘어 아카이빙을 통해 원주민과 새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용적이고 실천적인 지역학 연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구술사 교육과 마을기록화 사업의 과제

① 조직 및 예산의 확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학연구센터의 구술사 교육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시작 무렵 지역사회(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술사 및 마을기록화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주학 연구센터의 조직적 한계로 인해 본 사업에 집중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최근 들어 제주도가 처한 급속한 사회·공간적 변동으로 인해 각 마을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고 교육 및 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마을기록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을기록화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인력 확충

구술사에 대한 수강생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로 다양한 형태의 구술사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었으며, 제한된 강좌에서 욕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구술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인원은 매회 80명 수준이나,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상근인력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배출된 구술사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수료자들은 실제 구술사 조사 등 현장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③ 지역학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 기능 확보

제주자치도민들은 실제 전통 소멸과 공동체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재 옛 제주의 삶을 구술할 수 있는 70~80대 연령의 인구는 대략 5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구술여건, 건강여건, 거주여건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마을당 100명 이내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제주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구술 채록 및 정보 획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민간 차원의 아래로부터의 마을기록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기록화 사업을 둘러싼 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간의 협력과 소통, 교류를 이끌 플랫폼(예를 들어 마을 단위의 지역학 혹은 아카이브센터)이 부재하여 시민들이 생산·수집한 자료와 자원의 공유와 활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마을 단위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 공간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지역학과 예술·언론의 만남”– 충북학연구소[18)]

가. 현황

충북학연구소는 충북의 전통성과 역동성을 탐구하여 축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9년 충북발전연구원(現 충북연구원) 내 부설기구로 설치되었다. 주요 기능은 충북의 역사·문화·민속 등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충북학 연구 기능, 충북을 넘어 중원문화권의 문화원형 발굴과 활용방안연구기능, 충북도사(忠北道史) 등 각종 사료 및 연구저널(충북학) 편찬, 기타 충북 문화정책 개발과 관련 업무 등이다. 충북학연구소의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충북학연구소의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

	사업방향	사업내용
학술연구 사업	•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 작업 • 중원문화권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 연구 • 충북지역학의 학문적 성숙 도모 • 지역학 연구의 구심점 역할 • 道史 정리와 편찬	• 충북과 관련된 미진한 연구분야 지원 • 타 지역 및 세계 역사 문화와의 비교연구 • 학제 간 공동연구 • 지역학 이론 개발 • 매년 연구지 간행 • 충북학 총서 간행 – 부록3 '충북학총서 간행계획' 참조 • 매년 1~2회 워크샵과 심포지움 개최
문화교육 사업	• 연구 결과물의 대중화 • 도민의 지적 욕구 충족 • 도민의 정체상 확립을 위한 공간과 매체 제공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소 운영	• 충북학 교양총서 간행 • 시청각세대를 위한 미디어시리즈 간행 • 다양한 기행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역사, 문학, 문화, 생태, 자연 등) • 충북학 및 중원문화에 관한 교양강좌, 전문 강좌와 초청강연회 개최 • 특별전시전 개최 • 청소년을 위한 충북학캠프 개최

18)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의 ‘서면자문’ 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정리

	사업방향	사업내용
자료 정보화 사업	• 충북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 집적, 충북학 연구를 위한 기반 확보 • 경화된 자료를 생명있는 자료로 정보화 • 도민에게 충북과 관련된 자료 제공	• 사료 수집과 정리 • 자료집 간행 • 구술자료 채록 • 충북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 • 충북 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구축 • 충북자료센터 운영 • 도민에게 충북학, 중원문화, 도정 관련 자료 정보서비스
문화예술 정책 개발	• 도 문화관광국과 긴밀한 협조, 지속 가능한 21세기형 문화예술정책 개발 • 국내외 문화정책 사례 연구 • 문화예술정책자료 수집과 평가	–

* 출처 :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http://csi.cri.re.kr) (2018.9.3. 최종검색)

충북학연구소는 지역학을 자료조사 및 사료발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학이 결합된 연구결과의 대중화와 실제 정책 활용으로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이다.

나. 주요 사업 :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

1) 사업 취지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사업은 달천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달천 유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을 밝혀내고,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북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달천은 충북 보은 속리산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청주시와 괴산군을 거쳐 충주를 돌아 남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으로, 총 길이 123.00㎞, 유역면적 1614.37㎢에 이른다. 프로젝트명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강의 총 길이 123㎞에서 차용한 것이다. 관련 행정구역은 충북 보은군,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 등 5개 시군으로, 광역 차원의 지역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7] 달천(달래강) 위치도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2018.9.3. 최종검색)

달천의 본류와 지류는 상류인 보은구간(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송 등)을 시작으로, 청주구간(옥화구곡 등), 괴산구간(화양서원, 화양구곡, 산막이옛길 등), 충주구간(수주팔봉 등) 등 오롯이 충북 지역만을 흐르며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명소 등을 품고 있다. 하지만 달래강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결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달래강의 생태 및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무형의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동안 달래강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지역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조사는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달천에 내재된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래 개발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지역학의 관점에서 인문학 및 미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충청북도와 충북학연구소는 충북 재발견 사업의 하나로, 달천 유역의 잠재된 소실위기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재조명하고 이야기의 발굴, 예술적인 표현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① 달래강 유역의 역사·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사업 ②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한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 ③ 지역 언론(중부일보)과의 협력 사업인 '달래강 리포트'가 있다.

2) 추진 전략

지역학은 지역주민이 주체인 만큼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충북학연구소는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인문 전문연구자 외에 향토사학자·전문 예술가 및 아마추어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하는 달래강 인문예술프로젝트'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지역 언론과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주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공유·공감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주체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달래강 공동탐사(4-10월, 매월 1회)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학제간 통섭을 통해 창의적 탐사와 지적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다.

종합적으로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달래강 포럼(워크샵)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지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하되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종합전시전'을 통해 탐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종합전시전은 미술 전시, 사진 전시, 도록(圖錄) 발간, 달래강 포럼, 달래강콘써트 등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표 Ⅳ-7]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주체별 추진 역할

기관 및 단체	구분	수행 역할	비고
충북학연구소	주최	총괄 탐사 방향 및 일정 수립, 문화예술자원 발굴, 탐사기간 중 강사 제공	
지역 언론 (중부매일)	보도	달래강 탐사내용을 매주 주기적으로 보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탐사 및 달래강에 대한 관심 촉발 유도	

기관 및 단체	구분	수행 역할	비고
예술가 및 시민작가	예술 활동	7회의 탐사 기간 동안 예술활동 진행 및 전시 준비	
충북연구원	연구 조사	지속가능한 달천유역 보존 및 발전 방안 연구	기획 과제

* 출처 : 충북학연구소 내부자료

3) 세부 사업 내용

① 달천 유역의 역사·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사업과 기획과제

달천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징을 밝혀내고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달래강 유역 역사·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사업과 기획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태와 사람,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달천유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달천을 축으로 한 광역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및 연구내용으로 ① 달천유역의 현황 및 특성 조사 ② 달천의 자연환경·인문·사회적 가치 발굴(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인문가치와 자원, 문화유산분포와 가치, 전통마을과 문화자원 등) ③ 지속가능한 달천유역 발전 비전과 목표, 방향 및 전략제시 등이다.

②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한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

'달래강123 예술프로젝트'는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충북학연구소와 지역예술가(단체)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지역학 연구자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매월 1회 정기탐사를 실시·교류하여 예술 창작 소재가 될 수 있는 달래강의 인문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예술창작품으로 표현하는 사업으로, 충북 지역 내 3개 예술단체 소속회원과 개별 창작예술가 4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③ 지역 언론사와 함께 하는 '달래강 리포트'

'달래강리포트'는 지역 언론(중부매일)와 협력하여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고 보도함으로써, 달래강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이미를 재해석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달래강의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전문연주자를 초빙하여 달래강 유역을 구간별로 답사하고 관련 리포트를 작성, 작성된 리포트는 지역 일간지에 연재하고 있다. 2018년 9월 6일 현재까지 총 12회가 연재되었다.

[표 Ⅳ-8] 중부매일신문 '달래강 리포트'호별 기사 제목

회	날짜	제목
1회	2018.6.20.	물 맑고 달아 '달래강'...인문예술프로젝트 시동
2회	2018.6.27.	절에서 만난 스님은 "상고암 석간수가 달천의 뿌리"
3회	2018.7.4.	5층 목탑 '팔상전' 낙숫물은 달천으로 향하는데
4회	2018.7.11.	법주사 지나 속세로 들어온 물줄기 마을을 품다
5회	2018.7.18.	굽이쳐 만들어낸 절경 풍류 즐긴 봉황대 이름만 남아
6회	2018.7.25.	물길 따라 흐른 400여 년 이름 바꾼 9경의 재탄생
7회	2018.8.1.	달천의 최상류 '환경운동'의 상징을 자리매김
8회	2018.8.8.	미원·청천·청안 3개면서 흘러드는 물길
9회	2018.8.15.	송시열이 반한 절경 속에 남은 인문학의 보고
10회	2018.8.22	아방가르드 송자(宋子) 가르침·뜻 기르던 역사 산실
11회	2018.8.29.	선계를 동경하는 속세사람들이 신선이 되는 곳
12회	2018.9.5.	상류서 시작된 구곡 족두리 쓴 각시와 신랑 바위 형상

* 출처 :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csi.cri.re.kr) (2018.9.10. 최종 검색)

[그림 Ⅳ-8] 달래강프로젝트 워크숍 현장(左)와 대상지역(右)

* 출처 : 중부매일신문 2018.6.20.일자 (2018.9.10. 최종 검색)

4)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

① 지역 생태·인문환경의 가치 재조명

충청북도에서 가장 긴 내륙하천인 달천(달래강)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인문자원 역시 풍부한 장소이다. 종래에는 생태환경 조사 혹은 보전 중심으로만 지역연구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달천의 사회·문화, 인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성이 있다. 달천 유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재인식·재평가를 통해 지역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고 공유함으로써, 달천이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미래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② 지역주민 및 지역예술인 참여형 지역학 프로젝트

종래 지역학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책자 발간 형태로 결과물을 냈으나,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학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달천에 대한 전문예술가와 시민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예술가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예술적 해석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학과 지역예술이 융합된 지역예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성공 여하에 따라 지역학 연구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③ 달래강 유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발전 모색

달천은 충청북도 6개 시군에 걸쳐있는 하천이다.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달천이 흐르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상생 발전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달천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광역적인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달래강 유역의 지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고 관광지 등이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유역 내 지역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시·군 간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의 종료 이후 달천 유역의 충청북도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달래강 유역 발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지역학에 기반한 지자체간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사업의 과제

① 단발성 프로젝트로서 사업성과 획득에 한계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는 지역학연구소, 지역 예술인, 향토사학자, 지역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로 기존 기록과 학술연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난 시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에 관한 종합조사, 아카이빙 및 이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으로 연결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나, 1년(2018)의 단기간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달래강123인문예술프로젝트와 같이 달래강 유역의 5개 시군이 협력하여 광역적으로 지역을 조사·연구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의 관심, 예산지원 및 관련 조례제정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 또한 필요하다.

3. "마을의 기록과 발전적 활용"– 전주문화재단[19)]

가. 현황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전주시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으로, 2006년 창립 초기부터 지역학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20)] 특히 재단은 구술조

19) 김창주 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의 '서면자문' 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정리

사를 기본으로 한 이야기 개발과 활용에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지역학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역학의 실용적이고 실천적 활용(구술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의 문화·예술적 활용)을 모색하였다.

재단은 2006년『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전주 기사』의 발간을 시작으로 지역학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후 2006~2008년까지 전주 토박이 원로 163명의 구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근현대사를 재구성한『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1~2권을 발간한다. 2011년부터 지역 원로 예술인의 예술 세계와 삶을 기록하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을 진행하는데, 2017년 현재 총45명의 원로 예술인의 구술을 바탕으로 전주의 예술사를 기록하였다. 2013~2016년까지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한옥마을과 인접 지역에 대한 사람, 장소, 공동체, 각종 시설들을 양적, 질적 조사하고 그 변화상을 기록한 <전통문화도시조사기록화사업>을 진행한다. 이상의 사업들은 지역 역사의 재구성, 이야기의 발굴을 통해 지역 정체성의 찾기에 그 목적이 있었다.

2015년 이후 재단의 지역학 사업은 전주시의 문화재생·도시재생에 대한 고려와 실천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단은 전주시 전역의 행정동 33개 동에 대한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조사한 내용을 문화재생, 마을재생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마을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원도심 또는 마을을 재생하는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및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2017년)과 '마을술사 교과서와 관련 콘텐츠 개발'(2018년)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은 동심(洞心)찾기를 비전으로 현재 33개동 중 23개 동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별로 보고서 1권을 발간한다. 보고서에는 크게 동에 관한 문헌조사와 구술조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근현대 마을, 동의 변화상을

20) 전주문화재단에는 공식적으로 지역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기획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이 지역학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역 내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박물관이나 지방문화원의 업무와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했다.

살펴 볼 수 있다. '마을술사 사업'은 마을 조사 자료,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는 사람을 육성하여 관련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때 '마을술사'란 마을을 기록하는 자, 마을을 해설하는 자, 마을 발전을 제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전주미래유산포럼'을 개최했으며, 음악용 테이프 생산 공장을 '팔복예술공장'으로 문화재생하기 전에 공장 여공의 노동 운동사를 구술을 바탕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인 '선미촌'을 문화 재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나. 주요사업 : '전주시 마을조사'사업과 '마을술사'사업

전주문화재단은 사라져 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재생 및 마을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주시 전역에 걸쳐 '마을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지역재생 및 발전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구술사이자 해설사의 역할을 하는 '마을술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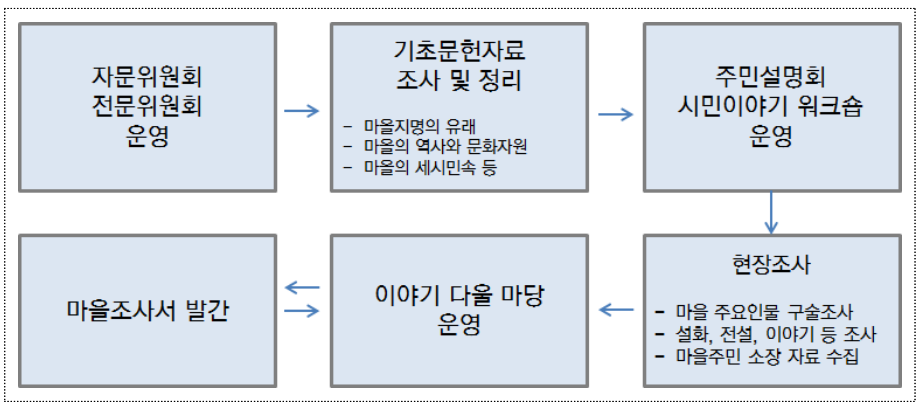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은 '동심(洞心)' 찾기를 비전으로 2015년에 사업이 시작된다.『맹자』의 항심(恒心)을 변주한 '전주 마을조사 사업'의 동심(洞心)[21] 찾기는 '마을의 마음'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입각하여 전주 마을조사사업은 ① 고유한 전주정신의 발현으로 전주시민의 정체성과 자긍

21) '동심(洞心)'이란『맹자』양혜왕(梁惠王)편에 나오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無恒産 無恒心)"를 변주한 것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찾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전주정신이 전주인에게 삶의 긍지를 주는 표상과 이데올로기로서 상위에서 작동을 한다면, 동심찾기는 전주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의 기저를 탐색하는 것이다.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다(김창주, 2016, "전주미래유산 : 기억과 사물의 변주", 제1차 전주미래유산포럼 자료집)

심의 회복, ② 지역문화의 실체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규명, ③ 지역주민의 문제법(問題法) 계발과 지역문화자원의 개발·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은 23개동 539명에 대한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으며, 4,933개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마을조사는 ①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② 기초문헌자료 조사 및 정리 → ③ 주민설명회 및 시민이야기 워크숍 개최 → ④ 현장조사 → ⑤ 이야기 다울마당 운영 → ⑥ 마을조사서 발간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시민이야기 워크숍은 해당 동의 지도를 펼쳐 놓고 시민과 함께 기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사전조사 성격에 해당하는데 이는 마을조사(기록)에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마을주민들에게 이 조사사업을 홍보하는 취지도 있다.



[그림 Ⅳ-9] 전주시 마을조사 업무과정

2) 마을술사 사업

'마을술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하에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전주의 도시 기록화 사업과 전주정신 수립을 위한 자발적 주체 발굴 및 확산 필요, 1천만 명 관광시대 맞이한 문화관광 도시 전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명소 발굴 필요, 도시재생, 새로운 뉴딜사업의 전개로 차별화된 마을 문화콘텐츠 개발 모델 필요, 마을 만들기 등 지역 만들기 사업의 확장 속에서 전주의 특성 발굴에 대한 요구

등의 배경 하에, ① 마을 정체성 찾기와 기록화의 주체 설정, ②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마을 주민의 역할 정립 및 조직화, ③ 마을술사 양성을 통한 지역개발 모델 제시(전주문화재단 2017: 12~13)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때 마을술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마을을 기록하는 것(洞心述史 : Village Archivist), 마을을 설명하는 것(洞心述士 : Village Guide), 마을을 설계하는 것(洞心術師 : Village Designer)을 뜻한다(전주문화재단, 2017:19).

[표 Ⅳ-9] 마을술사의 역할 개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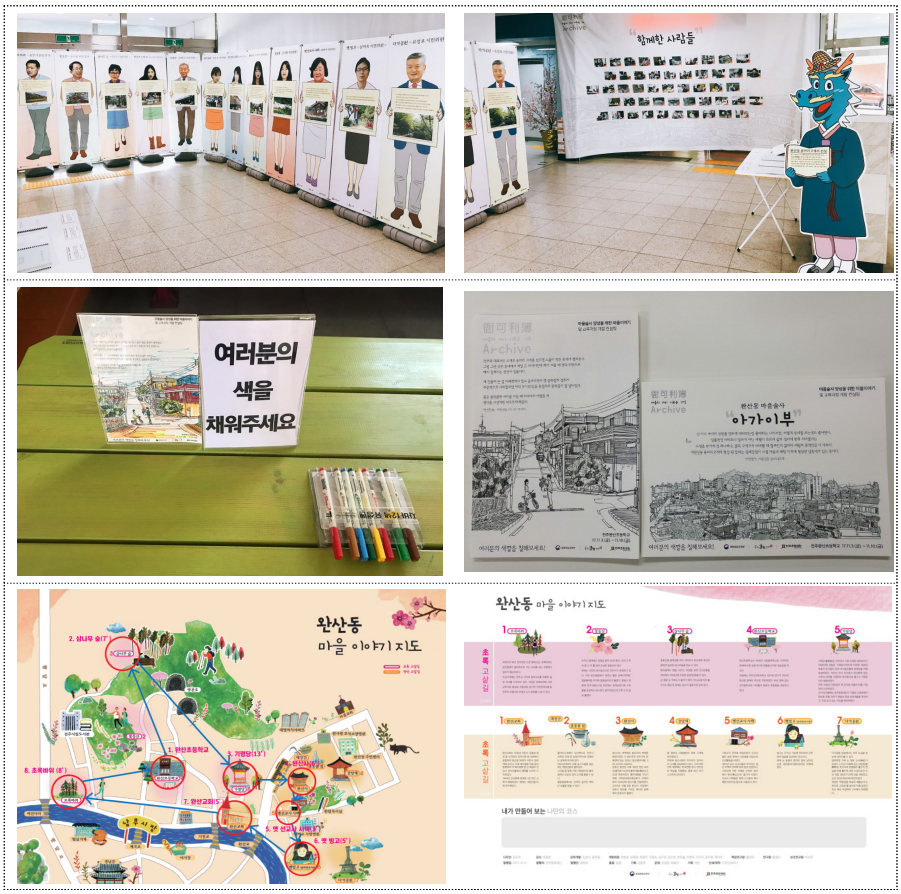
□ 마을술사 (洞心述史) : Village Archivist 마을을 기록하다	○ 마을 이야기의 조사와 정리 – 마을의 유래와 역사, 문화자원, 소소한 이야기 등을 조사 – 마을의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기록하여 미래유산으로 전승 ○ 마을 이야기 문화 공동체 운영 – 마을의 이야기를 조사 정리하는 문화 공동체(동아리) 조직 – 마을 내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주민자치센타, 문화의 집 등)
□ 마을술사 (洞心述士) : Village Guide 마을을 설명하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 –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의 역사 등을 설명 – 외부사람들에게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 –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 ○ 마을 내 방과 후 교육 – 마을 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 교육 –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유학년제 학습으로 마을 교육 진행
□ 마을술사 (洞心術師) : Village Designer 마을을 설계하다	○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 마을의 활성화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 – 마을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 참여 ○ 마을 공동체 문화 추진 –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모임 운영 – 마을 공동체 문화프로그램(골목길 축제 등) 운영

* 출처 : 전주문화재단(2017), (2017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및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보고서, p.19 내용을 연구자 정리

종합하자면, '마을술사'는 마을사람들과 외부 방문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사람이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정보의 생산자이고,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제안자로 정의할 수 있다(전주문화재단, 2017:17). 즉 마을술사 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역사·문화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기록물을 토대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미래 마을발전을 기획·실천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공동체 참여형 지역학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17년에 진행된 '마을술사 사업'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후 ① 마을이야기 분류 및 개발 방안 제시, ② 마을술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③ 마을 문제은행 개발, 마을 미니 박물관 운영, ④ 빌리지 투어 개발 및 운영, ⑤ 마을 캐릭터 개발, 마을 이야기 지도 개발, ⑥ 마을 컬러링 도안 개발, ⑦ 마을술사 활용 및 조직화 매뉴얼 개발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전주시 완산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완산동 마을조사서』를 사례로 마을의 이야기를 분류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상의 사업들을 시범운영하였다. 이들 사업 중 여타의 마을기록화나 지역학과 차별화되는 것은 마을문제은행개발, 마을 미니박물관 운영, 마을캐릭터 및 컬러링 도안, 마을이야기 지도와 같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마을문제은행 개발'은 마을이야기 분류체계에 의해 수집된 콘텐츠를 토대로 마을술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지식의 확인과 마을술사의 교육·학습역량 강화, 교육내용의 질적 평가와 확인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문제은행의 구성은 전주시 역사 문화에 대한 기본 이해, 마을술사 활동지역 시범 대상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역사 문화와 지리 자연환경 등에 대한 기본 이해도 확인, 상·중·하 난이도에 따라 편성되었다. 2017년에 완산동을 대상으로 140문제를 개발하였으며, 2018년에는 서학동(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200문제가 개발 중이다. 전주시 33개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 3,300여 문제 이상의 개발을 예상하고 있다. 둘째, '마을캐릭터 개발'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시민위원을 캐릭터화하거나 마을의 주요지점을 설명하는 도안, 마을에 전승되는 설화를 상징화하는 작업으로, 주민들 간의 친화력 향상과 마을역사 및 문화의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마을 컬러링 도안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마을풍경을 엽서크기로 도안하거나 주민 혹은 마을방문객들이 직접 색을 칠해 완성할 수 있도록 도안을 만드는 작업이다. 마을이야기 지도 제작은 시민위원이 참여하여 마을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도보·답사코스를 지도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외부 방문객들도 쉽게 활용하도록 기획되었다.



[그림 Ⅳ-10] 마을캐릭터 개발(上), 마을컬러링 도안(中), 마을이야기 지도(下) 예시

* 출처 : 전북문화재단 내부자료(2017)

완산동에 적용된 '마을미니박물관'은 에코뮤지엄(eco museum)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 내 하나의 지점을 정해 전시를 구성하였다. 이때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을 답사가 진행되었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시민위원이 마을술사로 해설을 맡아 진행한다. 전시 주제는 아카이브를 한자로 음역한 아가이부(衙可利簿) '마을의 가히 이로운 기록'이었다. 주로 교육과정에서 조사·발표한 자료를 시각화하였고, 마을 캐릭터와 마을 컬러링 도안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완산동에서 추진된 '마을술사' 사업을 전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8년에는 전주시 서학동을 중심으로 마을술

사 교과서 개발, 마을 문제은행 개발, 트레킹 코스 개발 및 운영, 마을 콘텐츠(캐릭터, 지도, 조형물 등) 개발, 동네밥상 레시피 개발, 마을술사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이 진행 중이다. 궁극적으로 마을술사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마을조사 보고서를 마을술사사업에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술사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본격적인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표 Ⅳ-10 참조).

[표 Ⅳ-10] 연차별 마을술사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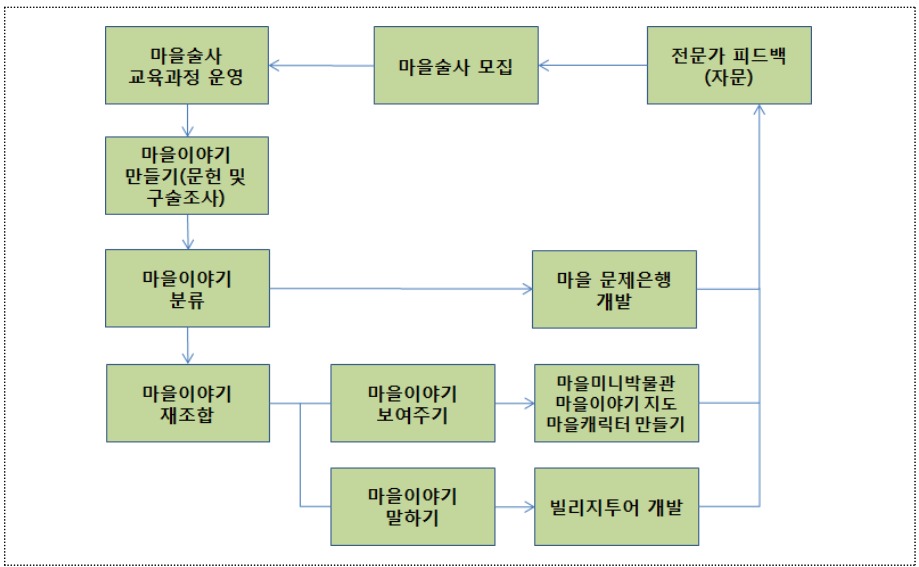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2030</th></tr>
<tr><td>전주시 마을조사</td><td colspan="4">전주시 33개동 기초 전수조사 완료</td><td></td></tr>
<tr><td>마을술사 시범운영</td><td></td><td></td><td>교육과정 개발 등</td><td></td><td rowspan="2">마을술사
확대 운영</td></tr>
<tr><td>마을술사
연계 콘텐츠 개발</td><td></td><td></td><td></td><td>마을술사
교과서
개발 등</td></tr>
<tr><td>마을술사
커뮤니티 공간조성</td><td></td><td></td><td></td><td colspan="2">舊서학파출소 공간재생 등</td></tr>
</table>

3) 전주시 마을조사사업과 마을술사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

① '미래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환기

전주시 마을조사사업과 마을술사 사업은 2016년부터 전주시가 본격화한 전주미래유산정책과 그 맥이 닿고 있다. 전주미래유산에 대한 논의는 전주한옥마을을 둘러싼 쟁점에서 출발한다.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은 보존과 해제를 두고 여러 갈등이 있었다. 1997년 보존지구가 해제되어 전면적 재개발의 위기에 직면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개발이 전면 재검토되었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오늘의 전주한옥마을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이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지역사회에서 촉발되면서 미래유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미래유산을 '문화유산'과 '전통'이 과거 어디쯤에 완벽하게 존재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되고 재해석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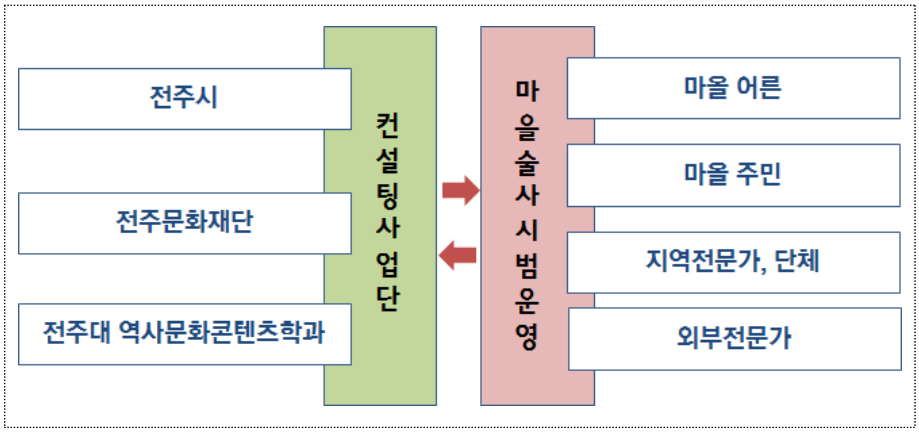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시의 지역학 사업인 전주시 마을조사사업과 마을술사 사업은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활용가치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교감과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과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 마을조사사업은 주민모임(이야기 다울마당)을 구성·운영하여 수집된 마을조사 자료의 재해석·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마을술사 사업의 경우 마을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마을이야기를 재해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환류형' 개발 구조를 만들어 미래문화유산으로서 마을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 Ⅳ-11] 전주시 마을술사 '마을이야기 환류형 개발 구조'

② 민관, 주민간의 협력형 지역학 모델 구축

전주시 마을조사사업과 마을술사는 마을주민(원로·청년), 전문가, 예술가, 청년기획자, 관내 공무원 등 행정·전문가·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공동체 참여형 지역학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마을문화자원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마을자원의 원형 보존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Ⅳ-12] 전주시 마을술사 사업의 '주민 참여'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③ 지역학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가능성 확인

마을술사 사업은 단순히 지역학 혹은 마을기록 사업을 넘어 '마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마을술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빌리지 투어'(village tour)와 '마을 미니 박물관 운영'은 완산동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민과 마을방문객(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마을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2018년에 시작한 서학동 마을술사 사업의 경우 서학동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트레킹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동네밥상 레시피[22] 및 음식콘텐츠 서비스 개발 등 마을의 고유성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마을술사 양성 참여자 모집을 준비하면서 주민대표(통장단) 및 유관기관(주민자치센터), 마을 내 주요 공동체(경로당, 학교 등)가 중심이 된 주민조직이 구축되었고, 시범사업 진행 이후 참여했던 주민과

22) 전주시는 전주시 서학동의 찬, 국, 음료 등 10종을 발굴하여 음식의 조리과정을 현대적으로 개발해 외부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음식콘텐츠 서비스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서학동 내 마을술사 커뮤니티 공간(舊 서학파출소 공간 재생)과 연계한 콘텐츠로, 이 공간에 마을술사 게스트하우스(식당·다방)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서학동 도보여행을 통합관리하며 서학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의 개발에 대한 뜻을 모으고 조직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즉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과 마을술사 사업은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전주 마을조사와 마을술사 사업의 과제

① 조직 및 인력의 확보

마을조사사업 또는 마을술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이의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들의 생각을 통일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공공(행정)과 전문가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지원을 받을 때에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술사로 참여하는 사람이나 마을주민들이 지역의 역사화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제한된 사업기간 등 제반 여건의 한계로 인해 그러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장기적·지속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특히 시민 조사원이나 마을술사의 양성 사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마을조사(기록화 사업) 및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 강화사업 발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전주문화재단, 2017).

② 제도 및 사업기반 구축

‘전주 마을조사’ 및 ‘마을술사’ 사업과 같이 공동체 중심의 지역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차원에서 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과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며, 구조화된 매뉴얼 등을 통하여 사업 관련자에 대한 임무부여, 사업의 절차와 방법, 위원의 리더십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마을조사 및 구술사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용공간의 설치·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용공간’은 마을기록·조사의 지원센터, 마을자료의 기록관(아카이브), 주민교류의 플랫폼 공간임과 동시에 방문객과의 만남, 마을투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절

소결

1.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 그리고 지역의 발전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은 1990년대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이에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지역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학술적 관점을 넘어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 발전되어 왔다.

앞의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학은 주민 스스로 그들이 보유한 가치와 지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개척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이의 활용을 통한 마을 및 사람 만들기 사업과 동일시 될 정도로 긴밀한 연계를 가진다. 따라서 일본에서 지역학은 '지역의 문화정책, 나아가 지역의 재생과 발전정책 추진의 중요한 자산이자 거름'이 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혹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총무성(總務省)의 '지역학 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 실증사업'(「域学連携」地域活力創出モデル実証事業)이 있으며, 광역·기초는 물론 마을 차원에서도 지역학과 연계하여 지역(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동네박물관(에코뮤지엄) 조성 및 마을투어 등으로 발전시켜 경제·사회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지역학 연구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일본 지역학 연구의 특징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배경	○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지역쇠퇴와 공동체성의 훼손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구분	내용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전국적 확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 이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성의 회복과 내생적 주민조직의 재편이 필요했으며,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
목적	○ 지방 또는 지역이 보유한 지혜를 주민들로부터 발굴하고 지역만들기 등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 지역의 쇠퇴와 연계한 지역 만들기와 재생 • 생애학습의 측면에서 사람 만들기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자원의 활용
주요 내용	(중앙정부) 학술적 지원 혹은 지역 재생과 관련된 연관사업 지원 (지자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지역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역학 결합 • 주민조직 중심의 마을조사 및 관련 사업 추진 • 구술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 • 동네박물관(에코뮤지엄)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마을주민 및 방문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아래로부터의 지역연구와 문화적 실천

우리나라 또한 지역발전과 지역학을 결합한 사례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사람들과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제주 마을기록화사업과 마을구술사 양성), '지역학과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한 지역과 지역문화의 이해 확산'(충북 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기록과 해설을 통한 마을의 발전 모색'(전주 '마을술사 사업')이 그것이다. 그 외 전국 각지에서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마을기록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기록한 각종 역사적 사실들이 축적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지역학은 그 과정을 통해 주민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쇠퇴하는 지역과 마을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하지만 사례의 분석 결과, 지역학 및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개선과제들이 도출된다. 첫째,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다. 지역학(마을기록) 육성과 관련 정책추진의 기반이 되는 중앙정부의 법령이 없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관계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원 확보가 쉽지 않고 단발성·일회성 사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인력의 양성에 관한 것이다. 지역의 기록과 연구는 사람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전주와 같이 마을 기록사 양

성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지역학연구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관리조직의 상근인력이 부족하고, 인력교육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정체성 확립은 지역 내 제 주체들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한다. 그리고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또한 이러한 공유의식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지역학 혹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 간의 교류와 소통, 이를 위한 기반(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사례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사례별 특징과 주요 내용

사례	배경	목적	주요내용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	• 원주민들의 노령화와 감소 • 국내외 방문객과 외지인 정착 인수의 급증. 이에 따른 '제주다움'의 소실 위기	• '제주다운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한 주민 참여형 지역학 연구 추진	• 주민 중심의 마을 구술사 양성 • 마을기록화 사업 (구술, GIS 등 다양한 분석 기법 활용)	• 주민 간 친밀성 확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미래 비전 설계 • 조직 및 예산 확보, 인력 확충,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충청북도	• 달천 유역의 쇠퇴 (인구감소) •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문화 등 지역의 고유성 훼손	• 달천과 주변 지역에 내재된 가치 발굴 및 창의적 콘텐츠 발굴	• 달천 유역의 역사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 • 지역학과 문화예술의 결합 • 지역 언론과의 연계로 지역사회 관심 유도	•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인 참여형 지역학 프로젝트 • 달천유역 지자체 간 협력 및 발전 모색 • 단발성 프로젝트로서의 사업 한계 (제도 구축 및 지원 필요)
전라북도 전주시	• 도시화로 인한 마을의 역사·문화 소실 위기 •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성 제기	• 주민 참여형 마을기록과 이를 활용한 마을발전 사업 추진	• 구술과 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마을술사' 양성 • 마을미니박물관 (에코뮤지엄) 구축 등 마을관광 사업 추진	• 민관, 주민 협력형 지역학 모델 구축 • 지역 '미래유산'의 가치 재조명 •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기반 구축 필요

제5장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

제1절

정책 방향

1. 지역쇠퇴 시대, 지역학의 필요성과 문화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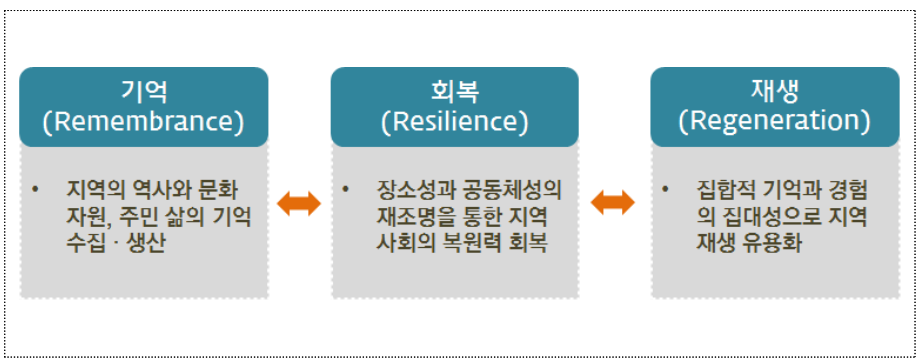
가. 대안적 지역발전의 기반이자 실효적 방법론으로서 '지역학'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화와 과잉개발(난개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쇠퇴와 소멸위기 등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도시화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경관)과 삶의 방식을 추상화·표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지방색, 장소적 특징들을 희석시켜왔다. 후기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기능쇠퇴, 산업의 재구조화(industrial restructuring)로 인해 마침내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장소는 쇠락·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장소상실(placenessless)'을 극복하고 새로운 장소의 창출을 통한 장소성의 '복원'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정부 영역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상실과 지역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지역발전이론을 검토·수용하고 다양한 계획과 정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금 지역이 처한 문제는 주어진 계획체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객관화된 데이터 알고리즘만으로 분석할 수 없다. 즉 추상적인 계획이 지역을 대변할 수 없으며, 통계자료나 데이터의 조합만으로 역동적인 지역변화의 궤적에서 인간의 창의성·감수성·의외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류태희, 2014). 따라서 통계적·계량적 분석방법이 아닌 통찰력과 통합학문(inter-discipline)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의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고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연구, 지역지리학, 로컬리티 연구 등을 포괄하는 '지역학'이 대안적 지역

발전의 기반이자 실효성 있는 방법론으로 부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① 기억(Remembrance) ② 회복(Resilience) ③ 재생(Regeneration) 등 '3R'로 정의할 수 있다. 기억(Remembrance)은 지역쇠퇴 혹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역사,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발굴·계승하고 미래로 전승함을 의미한다. 특히 삶의 방식과 문화는 사람의 기억과 체화된 행동에서 전승되므로 사망과 이주에 의해 사람이 지역 현장에서 사라질 경우 복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을 토대로 둔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 장소의 변화, 행위주체들의 장소경험, 이를 둘러싼 맥락(정책과 사건 등)에 관한 기록을 수집·생산하는데 기여(류태희, 2014:11)'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둘째, 회복(Resilience)은 '개인과 공동체 혹은 그들을 둘러싼 장소의 소실과 결핍, 표준화(획일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회복'(노영순, 2017:133)됨을 의미한다. 지역학은 지역의 장소성과 공동체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축소되고 교란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재생'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위를 함께 실행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장원봉, 2015:8). 지역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기억과 경험을 집대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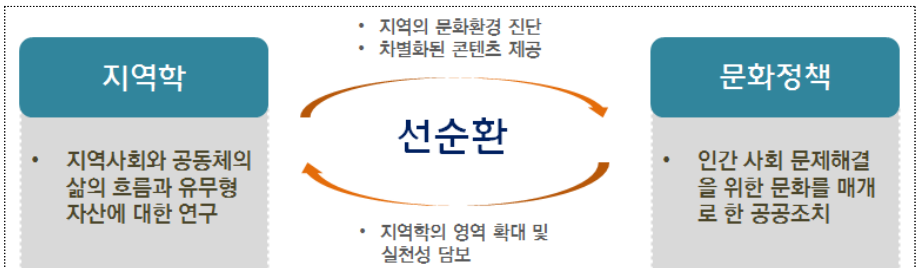


[그림 V-1] 지역쇠퇴 시대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

나. 지역학과 문화정책간의 관계

이상과 같이 지역학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기술적이고 회고적 접근, 그리고 현실 정책사업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지역학은 그 지향성과 접근방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지향성으로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과 공공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된다. '문화'는 광의적으로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지역학'은 지역에 뿌리내린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흐름, 그것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자산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면, 문화정책은 '지역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가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문화정책'을 통해 활동영역의 확장과 실천성을 담보 받을 수 있으며, 문화정책, 특히 지역문화정책은 지역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제반 문화 환경에 관한 구체적 진단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받음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역학은 문화자치, 나아가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분권의 학문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 분야로 '지역학 진흥'을 채택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변화의 직접적이고 실제적 대상인 소지역(기초자치단체와 마을) 차원에서 이러한 선순환 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림 V-2]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 관계 모형

2. 지역학과 연계한 문화정책의 과제와 주체별 역할

가. 지역학 연계 문화정책의 과제

지역학과 연계한 문화정책은 크게 ①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②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③ 지역학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은 지역학의 진흥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련 지원 법령 제·개정,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지원,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은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 조성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민 및 공동체 참여형 지역학 진흥을 위해 인력양성 및 배치, 관련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셋째, 지역학을 통한 지역문화 및 관련 정책 활동의 활성화로, 지역학 연계형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기반 비즈니스 및 이야기 산업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V-1] 지역학 연계 문화정책의 과제(안)

정책 분야	세부 정책 (안)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법·제도적 여건 개선 (지역학 진흥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 지역 '미래유산' 제도 지원과 지역학 연계 추진 • 지역학에 기반한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지역학 연계 지역문화 환경 개선	• 향토자료 활용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기관 간 협력 • 인력양성 지원 (마을아카비스트 및 구술사의 체계적 육성과 배치) • 지역학 및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거점(마을박물관) 조성 • 지역학 및 관련 정책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지역학을 통한 지역사회 및 문화 활성화	•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지도 제작 활성화 • 지역학과 문화정책 연계 마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역학과 문화정책 결합형 마을 지정 및 지원 추진

나. 관련 주체별 역할

지역학 연계 문화정책을 성공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우선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한 것으로, 현재 '지역학'과 관련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가기록원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연관되어 있으나 주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추진의 안정성·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법적 지원근거를 확보함과 동시 주무부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학 관계자 의견조사와 사례분석 결과 지역학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점은 인력 및 예산의 확보, 지역학 관련 주체들의 교류활성화와 플랫폼의 구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는 지역학 관련 공공정책(문화정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련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통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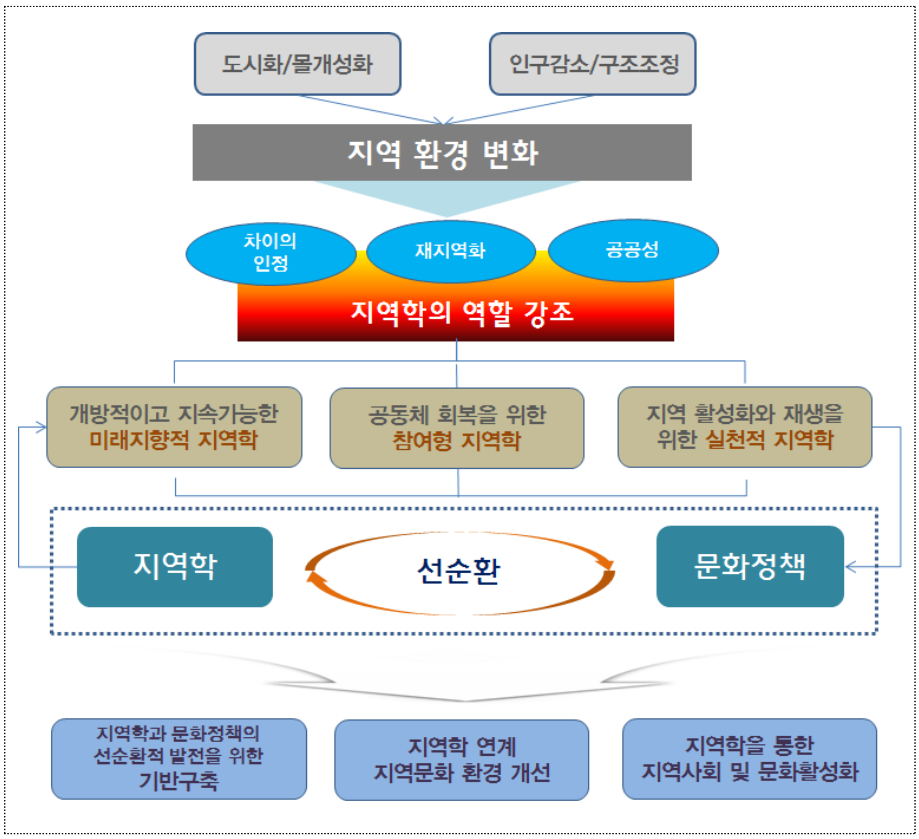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학 관련 문화정책의 기획가이자 시행자임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관내 기초자치단체간의 활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지역학 연구와 관련 정책 추진 등 협력과 연대, 공동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에 설치 혹은 지정된 지역학연구센터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지역학연구센터의 연구결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학 관련 문화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소지역(마을) 혹은 낙후지역에 대한 기록과 연구, 이와 연계된 정책 사업을 기획·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이나 지방문화원 등 기존 지역 내 문화기관에 지역학 관련 사업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인력 양성,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학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표 Ⅴ-2] 지역학 연계 문화정책 관련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과 기능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도 정비 및 정책개발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조사·통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정책 추진
광역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내 지자체간 협력과 연대, 공동사업 • 광역 지역학연구센터의 기능강화 및 연계 정책사업 개발
기초자치단체	• 소지역 혹은 낙후지역에 대한 기록과 연구, 연계 정책 사업 기획·추진 • 관 내 지역학 관련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인력양성, 유관 기관의 전문성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의 접근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 Ⅴ-3]과 같다.



[그림 Ⅴ-3]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연계 방안

제2절

정책 과제

1.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학 진흥 및 문화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유산' 제도의 지원과 지역학 연계 추진
- 문화영향평가와 지역학의 연계

가. 지역학 진흥 및 문화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필요성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학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2000년대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로 전담기관의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지역에서의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지역학에 대한 수요 또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역학 진흥과 연계 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 차원의 별도 법률 혹은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시 다수의 후보들이 지역학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역학진흥과 관련된 지방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활발한 편은 아니다. 지역학 진흥, 조직설치 및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지방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7개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시 1곳에 불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과 예산이 적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학연구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지역학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법체계 특성 상 중앙정부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역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정책방안

지역학 진흥과 관련된 법적 근거 확보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 내에 관련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 개정 모두를 검토할 수 있다.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경우,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관련 부처를 비롯한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법률 간의 위계 및 충돌지점 검토, 법률의 현실적 적용과 실효성, 정부조직의 기능재편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이유로 제정까지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박찬식(2017)은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지역학진흥위원회의 설치', '지역학 연구 단체 및 사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학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이때 종합계획(기본기획)에는 (1) 지역학 진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방안, (3) 지역학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지역학의 자원을 문화자원화 하는 방안, (5) 지역학에 대한 시민 향유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다. 지역학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학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역학연구소와 같은 관련 연구단체 및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법률 내 관련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 개정'은 지역학 진흥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Ⅳ장에서 검토한 법률은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 3개,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 2개이다. 우선 지역학이 기존의 회고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학'을 인문학에 국한시킬 수 있으며, 경관, 유형의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자칫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활동이 지역학 연구 및 관련 사업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실제 다수의 지방문화원이 이와 같은 업무는 활발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지역

학 연구기관이 지방문화원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출연 연구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기존 법령 내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의 경우, 제1조(목적)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명시되어 있고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학(연구)와 지역조사를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영역의 확장과 실천력의 담보를 모색한다면 「지역문화진흥법」 내에 지역의 제반 인문환경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지원조항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구체적인 실천 내용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 지역의 문화정책성 확립과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내 제2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표 V-3] 지역학 육성 지원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예시)

기존 법령	개정안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① 좌동 제11조의 2 (지역문화 기록, 조사 및 연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미래유산' 제도 지원과 지역학 연계 추진

1) 필요성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지자체 조례에 의한 향토유적 또는 향토문화재 외에 지역의 역사나 주민의 기억과 경험에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도시개발 등의 과정에서, 혹은 도시의 쇠퇴 상황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문화유산에 관한 보전·관리 정책 또한 기존의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미래유산'으

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지역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자산"으로 정의된다.[23]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미래유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지역학은 지나간 역사의 회고적 탐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유산'이 될 오늘날의 지역 내 유·무형 자산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승·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할 때, '지역학'과 '미래유산'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방안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확대 추진과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문체부·문화재청) 차원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구하는 한편, 미래유산의 조사, 지정·관리 및 지정취소, 보전과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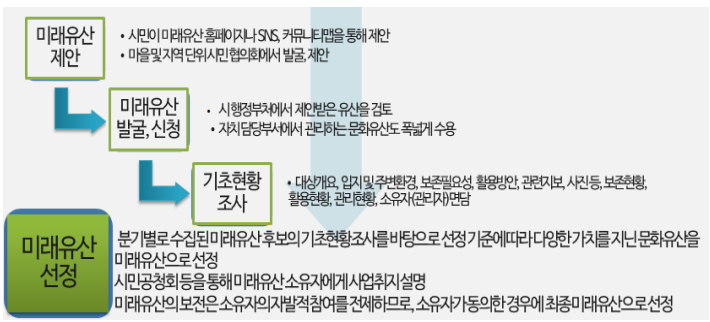
법·제도 개선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지역학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시 미래유산에 대한 내용을 법 혹은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유산(heritage) 관리의 주무 부처가 문화재청인 것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체부·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원칙은 주민과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로부터 유산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주민 주도형'이어야 하며, '지역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 혹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칫 소실될 위기에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이들의 보전과 활용에 관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중

23)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유산 누리집(futureheritage.seoul.go.kr, 2018.9.10.검색)

앙정부 차원의 미래유산 제도 및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의 '서울미래유산 지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Ⅴ-4]와 같다.

[표 Ⅴ-4]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제도 및 조직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15년 제정)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내 전담 팀(미래유산팀) 구성·운영
미래유산의 성격과 가치	**〈 미래세대에 전하는 100년 후의 보물 〉** • 시민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간직한 추억과 감성을 지닌 유산 •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유산 • 시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합의에 기초한 유산
미래유산 지정대상	**〈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 선정 〉** • 문화적 인공물 :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산출된 유형의 물건 • 문화적 행위 및 이야기 :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행위, 이야기 • 배경 : 문화적 인공물 또는 문화적 행위 이야기가 형성되는 물리적 배경
미래유산 선정 절차	

* 출처 : 서울특별시 누리집 (www.seoul.go.kr) 및 서울미래유산 누리집(futureheritage.seoul.go.kr)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 정리

다. 지역학에 기반한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1) 필요성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취지는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

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법 제5조제4항)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지역쇠퇴와 관련한 개발이나 재생의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문화적 가치의 상실이나 파괴, 지역문화 소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당위성과도 관련된다. 또한 이것은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 진흥의 목적 및 방향성에도 부합하고, 특히 쇠퇴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보존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다.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은 주민의 정체성 및 문화자원화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지역의 재생 및 사회적·문화적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임배근, 2011; 이경찬·민웅기·김남조, 2014). 그러나 개발계획이나 재생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에 대한 심층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방식과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검증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 처한 ‘문화적 가치’의 상실 또는 파괴를 방지하고,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며 유무형의 문화자산의 보호와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정책방안

이상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쇠퇴지역 또는 지역쇠퇴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개발이나 재생 사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영향평가와 지역학의 연계가 필요한데,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의 개발이나 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심층적인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연계가 그것이다.

쇠퇴지역의 개발이나 재생 과정에서는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 및 주요 문화자산의 보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 진행되는 관련 사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영향평가에서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

을 방지 또는 완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쇠퇴지역이나 그러한 지역의 개발 또는 재생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에서는 문화자산의 조사와 보존 조치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평가가 적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과정이나 평가수행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시에 해당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 '지역학'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지역 현황 및 특성 조사와 분석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 지역학 연계 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 향토자료 활용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기관간 협력
- 지역 기반 구술인력(아키비스트) 및 문화기획가 양성
- 디지털 지역학네트워크아카이브 구축
- 마을기록관(박물관) 설치·운영 지원

가. 향토자료 활용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기관 간 협력

1) 필요성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한국문화원연합회, 2017), 거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n=2,000)의 18.8%에 불과하였다. 이 문항의 5점 척도 평균도 2.8점에 불과하였다. 거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축제·문화행사·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 44.2%, '지역의 문화재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나 자료' 20.1%, '지역의 전설·옛이야기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 12.8%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가 기존에 필요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7%, 향후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7.6%에 달하여 전체의 81% 이상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역사·문화 관련 정보와 자료는 지역학 진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각 지역에 설립된 지방문화원들이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법 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2018년 8월 현재, 전국에 231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이 행하는 지역문화 사업을 8개로 제시(법 제8조)하고 있다. 그중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및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은 지역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각 지역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평균 38년 이상의 연혁을 보유(한국문화원연합회, 2017: 51)하고,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향토자료의 발굴·조사·수집·보존 및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와 간행물 발간, 이들 자료를 활용한 전시 등의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 성과는 지역의 역사콘텐츠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중요한 원천 소재가 되고 있다.

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태조사(한국문화원연합회, 2016)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문화원이 발간한 간행물은 총 9,304종, 1,155만 6,722부(1종 당 평균 1,242부)에 달한다. 지방문화원 1개소당 평균 40.8종을 발간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장서는 약 158만 부에 달하고, 이 외에도 각 지방문화원은 향토자료 및 지역문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시청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의 간행물들을 비롯하여 지역문화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은 각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실에 소장되어 공개되기도 하지만, 각 지방문화원이 처한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개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자료들은 지역학 진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원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정책방안

이의 정책방안으로 지방문화원과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의 협력 사업 중 하나는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향토자료의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역 도서관의 지원이다. 지방문화원은 보유한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외에 서비스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17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으로 시행된 향토자료 목록화 사업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7).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의 도서관이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목록화 및 서지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KORMARC) 등 자료 관리와 정보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은 도서, 계속자료, 전자자료, 지도자료, 음악·녹음자료, 시청각자료, 고서, 복합자료 등 8개 유형의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와 관련되므로,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각종 향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도 연계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의 협력을 통해서 구축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서비스하기 위한 협력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한국문화원연합회, 2017)를 보면, 주민들이 거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일반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21.0%, '해당 지역의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시설 홈페이지' 20.2%였고, '해당 지역 소재 지방문화원 또는 지방문화원 홈페이지'는 12.4%에 불과하였다. 즉,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정보에 대한 주민의 수요는 많지만,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차원의 향토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의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위의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지역

의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공유하여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향토자료의 보존을 위한 협력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2016년 7월 기준으로 발간물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자료실을 운영하는 문화원은 72.4%였고, 전시실을 갖춘 문화원은 37.0%, 향토사료전시관을 갖춘 문화원은 15.9%였다. 이 결과는 향토자료 보존을 위한 공간을 갖추지 못한 문화원이 적지 않음을 알려준다. 또한 공간을 갖춘 지방문화원 중에도 다양한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6 & 2017). 따라서 향토자료 보존에서 요구되는 시설의 한계 및 전시·수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방문화원과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등이 향토자료 보존 관련 협약을 맺고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주요 향토자료의 보존을 위해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수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 기반 구술인력(아키비스트) 및 관련 문화기획가 양성

1) 필요성

지역학과 관련 문화정책 진흥의 기초는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이다. 2000년대 이후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짐에 따라 지역학연구기관이 곳곳에 생기고 있지만 예산과 더불어 인력수급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혹은 마을 등 지역사회 변화 위기에 가장 첨예하게 노출된 소지역 단위의 일상(日常)[24]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된 조사·연구 인력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경래(2015)는 마을공

24) 곽건홍(2011)은 아카이브문화에 있어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때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를 의미한다'.(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p.3

동체에서 기록관리의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마을아키비스트'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마을아카이브와 지역연구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제주학연구센터의 '구술사' 양성, 전주문화재단의 '마을술사' 사업은 마을단위 인력양성의 현실 필요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채록된 지역의 기억과 수집된 자료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지역 내 사회·문화적 갈등 해소, 나아가 산업적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학과 문화정책 간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구술인력'은 단순히 지역의 사회적 기억[25]을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관광)기획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인력 양성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정책방안

문화기획 능력을 겸비한 지역 단위 '구술인력 양성'은 별도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 관련 대표적인 인력양성 사업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문화이모작' 사업이 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와 문화생태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적 문화기획인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에 시작되었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지역 고유의 마을 문화 매개 인력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어왔다. 모집대상은 이장, 청년회장 등 마을리더, 주민활동가·주민예술가, 귀촌·귀농자들이며, 2017년의 경우 문화이모작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은 총 100명이며, 기획실습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은 93명에 이른다(표 Ⅴ-5 참조).

25) 사회적 기억이란 '남겨진 과거'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소통되고 목적의식적으로 구축된 기억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 연구 30, p.14)

[표 V-5] 문화이모작 사업 추진 실적 (2017년)

구분	교육과정					기획실습과정
권역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소계	기획프로그램
지역주관 기관	원주 문화재단	당진 문화재단	전북문화 관광재단	울산 문화재단	4개	
수료인원	21명	22명	37명	20명	100명	93명

* 출처 : 지역문화진흥원, 2018 문화이모작 사업 계획

이상의 사업들은 명칭과 예산출처, 사업집행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 교육내용 등에서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존에 추진된 것과 같이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문화기획' 인력 양성으로 특화하고, '문화이모작' 사업은 아키비스트와 문화기획가가 결합된 마을단위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사업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은 마을 기반 문화기획가이자 아키비스트이다. 아키비스트는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마을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관리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록생산자와 아카이브·사용자간 조정자, 과거에 대한 개념과 당대 기록화 사이에서의 조정적 역할을 수행(최정은, 2011:42-43)해야 하므로, 아키비스트로서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1년간 진행되는 문화이모작 프로로그램에 고도의 전문가 양성 교육이 시행될 수는 없지만, 구술인력으로서의 기초적 교육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의 후속 사업으로, 문화이모작사업 수료생을 중심으로 마을기록화 사업과 이와 연계된 마을문화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지원 등의 사업 지원 또한 지자체와 협력·추진하여 '마을기반형 문화 일거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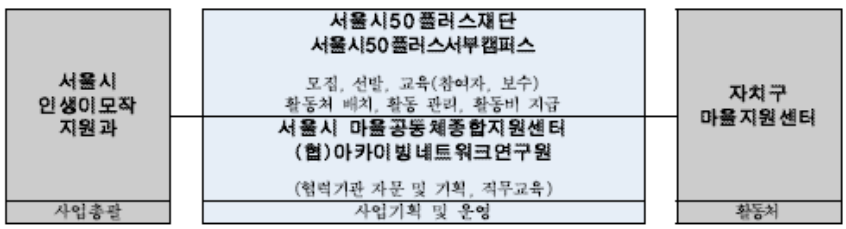
또한 신중년(50+ 세대) 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혹은 새로운 일거리로서 아키비스트 양성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사례로 살펴본 제주특별자치도 구술사 양성사업의 경우, 당초 80명 교육정원에 130명 이상이 신청했고 대다수가 5~60대 신중년층이었다. 현재 5~60대의 신중년은 자신의 능력으로 퇴직 이후 재취업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추구하므로 이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역 아키비스트 업무는 이에 적합한 직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중년 참여 지역아키비스트 양성사업은 지역쇠퇴 시대,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결합을 통한 지역 만들기와 사람 만들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주관 하에 2018년 7월부터 '50+마을기록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지방문화원 등 유관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신중년(50+ 세대)의 문화일거리 창출과 지역문화 진흥이 결합된 정책 사업의 기획·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 서울특별시 '50+마을기록가' 양성 사업

- 서울시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마을기록물을 작성·관리하는 '50+마을기록가'를 모집·지원을 추진 중임
- 50+세대의 인생경험을 통해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기록가치를 보존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 신청 대상은 만 50세부터 만 67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등록증상 대표자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30여 명의 참여자는 총 3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며, 이 중 출석률 90% 이상을 기록한 수료자에 한해 50+마을기록가 활동을 진행
- 50+일자리 모델 발굴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주민주도형 지역복지 실현이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임

〈 50+마을기록가 추진체계〉



*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8.7.15.)

다. 디지털 지역학네트워크아카이브 구축

1) 필요성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이나 지역학 관계자 의견조사에서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디지털 지역학네트워크아카이브' 구축이다. 지역의

기록과 아카이브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록정보자원의 공유와 통합이용에 대한 논의와 실행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기록 수집채널의 다각화, 수집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민-관, 민-민, 때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아카이빙 관련 도구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지만(류태희, 2014:14), 물리적인 한계로 오프라인상에서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확보는 한계가 크다. 이에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네트워크아카이브'의 구축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네트워크는 지역문화의 다양성 증진, 지역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문화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확산에 기여할 수 있고, One Source-Multi Use(OSMU) 체계 구축으로 문화산업,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연관 분야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주제, 공동체, 국가 간 다양한 '아카이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기술정보(descriptive information)를 공유하고 통합 이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중심의 아카이브와 이들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아카이브 구축이 오래 전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RINK',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경기사이버도사관의 '경기도메모리' 등 국가 및 지역의 역사정보, 자원에 관한 디지털아카이브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학 연구소 및 관련 기관 간 연계, 공동체아카이브간의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국외에 비해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V-6] 국외 지역학 관련 네트워크 아카이브 사례

사례 명	개요	핵심 영역
Europeana	• 유럽 전역의 3,000개 이상의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디지털 컬렉션 정보의 수집, 가공, 중개, 서비스 프로젝트	• 다양성과 분산성 기반의 문화정보 서비스 플랫폼 전략 전반 • 이질적 GLAM 정보 통합 운영 모델
LODAC Museum	• 일본의 학술 자원과 국가 전체 박물관 자원의 통합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	• 이질적 박물관 시스템의 박물관 자원 통합 데이터 관리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사례 명	개요	핵심 영역
	• 일본 내 114개 박물관, 미술관 자원의 수집, Linked Open Data 구축, 개방, 공유,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 외부 정보검색 사이트 및 데이터 개방 사이트와의 연계 체계 구축
Calisphere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디지털 컬렉션을 위한 지역 정보 수집 게이트웨이	• 지역 GLAM 영역의 디지털 정보 수집, 유통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 미국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미술관 통합 정보 서비스를 위한 종합목록 플랫폼	• 국가 공공 GLAM 영역의 종합 목록 구축 및 통합 정보서비스 기반
Memory BC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200여 개 리포지토리가 보전하는 기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	• 개인 및 조직이 생산한 디록, 개인문서, 사진 등 다양한 역사 정보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s Network	• 캠브리지셔 지역의 32개 그룹의 기록을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 지역 및 공동체와 관련된 건물, 사건, 인물 및 다양한 주제를 담은 문서,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등
Scotich Archive Network	• 스코틀랜드 지역 아카이브 소장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	• 역사적 보전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디지털기록 포함)
Social History Portal	• 18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사회사 및 노동사 기록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털	• 유럽 10여 개국 15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도서관 인쇄물, 멀티미디어 객체(디지털화 기록 포함)

* 출처 : 이상열·노영순(2017b),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현문수(2013), 민간·공동체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따라서 새롭게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공동체 기반 지역학아카이브들을 연계하는 '디지털 지역학네트워크아카이브'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정책방안

디지털 지역학네트워크아카이브를 신규로 구축할 경우, 구축목적에 따른 내용구성과 실행으로 성과획득은 용이하지만,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조정 및 합의, 관리체계(조직·인력 등) 구성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시행 방안으로는 '디지털 지역학네트워크아카이브' 단독의 정보화시스템 구축보다는 '지역문화 정보체계 구축'(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中 의제 06-2) 사업 기획 시 '지역학아카이브'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반면 기존 '정보화시스템' 내에 지역학 및 공동체네트워크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비용과 노력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원래의 시스템 구축 목적에 반하거나 내용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기존의 역사·문화 관련 정보화시스템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포털'(舊 한민족정보마당, www.kculture.or.kr)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사문화포털 컬처링(culturing.kr)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포털'(www.culture.go.kr) 등이 있다.

[표 V-7] 국내 문화 관련 공공정보화시스템 사례

사례 명	내용	누리집
전통문화포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사회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전통문화 관련 DB를 통합한 정보시스템 •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외 한민족 문화자원의 발굴·확산을 통한 우수한 대한민국 문화원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제고	
역사문화포털 컬처링 (한국콘텐츠진흥원)	• 역사, 문화, 인문 등 스토리텔링 소재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창작자를 위한 역사문화포털 구축 • 2017년 현재 총 12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약 147만 건의 디지털 자료 제공	
문화포털 (문화체육관광부)	• 각종 문화행사와 지식, 정책과 소식을 전달하는 공공 문화포털 • 역사·문화·인문 등 지역학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화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출처 : 해당 누리집 발췌 (2018.9.11. 최종검색)

라. 마을기록관 설치·운영 지원

1) 필요성

마을과 같은 소지역 단위의 지역학 진흥과 관련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 관련 자료의 관리·전시, 지역주민과 구술인력(아키비스트) 또는 지역주민 간의 소통,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제주도와 전주시의 사례에서도 마을 단위의 지역학 거점 확보가 중요한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남(2008)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 작은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간을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라고 정의한다. 이때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마을도서관·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마을역사관·마을치유센터·마을창업센터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마을 내 '복합문화공간' 또한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마을기록관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마을사 및 생활사 등의 자료를 아카이빙 하는 공간이자, 마을의 역사와 주민공동체의 생활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공유하며 이해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마을기록관은 대안적 마을공동체를 건설하는 마을운동의 구심점이자 인문적 삶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이영남, *ibid*:246-247)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 진흥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마을기록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마을 차원에서 아카이빙을 비롯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을별로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폐·공가나 폐교 등과 같은 공공유휴시설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마을기록관으로 적극 활용하여 마을의 기록문화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참고] 우리나라 마을기록관 사례

1.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의 마을박물관

- 이화동의 마을박물관은 쇳대박물관이 2012년에 서울시와 종로구의 지원을 받아 이화동 내에 소규모 마을박물관들을 조성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쇳대박물관과 쇳대박물관 2층의 최가철물점을 제외한 총 5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됨.
- 이화동 마을박물관: 이화동 주민 소장의 사진 자료 및 생활도구, 이화동에 관한 추억이 담긴 영상물, 주민 인터뷰 자료 등 전시
- 주민 26명을 대상으로 구술 채록한 영상을 시대별 이야기로 재분류하여 전시
- 마을 사진첩을 주제로 1962년 이화동에서 태어난 주민들이 소장한 사진 전시
- 풀무아치 공방: 금속공예를 주제로 공예가의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모루, 정, 대패 등을 전시
- 배우개(부엌 박물관): 부엌을 중심으로 과거에 사용된 석쇠, 장(醬)단지, 여러 부엌용품을 전시.
- 갤러리 노박: 전시 및 파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이며 개인 · 단체에 대여 가능
- 개뿔: 이화동 마을 초기에 조성된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이화동의 주택 역사와 구조 및 형태를 알 수 있는 건물 사진, 도면, 스케치, 와인 오프너 등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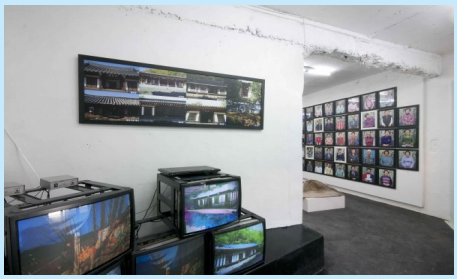
〈 이화동 마을박물관 안내지도 〉

*자료: 이화동 마을박물관 누리집(www.ewhadong.com).

2. 경상북도 영천시 별별미술마을의 우리동네 박물관

- 영천시는 2011년에 화산면 가상리, 화산리, 귀호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26]인 '신(新)몽유도원도-다섯 갈래 행복길'을 추진하여 5개의 집성촌, 전통문화유산과 근대 생활유적, 시안미술관 등 마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미술마을을 조성하였음.
- 세부 시설로 조성된 우리동네 박물관은 구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브형 마을사박물관(66㎡ 규모)이며, 다섯 갈래 길(걷는길, 바람길, 스무골길, 귀호마을길, 도화원길)로 이루어진 걷는 길의 루트에 위치함.
- 폐가였던 마을회관을 안전진단 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였고 박남희, 장주원 작가가 박물관 콘텐츠와 전시연출을 담당
- 별별미술마을의 우리동네 박물관은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서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됨.

- 마을 주민의 60년 전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 마을풍경 등의 사진, 주민이 사용하던 옛 농기구 및 생활용품, 시골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전시



〈 별별마을 우리동네박물관 전시모습 〉

*자료: 별별마을 누리집(bbmisulmaeul.yc.go.kr)

〈사례 출처 : 이상열(2017), 익산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연구, 익산시 p.108-112 내용을 연구자 정리〉

2) 정책방안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소지역 단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수는 6,488개에 이른다. 그 외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소지역 단위 생활문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2019년부터 생활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활문화 기반시설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될 것이다. 또한 전국의 228개 지방문화원 또한 중요한 생활문화시설이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각종 기록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기록관'을 별도 사업으로 설치·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시설 설치와 더불어 앞에서 제시한 마을 구술인력 양성 및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기록관은 비단 마을기록 수집과 아카이빙 기능만이 아닌 복합문화시설

26)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에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작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아름다운 맵이 주관하고 있음(마을미술프로젝트 누리집 www.maeulmisul.org).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도입될 수 있는 마을기록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 마을기록과 자료의 아카이빙 기능 ② 주민,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기능 ③ 주민공동체 사랑방 기능 ④ 마을 탐방의 거점 기능 등이 있다.

[표 V-8] 마을기록관의 주요 기능

분야	기능	내용
아카이빙	• 마을사 및 생활사 자료 대상 아카이빙과 연구	• 마을아카이빙은 수집대상 및 전략에서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역사, 자연, 공동체문화, 가정 등)를 모두 포함 • 주민 자율적으로 마을 및 개인 소장 사진, 마을문서(산신제 문서, 마을사 기록문서 등), 동영상 및 구술자료, 기타 각 마을 관련 기록물 및 박물류 등을 수집 및 아카이빙 • 구술인력 및 전문가들의 마을연구 활동공간 기능
	• 주민, 구술사, 마을 해설사의 자율적 생활자료 수집	• 마을의 각 주체들이 공동체와 장소에 대한 기억, 주민과 공동체의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
교육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에 활용하고,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우리마을전시회 등 마을 단위의 전시회 개최 및 마을축제나 서동축제 등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합동 전시회 개최
유대/친목	• 마을공동체 사랑방	•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마을공동체의 사랑방 및 쉼터 기능 • 마을모임 공간으로 활용
관광	• 마을탐방 거점	• 마을 탐방의 거점으로, 방문객들 대상 각종 정보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마을 방문객과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

3. 지역학을 통한 지역사회 및 문화 활성화

- 지역학과 연계한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 제작 활성화
- 지역학 기반 마을 단위 에코뮤지엄(Eco-Museum) 조성
- 지역학과 문화정책 결합형 '마을'조성 및 관련 사업 지원

가. 지역학과 연계한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 제작 활성화

1) 필요성

지역쇠퇴와 같은 각종 지역문화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공동체지도 만들기'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체지도 만들기'는 '참여형 지도만들기'(Participatory Mapping) 또는 '지역사회 지도만들기'(Community based Mapping)라고도 하는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공유해 지역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승욱, 2013: 2). 특히 공동체가 참여하는 '문화지도 만들기'(Cultural Mapping)는 공동체의 역량과 자원을 확인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며(A Partnership between 2010 Legacies now &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2010), 지역 문화자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들이 발전시켜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이 이루기 위한 최초의 단계라 할 수 있다(박정은, 2008).

'문화지도 만들기'는 공동체가 직접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자원을 조사·발굴·지도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역학과 문화정책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지역문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문화지도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 작업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다(박성용, 2001:5).

따라서 지역학과 문화정책이 결합된 '주민참여형 문화지도'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정책 사업 및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혹은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지도' 제작에 필요한 예산·컨설팅을 지원하는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 사업을 기획·추진을 검토한다. 지원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인구감소와 기능쇠퇴가 현저한 낙후지역(예. 성장촉진지역과 도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역재생과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과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등 지역문화진흥 지원 사업 및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등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문화지도' 제작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지

역 차원에서 문화지도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의 기획·제작이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지도'의 제작 과정과 필수요건을 담은 툴킷(TOOLKIT)을 제작·배포하여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지도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Cultural Mapping Tooikit('Creative Network of Canada' 제작)을 제작·배포하여 지역 차원의 문화지도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캐나다 Creative Network of Canada의 'Cultural Mapping Toolkit'

- 캐나다의 Creative Network of Canada는 캐나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이며, 2002년에 설립되었음. 특히 문화정책과 관련된 업무지원이 특화되어 있는데, 'Cultural Planning Tookit', 'Cultural Mapping Toolkit', 'Public Art Toolkit' 등 지역의 문화정책 관련 기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Cultural Mapping Toolkit은 인벤토리 작성부터 그리기 및 지도 활용까지 전체 매핑 프로세스를 안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Toolkit에서 제시한 지도제작 프로세스는 세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시행에 도움이 되는 예제, 점검표 또는 워크시트가 첨부되어 있음.

* 출처 : Creative Network of Canada 홈페이지(www.creativecity.ca, 2018.10.2. 최종검색)

나. 지역학 기반 마을 단위 현장박물관(Eco-Museum) 조성

1) 필요성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일본과 전주의 경우,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학 및 공동체아카이브의 결과물을 토대로 마을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주민 공동체의 화합과 함께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활용은 지역사회의 변화, 특히 쇠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생으로 도모하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현장박물관 혹은 에코뮤지엄은 지역학과 문화정책, 나아가 관광산업이 결합된 마을재생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류정아·김현경(2015)은 현장박물관을 "장소(지역), 유·무형의 자원, 사람을 주요 요소로 하는 박물관"으로 정의하고, 그 목표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자원의 가치에 대한 공유와 지역발전에 지역주민을 주체적으로 참여"는데 두고 있다.

현장박물관은 '야외박물관', '거리박물관', '오픈에어뮤지엄', '에코뮤지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유럽오픈에어뮤지엄협회(The Association of European Open Air Museums: AEOM)는 오픈에어뮤지엄을 "박물관으로 한정된 지역의 야외에 하나의 총제로서 제시된 건물, 생활과 경제 패턴을 설명하는 수집품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정의하고, 비영리로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최병식, 2010:213). 현장박물관 개념의 원천이 된 '에코뮤지엄'은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등장한 '에코뮈제(Écomusée)'의 영어 번역이며, 1971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9차 총회에서 사용되면서 개념이 점차 구체화되었고, 스웨덴의 스칸센 지역-생활사 복원운동의 전시기법으로 사용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사)지역사회연구원 경기창작센터, 2010:119).

결론적으로 현장박물관은 주민들이 지역 문화자산과 공동체성의 가치를 스스로 발굴·공유하고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며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결합형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현장박물관 사례 : 경기도의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 경기만에코뮤지엄은 경기만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해양생태자원 및 지역의 생활사를 보존·재생하고 예술로 승화하고 스토리텔링한 체험 현장 및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생태관광, 예술관광, 역사문화관광을 포함하여 추진하며, 역사문화관광의 경우 다크투어리즘 개념을 포함하여 추진
- 위성박물관에 해당하는 작은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하여 핵심시설인 경기창작센터와 안산권 8개, 화성권 7개, 시흥권 5개, 총 20개에 달하는 작은에코뮤지엄이 연계되어 하나의 경기만에코뮤지엄을 형성함.
- 경기만에코뮤지엄 누리집(ecomuseum.kr)에서는 다음지도(map.daum.net)와 연동하여 각 작은박물관 내에 위치한 자원들에 대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

- 또한 권역별 작은에코뮤지엄 개념과 함께 '산업과 생산', '생명 · 평화운동', '사람들', '역사와 문화', '여행길', '자연유산', '축제', '기타'로 나누어 테마별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하여 특성화하고 있음.
-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풍경, 유적, 시설, 축제 등)을 선정하고, 제부도 예술섬프로젝트처럼 작은 에코뮤지엄별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
- '역사와 문화' 테마 에코뮤지엄은 '선사', '고려 · 조선', '근현대', '구비', '민속문화', '문학'의 6개 테마로 나누어 각 테마와 관련된 자원이 연계되도록 구상
- 경기만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에서는 신규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자원의 활용을 지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유휴시설의 리모델링과 함께 컨테이너를 활용한 선감역사박물관, 매향리스튜디오처럼 소규모 신규 시설 조성을 병행하고 있음.

〈 경기만 에코뮤지엄 현장 〉

〈사례 출처 : 이상열(2017), 익산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연구, 익산시 p.60 내용을 연구자 정리〉

2) 정책방안

현장박물관은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장박물관 조성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 '관광두레' 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가 대표적인 마을 중심의 주민 참여형 관광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지역의 자산 발굴 및 보전, 기록화 등 '지역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현장박물관'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관련 법령(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의 개정[27]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현장박물관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7) 류정아·김현경(2015)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내 박물관 정의 및 범위 중 제2종 박물관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집 대신 새로운 유형의 제3종 박물관을 신설하여 현장, 유적, 도시, 마을박물관 등을 포함시키고 등록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류정아·김현경, 2015, 현장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다. 지역학–문화정책 결합형 '마을' 조성 및 관련 사업 지원

1) 필요성

앞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은 그 하나하나 중요한 공공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분리된 추진으로는 효과 획득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역, 미시적으로는 마을이라는 단일한 공간단위에서 행해지며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인력은 인적인 주체(Humanware)로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자산을 기록·관리하며, 마을기록관은 인적 자산과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물리적 기반(Hardware)이 되고 현장박물관 운영은 보전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운영원리(Software)가 된다. 디지털네트워크아카이브는 지역 혹은 마을 간의 연결하여 상호 소통을 증진하는 플랫폼이며, 법·제도정비 및 미래유산제도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역학-문화정책 연계형 생태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의 중요한 그릇이 되는 지역, 특히 마을에 대한 패키지형 육성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역학-문화정책 결합형 '마을' 조성 및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 지정·육성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추진 중인 '기록사랑마을' 지정 제도가 있다. '기록사랑마을'이란 마을단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록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마을이다.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의 관리 및 보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시설조성, 보존관리 및 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28]. 2018년 9월 현재 지정된 마을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함백역을 비롯하여 총 9개이다(표 Ⅴ-9 참조).

---

28)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발췌(2018.9.11. 검색)

[표 V-9]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 제1호 기록사랑마을('08.11) 〉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함백역	• 석탄채굴 중단으로 철거된 역사를 주민들이 모금하여 부지 매입 및 역사 복원
〈 제2호 기록사랑마을('09.09) 〉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마을	• 한국전쟁과 수해를 겪으면서 수도권 신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파주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전 등을 통해 민간기록물 발굴
〈 제3호 기록사랑마을('10.11)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마을	• 140여년(1780~1922)간의 호적중초(마을 생활상 복원 기능 기록) 및 절목, 내 고장 역사 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현대 기록물 발굴
〈 제4호 기록사랑마을('11.11)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 임야원도(1911년), 호적단자(200여년전), 호적표, 세덕사(사당) 관련 기록물 및 각종 유물류 등 1,200여점 보유
〈 제5호 기록사랑마을('12.12.) 〉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	• 마을 내 소재한 주요 전통가옥 내 1900년대 초기 고문서 및 추수대장, 영농일기, 편지, 선거관련 기록물 등 500여점 보유
〈 제6호 기록사랑마을('13.06) 〉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농기구, 생활도구 등 700여점 보유
〈 제7호 기록사랑마을('14.10) 〉 • 경남 창원시 진해군 중앙동 군항마을	• 진해 근대사 사진류, 해군관련 인쇄물 및 기념품, 진해 생활역사물류 보유
〈 제8호 기록사랑마을('16.06) 〉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마을	• 세계에서 유일한 DMZ내 민간인 마을로써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전 토기, 농기구, 사진 등 보유
〈 제9호 기록사랑마을('16.11) 〉 •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1리 신도마을	• 민간의 새마을운동 관련기록물(기증받은 각종 사진과 동영상 및 기록물) 전시 및 관리

* 출처 :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발췌(2018.9.11. 최종 검색)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사업은 마을기록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마을기록과 이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록과 연구 중심의 지역학, 활용과 진흥 중심의 문화정책이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을' 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요구된다.

2) 정책방안

'지역학-문화정책 결합형 마을조성 사업'은 지역학 및 마을기록, 시설조성, 활성화프로그램에 인력양성 및 조직운영까지 결합된 패키지형 사업으로 기획되

어야 한다. 지역학 및 마을기록은 지역의 문화자산 및 주민의 기억을 수집·관리 계획 수립과 더불어 구술인력(아키비스트) 혹은 해설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이 포함된다. 시설조성의 경우 마을기록관 설치와 현장박물관(eco-museum) 조성에 관한 것으로, 유휴 공간 혹은 기존 시설의 활용계획, 주요 기능(전시, 교육, 기타 공공서비스 등) 및 관리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활성화 프로그램의 핵심은 현장박물관을 활용한 주민·방문객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 제작 등이 있으며, 마을 운영은 기존 마을조직과 함께 마을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활용을 적극 도입한다.

정책 추진 방안은 현재 문화특화지역 사업의 일환을 추진되고 있는 '문화마을' 지원 사업을 지역학-문화정책 결합형 마을조성 사업으로 특성화하고, 현재 3년간의 예산 지원을 5년간으로 확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마을은 문화적 가치는 높으나 인구감소·노령화에 의해 쇠퇴 위기에 있는 낙후 지역을 1차적 지원 대상으로 검토한다.

[표 V-10] 지역학-문화정책 결합형 마을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예시)

구분	주요 내용
지역학 및 마을기록	• 마을기록 및 연구사업 • 구술인력(해설인력) 모집 및 교육
시설조성	• 마을기록관 설치 • 현장박물관(eco-museum) 조성
활성화 프로그램	• 현장박물관을 활용한 주민·방문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참여형 문화지도 제작·활용
운영	• 사회경제조직(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 설립 및 활용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예산지원은 물론, 마을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 마을간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환경조성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학-문화정책이 선순환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및 자료

강형기(2010), 지역창생학, 생각의나무

경기창작센터(2016), 경기만 날개를 펴다-경기만 에코뮤지엄 기본구상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2013～2017)

교육부(2014),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8-2022)

교육부(2017),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17~2021)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곽건홍(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권영재(2017), 장소기억기반 공간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3), 219-224

김경근 외 (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선희 외(2016),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국토연구원

김양식(2017), 지역과의 아름다운 동행-청주학 이야기, 도서출판 해남

김영일(2012),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OUGHTOPIA 27(1), 185-222

김영철(2012a), 복지 담론의 규범적 조건으로서의 공동체 속성 - 'the social'과 'the common'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1(2), 7-21

김영철(2012b), 지역은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제2회 한국지역학포럼 자료집, 49-57

김창주(2016), 전주미래유산 : 기억과 사물의 변주, 제1차 전주미래유산포럼 자료집

노영순(2014),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노영순(20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2017),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류정아 · 김현경(2015), 현장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류태희(2014), 도시아카이브 시론 : 로컬리티 기록화와 아카이브, 국토연구원,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7. 도시아카이브 :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장소의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 9-17

마강래(2017),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 길이다', 개마고원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문화체육관광부(2017),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8 문화영향평가 심층평가 평가지침

박규택(2009),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107-143

박성용(2001), 문화지도 : 자료활용 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제7집 제1호, 3-28

박소연·오덕성(2015), 쇠퇴지역의 유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 대전광역시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4984-4991

박재환(2013), 지역의 문화 지역의 정신, 제3차 한국지역학포럼 자료집

박정은(2008),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문화지도 작성과 활용방안, 국토정책 Brief, 제195호

박찬식(2017), 지역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칭)지역학진흥법,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백선혜(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설문원(2012a),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설문원(2012b),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손명철(2017), 한국 지역지리학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653-664

송인호(2012), 서울학연구의 범주와 시야, 제2회 한국지역학포럼 자료집, 15-34

여진원·장우권(2013),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15-335

여진원·장우권(2016), 도시기록화 사례연구-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387-416

오재환(2011), 부산학, 지역 정체성 재발견과 미래 발전의 플랫폼, BDI 포커스 No.111, 부산발전연구원

유우익(2004), 국토지지연구팀 초청 전문가특강-국토계획을 위한 지역지리연구 방법론, 월간 국토 2004년 6월호(통권 272호), 국토연구원

유학열(2017), 일본의 한계망을 정책 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7.12.20.)

이경래(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이경찬.민웅기,김남조(201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방도시 재생방안-태안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5권 제5호, 67-91.

이상열,(2017), 익산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연구, 익산시

이상열·노영순(2017a),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상열·노영순(2017b),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순자 외(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이영남(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이원종 외(2015), 지역발전정책론 :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이재봉 외(2009), 로컬리티 인문학,「로컬리티 인문학」, No.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임배근(2011), 역사문화기반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0권, 193-219

장원봉(2015),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국토 409, 5-11

전주문화재단(2017), (2017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정남영(2015),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인문학(14), 89-122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지웅・이성웅・정득진・고순철(2000),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제주학연구센터(2016a),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 계획

제주학연구센터(2016b), 2016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2017), 2017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조광호(2017),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2011), '관광'으로 읽는 홋카이도 : 관광산업과 문화정치, SNU일본연구총서 0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지역문화진흥원, 2018 문화이모작 사업 계획

지역사회연구원 경기창작센터(2016), 경기만 날개를 펴다-경기만 에코뮤지엄 기본구상

차미숙(2015), 미래 국토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525(2015.7.27.), 국토연구원

천득염(2017), 지역문화학의 의미와 과제, 지역과 문화 Vol.4 No.3, 한국지역문화학회

최병식(2010), 뉴뮤지엄의 탄생, 동문선

최정은(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 연구 30, 3-55

최재헌(2005), 세계화 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 의미 고찰, 대한지리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9-160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2016.12.8.)

하용삼·문재원(2011), 공공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 공적 영역으로서 주민도서관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66, 421-451

한국문화원연합회(2016), 2016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한승욱(2013), 도시문제 해결의 강력한 도구, 마을지도(Community Mapping), BDI 정책포커스(200), 1-12

현문수(2013), 공동체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127-150

황홍섭(2017), 지역개념을 활용한 지역화 학습방안, 사회과교육 56(4), 17-38

2. 국외 문헌 및 자료

마루타 하지메(2011), '장소'론-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심산출판사

Anderson, J.(2010),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 Places and Traces, Routledge; 이영민·이종희 譯, 2011, 문화·장소·흔적 :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한울아카데미

KIM Doo-Chul and BU Hye-Jin(2009): "Coping with Depopulation and Demographic Ageing in Rural Japan: From Government to Local Governance", Journal for Geography, University of Maribor, 4-1, pp.77-88

Rubenstain, J M(2011), The Cultural Landscape : An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Prentice Hall;정수열 외 譯(2012), 현대인문지리학, 스그마프레스

Markusen, A .& Gadwa, A(2010), Creative Place Making, Markusen Economic Research Services Metris Arts Consulting.

京都造形芸術大學(2010),「地域學への招待(改訂新版)」, 東京: 角川學芸出版.

季刊東北学編輯部, 2006, 特集によせて, 東北学, 6.

對馬市(2014), 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畫

對馬市(2017), 平成28年度 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事業 事業成果報告書.

森 賢三(2009),「地域再生の處方箋-スピリチュアル地域學-」, 東京: 日本文芸社.

森川稔 編(2011),「地域再生 滋賀の挑戦ーエコな暮らし·コミュニティ再生·人材育成」, 東京: 新評論.

西村千尋・山田千香子・吉居秀樹(2014), 「地域学」の内容とその学びに関する一考察, 長崎県立大学経済学部論集, 第48巻 第1号.

松永 桂子(2015), ロ-カル志向の時代 動き方,産業,經濟を考えるヒント, 이혁재 옮

김,「로컬 지향의 시대 : 마을이 우리를 구한다」,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増田 寛也(2014),「地方消滅」, 김정환 옮김,「지방소멸」, 서울: 와이즈베리.

総務省(2014), 平成２６年行政事業レビューシート.

総務省過疎対策室2018）：平成28年度版過疎対策の現況 第1号.

萩市(2003), 萩まちじゅう博物館構想

樋口 真己(2012), 地域づくりにおける「学び」と「参加」の関係性についての研究
－地域学の視点から,「西南女学院大学紀要」Vol.16.

ABSTRACT

A Study on Regional Studies and Cultural Policies in Response to Regional Decline.

The cities and regions in the 21st century are facing the critical situation caused by inequality and natural/cultural destruction of environment.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urbanization are unequally distributed,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unequal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service, and the gentrification exclude many people and groups in regions, which will increase the instability of community. Moreover, the demographic changes in the state and regions such as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deterioration and recession of urban environment, outflow of economic/industrial functions, and decrease of jobs would threaten 'regions' in the aspect different from the past.

Regarding the 'recession' and 'regeneration' of regions, the systematic discovery/preservation of regional cultural resources, and the systematic record,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radition, history, culture, and residents' lives would be very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interest in regional studies calling the records/researches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regions is increasing. As studies researching regions, the regional studies lexically calls the 'studies comprehensively researching the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of a certain region'. Recently, however, exceeding the academic approach of ‘record’ and ‘research’, more practical institutional approaches of regional studies are emphasized.

However, in spite of the increased interest in the functions and utilization of regional studies, the approaches of cultural policies are insufficient. Even though there are laws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regions, they focus on the tangible/intangible cultural

activities or are limited to the preserv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nd do not even include the contents related to regional studies. Also, even though the local governments gradually establish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reg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groups for regional studies are founded, still, th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s and the improvement of conditions in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is not sufficient enough. Therefore, there should be policy researches on the roles and promotion of regional studies for the systematic discovery/preservation of regional cultural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regional culture, as a part of coping with the crisis of recession, shrinkage, and extinction of regions, reviewing the current regional cultural policies, and also establishing the long-term direction of regional cultural polic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and possibility of 'regional studies' and also to draw the direction and tasks of relevant policies for the systematic record and utilization of regional history and culture,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s a part of cultural policies for coping with the recession, shrinkage, and extinction of reg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of environment.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socio-spatial change aspect of regions such as recession, shrinkage, and extinction. Second, to cope with such socio-spatial change aspect, this study establishes the role and functions suitable for the current era and value of 'regional studies' record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aspect of regional culture and community. Third, this study aims to draw the direction and tasks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gional cultural resources and the improvement of cultural competencies of regions, in the connection with regional studies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cultural policies.

부록

No.			

지역학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책연구 과제로「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및 지역학의 역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학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개발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KCTI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의처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담 당 자 : 노영순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열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및 직위	
휴대전화 번호			
주요 활동 분야			

1. 주요 활동 지역 및 분야

문 1-1) 귀 기관·단체의 일반현황에 대해 표시하거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명	( )	**설립(설치) 연도**	년 월 일
설립(설치) 형태	① 지자체 출연기관 (혹은 출연기관 산하 조직) ② 대학교 부설 기관 ③ 순수민간기관 ④ 임시조직(프로젝트) ⑤ 기타 ( )	**출연·출자금**	① 있음 (백만 원) ② 없음
재원 조달 방법	① 정부 혹은 지자체 보조금 ② 정부지원 학술지원금 (BK, HK 등) ③ 민간 후원금 ④ 기타 ( )	**인력**	총 _____명 ① 정규직 (명) ② 임시직 (명) ③ 겸직* (명) (예. 교수이면서 연구원)

문 1-2) 귀 기관·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자체 명 :)

②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자체 명 :)

③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모두 (지자체 명 :)

문 1-3) 귀 기관·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문 1-4) 귀 기관·단체가 2018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명 ( )	■ 사업 내용 :
	■ 사업예산 : 총액 ( ) - 자체 예산 ( ) - 외부 예산 ( )
	■ 사업지원기관 ( )
사업 명 ( )	■ 사업 내용 :
	■ 사업예산 : 총액 ( ) - 자체 예산 ( ) - 외부 예산 ( )
	■ 사업지원기관 ( )
사업 명 ( )	■ 사업 내용 :
	■ 사업예산 : 총액 ( ) - 자체 예산 ( ) - 외부 예산 ( )
	■ 사업지원기관 ( )

※ 추가 필요시 표를 복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사업계획 관련 문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2. 지역학의 대상 및 공간적 범주

문 2-1) 현재 '지역학'의 추진 방향에 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학의 추진 현황												
	중요	<---------				동등			--------->		중요	
탐구적, 문제 지향적	5	4	3	2	1	0	1	2	3	4	5	기술적, 회고적
주민(공동체) 참여 지향	5	4	3	2	1	0	1	2	3	4	5	연구자 (전문가)중심
학문적	5	4	3	2	1	0	1	2	3	4	5	실용적(정책적)
대지역 (광역지역, 문화권) 중심	5	4	3	2	1	0	1	2	3	4	5	소지역 (기초지역, 마을) 중심

□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주관식)

○

문 2-2)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중요	<---------				동등			--------->		중요	
탐구적, 문제 지향적	5	4	3	2	1	0	1	2	3	4	5	기술적, 회고적
주민(공동체) 참여 지향	5	4	3	2	1	0	1	2	3	4	5	연구자 (전문가)중심
학문적	5	4	3	2	1	0	1	2	3	4	5	실용적(정책적)
대지역 (광역지역, 문화권) 중심	5	4	3	2	1	0	1	2	3	4	5	소지역 (기초지역, 마을) 중심

□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주관식)

○

문 2-3) 향후 '지역학'이 가져야할 핵심적인 연구 혹은 활동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주관식)

○

□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주관식)

○

3. 지역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문 3-1) 현재 지역학 진흥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이다.
⑤ 매우 불만족이다.

□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문 3-2) 향후 지역학 진흥에 있어 정부기관별 역할의 중요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음	<--	보통	-->	높음
① 교육부	①	②	③	④	⑤
② 문화체육관광부	①	②	③	④	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⑤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문 3-3) 향후 지역학 진흥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 중요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음	<--	보통	-->	높음
① 재정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전문 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③ 국가 및 지자체 정책사업(예. 도시재생뉴딜 등)과 지역학간의 연계사업 발굴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④ 지역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	①	②	③	④	⑤
⑤ 지역학진흥기관 설립 (혹은 지역학 센터연합조직 설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위의 보기 외 지역학 진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 3-4)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 및 기능쇠퇴로 인한 '지역쇠퇴' 혹은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학'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주관식)

○

문 3-5) 문 4-4)에서 응답한 내용과 관련한 지역학 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

■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노 영 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 상 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8년 10월

발 행 일 2018년 10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 978-89-6035-722-8 93300